

2 0 2 5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정 기 총 회

2025.2.21. 전주공동체라디오 전주FM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5 정기총회 진행 일지

2025 총회준비위원회

2025년 1월 17일(금) 오후 7시,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회의실

2025 정기총회 공지

2024년 12월 18일(수) 홈페이지

- ▶ 2025 총회준비위원회 위원 모집 안내

2024년 12월 31일(화) <말하라> 연간 소식지

2025년 1월 7일(화), 2월 10일(월)/ 20일(목) 문자 발송

- ▶ 정기총회 안내, 위임장 온라인 접수 안내

2025년 1월 10일(화) 웹 소식지 발송

- ▶ 정기총회 개최 안내

2025년 2월 20일(목) 웹 소식지 발송

- ▶ 정기총회 개최 및 위임장 온라인 접수 안내

2025 전북민언련 회계·사업 감사 일정

2025년 2월 13일(목) 대면 감사 진행

2025 정기총회·위임장 온라인 접수

2025년 2월 17일(월) ~ 2월 21일(금)

최종본입니다

식순

● 개회

의장 임명
성원 보고
개회 선언
서기 임명

● 보고

1. 2024년 정기총회 의결사항 보고	-----	4
2. 2024년 사업 보고	-----	6
3. 2024년 결산 보고	-----	54

● 안건

1. 2024년 사업·회계 감사 보고서 채택	-----	62
2. 정관 수정의 건	-----	64
3. 2025년 사업안 승인의 건	-----	66
4. 2025년 예산안 승인의 건	-----	74

● 광고

● 폐회

보고

● 목차

1. 2024년 정기총회 의결사항 보고
 2. 한눈에 보는 전북민언련 2024년 사업 보고
 3. 살림살이
 - ▶ 2024년 결산 보고
-

- 일시 : 2024년 2월 16일(금) 오후 7시
- 장소 : 전주공동체라디오 전주FM
- 진행 방식 : 온라인 서면 의결 및 위임, 현장 참석

1. 개회 선언 - 김은규 공동대표를 의장으로 선출 후 개회 선언**2. 성원 보고**

- 전북민연련 총회는 정족수 규정이 없으며, 총회 참석 회원 절반 이상의 의결로 총회를 진행하게 되어 있어 개회가 가능함.
- 2024년 1월 기준 505명의 회원 중 52명이 위임 의사를 밝힘.(온라인 50명, 유선 2명 신청. 김은규 공동대표 2인, 이상훈 공동대표 2인, 이종규 공동대표 3인, 손주화 사무처장에 43인이 위임함)
- 개회 당시 현장 참석자는 27명

3. 서기 임명 - 조재익 간사를 서기로 임명**4. 2024년 정기총회 안건 채택함****5. 2023년 정기총회 의결사항 보고**

- 조재익 간사 2023년 정기총회 의결사항 보고

6. 2023년 전북민연련 사업 및 회계 보고 심의의 건

- 손주화 사무처장이 2023년 전북민연련 사업 및 회계 결산 보고 진행
- 참석자 동의로 통과

7. 2023년 감사보고서 발표 및 채택 여부 건

-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 전북민연련 사업·회계에 대한 이평강 감사의 감사 보고서 발표
- 참석자 박수로 감사 보고서 채택

8. 제12기 전북민연련 공동대표 및 감사 선출의 건

- 2024 총회준비위원회에서 검토된 제12기 전북민언련 공동대표 및 감사 추천안 안건 상정
- 이상훈(2022년~)·이종규(2014년~) 공동대표 연임안(임기/2024.03.~2026.02.)
- 신임 공동대표 박민 임명안(임기/2024.03.~2026.02.)
- 신임 감사 최태호·여민영 임명안(임기/2024.03.~2026.02.)
- 김수돈 회원 공동대표 변경 및 추천 사유에 대해 질문. 김은규 공동대표는 제12기 공동대표 및 감사 추천 진행 과정을 설명.
- 참석자 박수로 제12기 공동대표 및 감사 임명안 통과

9. 2024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 총회준비위원회에서 논의된 2024년 사업 계획안에 대해 손주화 사무처장이 보고
- 정무영 이사 2024년 구체적 재정 확보 계획 설명 요구/ 이사회 논의 결정
- 참석자 박수로 2024년 사업계획안 통과

10. 2024년 예산안 승인의 건

- 총회준비위원회에서 논의된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손주화 사무처장이 보고
- 최성은 이사 2024년 전주공동체라디오 분담금 항목 별도로 분리 필요 제안
- 김병직 이사 2024년 공모사업 진행 관련 질문 →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공모사업은 신청하지 않고 있으며 중앙 부처 등 언론 관련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공모하는 사업만 신청하고 있음. 기존에 신청해 온 언론진흥재단 등은 현 정부 기조로 인해 선정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함.
- 다른 의견 없이 참석자 박수로 2024년 예산안 통과

11. 기타 안건

- 최성은 이사 활동가 연차에 대한 규정이 연 5일 맞는지 궁금하며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제안. 운영내규는 이사회 결정 사안으로 이후 논의하기로 함.
- 한지연·김재호 이사, 조재익 간사 직책에 대해 이사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

12. 2024 전북민언련 정기총회 폐회 선언

13. 단체사진 촬영

1) 2024 진행 사업 요약

▶9개 분야 5개 진행 완료, 3개 일부 진행, 1개 미진행

사업명	내용	진행 여부
시민미디어 플랫폼	* 공동체라디오 제작단(분과) 콘텐츠 제작 활동 (집중 사업) - 정기적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공동체라디오 소위원회 구성 - 유튜브 <말하랑게TV> 채널을 통한 콘텐츠 연결	일부진행
감시·견제 현안·대응	언론사 및 기자 윤리 위반 사례 대응 출입처, 주재기자·출입기자단 등 일상적 언론개혁활동 영역 브리핑룸·기자실 운영 실태 지역 언론 지원조례 관련 대응 활동 시민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윤석열 정부 언론 정책 및 현안 대응 사업 전국언론사(통신사·인터넷신문사)의 지역사업권 계약 체결 문제 → 실태조사	일부진행
모니터	전북주요뉴스 <뉴스피클>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 전북민주언론상 공모 및 선정 2024 총선 선거 대응 활동	진행완료
연구	시청자위원회 실태보고서 / 2년 단위로 진행 독자위원회 실태보고서 / 양적 실태 조사 방송패널 분석 실태보고서 지자체 홍보예산 조례 제정 실태 관련	진행완료
교육	시민 대상 언론학교, 미디어리터러시 전문강좌 진행 지역 판을 뒤집다 (모니터·교육)	미진행
연대	각 단위 연대 사업 진행/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언련 네트워크,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네트워크, 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	진행완료
재정	회원 확대를 위한 100인 위원회 구성 (집중 사업)	진행완료
조직	이사회, 정책위원회, 소식지위원회, 회원 사업 일상적 진행 - 뉴스 읽기 회원 분과 모임, 재무제표 분석 모임	일부진행
홍보	웹 소식지 발행 연간 소식지 <말하라> 발행(12월)	진행완료

2) 2025년 종합 평가

전북민언련에서는 시민미디어 플랫폼 구축과 재정 안정화를 2024년 최우선 과제로 놓고 활동했습니다. 시민의 의사를 담고, 확산시킬 수 있는 미디어 플랫폼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며, 향후 중점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재정 사업이 올해 필요하다는 총회준비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시민미디어 플랫폼 구축', '2024년 총선 모니터', '회원 확대를 위한 100인 위원회 구성'을 집중 사업으로 정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24년에는 전체적으로 9개 사업을 수립했으며 이중 5개 사업이 진행 완료되었고 3개 사업이 일부 진행, 1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1. 성과적인 측면

- 윤석열 정부의 언론정책 현안 대응 및 퇴진운동본부에 참여했습니다. 언론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정부의 정책과 민영화 기조 속에 지역 공영방송의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에 참여해 계엄 사태 이후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훼손하고자 하는 시도를 막아내는데 함께 했습니다.
- 2024 총선 선거 대응 등 일상적인 모니터 활동을 연계한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언론 모니터 보고서를 기초로 지역 시군 의제 조사, 이달의 좋은 기사, 전북민주언론상 선정까지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지역방송사 총선 유튜브 보고서, 민주당 경선 선거 방송 토론회 현황 보고서 등을 통해 총선 시기 방송사의 의제 선정 문제 등을 점검했습니다.
- 지속 가능한 시민 운동을 위한 회원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텃밭분과 활성화를 통한 회원 활동, 웹 소식지 강화, 연간 소식지 온라인 발행, 송년회 행사 재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에는 회원 확대 조직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회원들이 참여해 새로운 신규 회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회원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 지역 언론계에서 발생하는 현안을 전국 네트워크 및 연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전북민언련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2. 개선이 필요한 부분

- 일부 진행된 3개 사업은 '시민미디어플랫폼', '감시견제 현안 대응', '조직'사업입

니다. 시민미디어 플랫폼 사업은 공동체라디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수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공동체라디오를 통해 송출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단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콘텐츠가 송출되고 의제 선정에 있어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서 소홀히 하는 의제들을 선정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는 반면, 조직 사업의 일환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시민들의 참여에 있어 한계가 있었습니다.

- '조직'사업 또한 회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모임 활동, 분과 조성이 일부에 그쳐 일부진행 평가를 했습니다. 뉴스 읽기 회원 분과 모임 등을 연초 사업에 기획했으나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총회준비위원회에서는 이사회 조직운영 형태를 전환하고, 회원들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등을 신설할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 '감시·견제·현안·대응' 분야는 언론사 및 기자 윤리 위반 등 현안 문제를 공론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상적 언론 개혁 활동의 영역이며 2024년에는 전북자치도청의 대변인실 문제와 전북도의회의 출입기자실에서 발생한 문제에 집중하며 일정한 성과를 냈으나 연초 기획했던 전국 언론사 지역사업권 계약 체결 문제 등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지 못해 일부 진행으로 평가했습니다.
- 민생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전북지역은 자영업자 폐업률 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지역 여건이 회원 수 감소와 회비 수입 감소로 이어지며 본회 또한 누적된 적립금을 약 3% 남겨두고 전부 소진한 상황입니다. 공모사업, 펀딩, 회원 배가 등을 어려움을 해결해 갔으나 2025년 이후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체의 지속성,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을 확보할 다양한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 새로운 방식과 사업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한 기획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사업을 통해 미디어 소수자의 이용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순회교육 활동을 진행했으나, 이후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하거나, 정권기조 문제로 제출하지 않으면서 기획 사업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 총회준비위원회에서는 언론 학교와 같은 정기적이고 많은 예산이 필요한 교육 사업 외에 비정기적으로 명사특강 등을 통해 시민을 만날 수 있는 소규모의 강좌 마련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이에 모니터 및 현안 사업과 연계해 지역의 기자, 학자, 시민들이 만날 수 있는 특강 및 간담회 등을 2025년 사업에 넣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본회의 중요 사업이 공모사업의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자금 마련을 모색해야 합니다.

배경 및 경과

- 전북지역 종합일간신문, 지상파 방송, 인터넷신문, 주간신문을 포함한 14개 사의 뉴스 콘텐츠를 분석해 언론 보도의 왜곡과 편향, 무보도 의제에 대해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전북 주요 뉴스 브리핑 <뉴스피클>은 일일 모니터가 중심이 되며, 모니터로 확인되는 긍정적 보도는 좋은 기사상 등으로 확산하고, 부정적 보도는 문제를 제기하고 성명과 논평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 '무보도'의 경우 <재무제표 분석모임>의 활동과 예산감시 활동 및 지자체 의회 활동을 모니터링을 겸해 무보도된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도되지 않은 숨겨진 사안을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모니터 대상 외에도 필요시 통신사, 전국지 및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지역 채널을 주요 참고 매체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해당 모니터 대상은 전북민언련이 시민 투표를 통해 매달 선정하는 이달의 좋은 기사 추천 언론사로 등록되며,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작은 본회가 주최하는 전북민주언론상에 자체 추천 후보작으로 검토됩니다.
- 이달의 좋은 기사는 2024년 총 9회 좋은 기사를 선정했으며 32개의 후보 콘텐츠 중 방송사 비중이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지역시군의제 편차를 확인해 보는 시군의제보고서는 분기별로 나왔으며, 신문의 독자위원회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보고서도 2024년 나왔습니다.
- 2024 총선은 모니터, 지역미디어 정책의제 제안, 현안 대응으로 진행했습니다.

1) 모니터 대상

지역종합일간신문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지역방송	전주MBC 뉴스데스크, KBS전주총국 뉴스9, JTV 8뉴스
지역인터넷신문	노컷뉴스(전북), 전북의소리
지역주간신문	김제시민의신문, 부안독립신문, 열린순창, 주간해피데이, 진안신문, 무주신문

▶ 기타 주요 참고 매체 :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10대 매체, 종합편성채널, LG헬로비전, 금강방송, SK B 전주방송 등

2) 전북 주요 뉴스 브리핑 <뉴스 피클> 모니터 활동 분석

▶ 월별 통계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비고
1월	13건	10건	12건	2024년 1월 15일부터 시작
2월	19건	20건	13건	
3월	19건	19건	16건	
4월	18건	19건	14건	
5월	19건	18건	15건	
6월	18건	19건	14건	
7월	19건	20건	13건	
8월	18건	16건	12건	
9월	15건	19건	15건	
10월	19건	17건	13건	
11월	17건	21건	18건	
12월	20건	18건	16건	
합계	214건	216건	171건	

▶ 주제 분야 통계

분류	경제	교육	노동	복지	사회	언론	정치	행정	환경	합계
건수	14	12	20	7	27	10	31	75	18	214
비율	6.5%	5.6%	9.3%	3.3%	12.6%	4.7%	14.5%	35%	8.4%	100%

▶ 지역별 통계/ 주요 주제만 통계에 반영

분류	건수	비율	분류	건수	비율
전라북도	46	21.5%	고창	0	0%
새만금	10	4.7%	무주	0	0%
전주	47	22.0%	부안	4	1.9%
익산	5	2.3%	진안	1	0.5%
군산	16	7.5%	순창	1	0.5%
완주	5	2.3%	임실	1	0.5%
김제	6	2.8%	장수	0	0
남원	4	1.9%	미분류	68	31.8%
정읍	0	0%			
합계	214건 (100%)				

3) 이달의 좋은 기사

▶ 월별 선정작

월	선정작	세부 내용
1월	전주MBC 무더기 탈락 전북대학교 교수 임용 과정, 법 위반 의혹 제기 (시민 투표 결과 80% 지지)	○ 전주MBC 이주연 취재기자, 정진우·조성우 영상기자 ○ 관련 기사 제목 및 보도 일시: 1. “코드가 안 맞아서?”.. 국립대 교수 1순위 무더기 탈락(1/16, 이주연 취재기자, 정진우 영상기자) 2. “최종에서 왜 또 전공 심사?”..전북대, 법 위반 논란(1/30, 이주연 취재기자, 조성우 영상기자) ※ 모니터링 기간 외 1. “다른 9개 국립대는 달랐다”..총장 재량권 제한(2/1, 이주연 취재기자, 조성우 영상기자)
2월	KBS전주총국 재난 피해자들의 상처와 부족한 심리 치료 시스템 비판 (시민 투표 결과 38.9% 지지)	○ 안승길 취재기자 / 김동균, 한문현 영상기자 ○ 관련 기사 제목 및 보도 일시: 1. 그날의 ‘악몽’...“재난은 끝나지 않았다”(2/19, 오정현 취재기자, 김동균 영상기자) 2. 재난의 상처 아물었을까?...84인 ‘악몽의 기록’(2/20, 오정현 취재기자, 김동균 영상기자) 3. “목숨값 계산 먼저”...상처 덧입은 재난 피해자들(2/21, 안승길 취재기자, 한문현, 김동균 영상기자) 4. ‘속병’ 치유 돕겠다더니...삐걱대는 ‘재난심리지원’(2/22, 오정현 취재기자, 김동균 영상기자) 5. “0명, 그나마 0.6명”...나눌 손 없는 심리 상담 치료 현장(2/26, 안승길 취재기자, 한문현, 김동균 영상기자) 6. “눈 앞의 참상”...‘대리 외상증후군’에 빠진 주변인의 악몽(2/27, 오정현 취재기자, 한문현, 김동균 영상기자)
3월 ~ 4월	무주신문 무주군 전도마을 앞섬체험센터 소유권 갈등, 무주군의 적극 대처 요구 (시민 투표 결과 64.4% 지지)	○ 무주신문 이진경 취재기자 ○ 관련 기사 제목 및 보도 일시: 1. 3년간 법적 소송 끝! 주인이 70명이 된 앞섬체험센터(3/11, 1면, 2면, 이진경 취재기자) 2. “사용내역 밝혀라” 전도마을 주민들 뿔났다(4/8, 1면, 3면, 이진경 취재기자) 3. 앞섬체험센터 출자 주민들, 원금 돌려받는다(4/29, 1면, 2면, 이진경 취재기자)
5월	전북의소리 전북자치도 대변인실 언론사 광고비 집행 논란, 주먹구구식 광고비 집행 문제 (시민 투표 결과 52.4% 지지)	○ 전북의소리 박주현 취재기자 ○ 관련 기사 제목 및 보도 일시: 1. ‘갑질’에 발목 잡힌 ‘김관영 도정’, 외부 채용 ‘어공 간부들’ 집중 ‘도마 위’...지역 언론 ‘입막음용 광고’ 논란까지, 내부 갈등·불신 ‘고조’(5/24, 박주현 취재기자) 2. ‘어공’과 ‘늘공’ 가르고 짓누르는 것은?(5/25, 박주현 취재기자) 3. [오늘의 전북 뉴스 브리핑] “전북자치도 대변인실도 갑질 논란 확산, 감사 나서”...“전북감사위원회 독립 기구라더니, 도지사가 직접 임명?”...“전주시 공무원 28% 갑질 피해”...“전주육상경기장 야구장, 대표 시공사

		<p>자금난으로 공사 중단"..."전북 버스노조 파업 예고, 시민들 불만 확산"(5/28, 박주현 취재기자)</p> <p>4. 전북자치도 '갑질 논란', 지역 언론계로 '불똥'...왜?(5/30, 박주현 취재기자)</p> <p>※ 모니터링 기간 외</p> <p>1. '기사-광고-혈세'의 함수관계(6/1, 박주현 취재기자)</p>
6월	<p>전주MBC 비자금 조성 의혹 드러난 대한드론축구협회, 전주시 드론 산업은 허상? (시민 투표 결과 61.9% 지지)</p>	<p>○ 전주MBC 정자형 취재기자 조성우, 진성민, 김종민 영상기자</p> <p>○ 관련 기사 제목 및 보도 일시:</p> <p>1. 월드컵 연다던 드론축구협회.. 비자금 수천만 원 '은닉'(6/23, 정자형 취재기자, 조성우 영상기자)</p> <p>2. "드론 비자금 몰랐다".. 부랴부랴 진화 나선 '전주시'(6/24, 정자형 취재기자, 진성민, 김종민, 조성우 영상기자)</p> <p>3. '전주산 드론볼이라더니'..조립만 전주에서?(6/26, 정자형 취재기자, 진성민 영상기자)</p>
7월	<p>전북의소리 전주시의 대한드론축구협회 관리·감독 부실, 드론 축구 실적 부풀리기 등 문제 지적 (시민 투표 결과 57.7% 지지)</p>	<p>○ 전북의소리 박주현 취재기자</p> <p>○ 관련 기사 제목 및 보도 일시:</p> <p>1. 전주시 '드론 축구공 5만개 수출 홍보'는 '뺑튀기'...거짓 자랑에 언론들 '무더기 오보', 책임은 아무도 안 져(7/11, 박주현 취재기자)</p> <p>2. 전주시, '대한드론축구협회 비리' 한 달간 조사한다더니...'드론축구공 5만개 수출 뺑튀기 홍보', '사업비 개인 통장 입금 의혹' 등 명확히 규명 못해 '빈축'(7/25, 박주현 취재기자)</p> <p>3. 대한드론축구협회 '최대 규모 국제 드론축구대회' 마친지 2개월 지났지만 참여 업체 결제 대금 미뤄 '민원 야기' 논란...전주시, 책임 떠넘기기 '빈축'(7/30, 박주현 취재기자)</p> <p>※ 모니터링 기간 외</p> <p>1. "대한드론축구협회, 하청업체에 계약서 날조·날인 강요, 대금 미지급 등 갑질"...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논란'(8/1, 박주현 취재기자)</p> <p>2. 대한드론축구협회, '하청업체 갑질 민원'...전북의소리 보도·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이후에야 '미지급 대금' 입금 조치, '사과'는 없어(8/1, 박주현 취재기자)</p>
8월	<p>전주MBC 내년 대회 준비부터 안전, 운영문제까지 전주 드론축구 산업 문제점 연속 보도 (시민 투표 결과 58.3% 지지)</p>	<p>○ 전주MBC 박혜진, 정자형, 허현호 취재기자 유철주, 조성우, 진성민, 정진우 영상기자</p> <p>○ 관련 기사 제목 및 보도 일시:</p> <p>1. 당장 내년이 월드컵인데.. "드론공 처음 만져봐요"(8/18, 박혜진 취재기자, 유철주 영상기자)</p> <p>2. "먹여주고 재워주고".. 자칭 '월드컵 국가대표'(8/19, 박혜진 취재기자, 조성우 영상기자)</p> <p>3. "5만 개 수출 계약"..실상은 '수출 의향서'(8/20, 박혜진 취재기자, 진성민 영상기자)</p> <p>4. 특허 등록 거절.. "경기 방식은 대상 아냐"(8/21, 정자형 취재기자, 진성민 영상기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5. 혈세 120억 들여 키운 드론축구.. "성과분석 없어요"(8/22, 정자형 취재기자, 조성우 영상기자) 6. "드론 공에 불났어요, 불!".. 인증도 안 받은 배터리(8/23, 박혜진 취재기자, 유철주 영상기자) 7. 미국 CES 드론축구공 화재.. 캠틱 "배터리 아닌 변속기에서 불"(8/26) 8. 세금 100억으로 키운 '드론축구'.. 왜 직접 운영 안 하나?(8/26, 정자형 취재기자, 유철주 영상기자) 9. '민간인 듯 공공기관인 듯'.. '캠틱'의 정체(8/27, 허현호 취재기자, 정진우 영상기자) 10. "따로 또 같이".. 복잡한 드론축구 생태계(8/28, 허현호 취재기자, 유철주 영상기자) 11. "웬불던이 공 팔아 돈 버느냐?".. 드론축구 '전방위 질타'(8/29, 허현호 취재기자, 조성우 영상기자) 12. 완구로 판매되는 '드론축구공'.. 안전 인증은 받았나?(8/30, 정자형 취재기자, 정진우 영상기자)
9월	<p style="text-align: center;">전북의소리 기자 겸직하던 전주시민축구단 단장의 사망, 보조금 유용·횡령 의혹 진상조사 촉구 (시민 투표 결과 55.6% 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의소리 박주현 취재기자 ○ 관련 기사 제목 및 보도 일시 : 1. 전주시민축구단장 겸직 지역 일간지 기자 '사망' 파문...전주시 '민간체육단체 보조금' 투명·적법성 의문,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9/12, 박주현 취재기자) 2. 전주시 조례 없이 '전주시민축구단' 들쭉날쭉 예산 지원...보조금 '횡령·배임 의혹' 수사 중 단장 사망, 임금체불·거래업체 대금 결제 지연 등 피해 호소 잇따라(9/14, 박주현 취재기자) 3. "전주시민축구단, 이대로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세요...단장 사망 후 임금체불 이어 숙소서 쫓겨났지만 전북 대표해 전국체전서 최선 다할 것"(9/25, 박주현 취재기자) 4. 전주시민축구단 '보조금 유용·횡령 의혹' 단장 사망 후 전국체전 앞두고 길거리 내몰린 선수·가족들..."보탬e 시스템' 제대로 관리만 했더라도 이런 사태 막았을 것" "언론들 '침묵' 탄압인가, 유착인가?" 피해 제보·호소 잇따라(9/27, 박주현 취재기자)
10월	<p style="text-align: center;">전북일보 성매매 집결지만 정리하면 끝? 전주 서노송예술촌 현황과 활용 방안 고민 (시민 투표 결과 61.6% 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일보 박은 취재기자 ○ 관련 기사 제목 및 보도 일시: 1. 시정 방향 바뀌자 자본논리 '꿈틀'(10/23, 1면, 2면, 박은 취재기자) 2. 높은 임대료에 청년들 떠나 '썰렁'(10/24, 4면, 박은 취재기자) 3. "재개발·보존 아우르는 논의 필요"(10/25, 4면, 박은 취재기자)

4) 제12회 전북민주언론상

① 선정 결과

『제12회 전북민주언론상』

- 드론 축구와 200억,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전주MBC 드론 축구 취재팀>

『제12회 특별상』 <전북일보 정윤성 화백>

② 선정 이유

『제12회 전북민주언론상』 심사위원회는 올해 후보작에 대한 심사 결과 『제12회 전북민주언론상』에 전주MBC 드론 축구 취재팀(박혜진·정자형·허현호 취재 기자, 유철주·조성우·진성민 영상 기자)의 <드론 축구와 200억,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를 선정했습니다. 『제12회 특별상』에는 <전북일보 정윤성 화백>을 선정했습니다.

언론의 사명인 참여적 공론장을 환기시키고 지역성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본상은 열악한 매체 환경에서도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언론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저희 심사위원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해왔던 지역 언론인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12회 전북민주언론상』에 선정된 전주MBC 드론 축구 취재팀(박혜진·정자형·허현호 취재 기자, 유철주·조성우·진성민 영상 기자)의 <드론 축구와 200억,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기사는 총 13건의 기사를 통해 지자체 주력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된 검증과 계획 없이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오던 전주시 드론 축구 산업의 실체를 드러낸 유의미한 보도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드론축구협회의 비자금 유용의 건을 시작으로 전주시의 막대한 보조금 지급 상황과 관리 문제, 실체 없는 국제드론축구연맹 협회 상황, 검증 없는 전주시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과 실적 부풀리기 행태,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캠틱종합기술원의 특권적 지위에 대한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며 드론축구 산업을 둘러싼 전주시와 민간단체의 이권의 실체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취재팀의 보도 이후 드론축구협회의 드론축구 상설경기장 위탁운영 무기한 연장, 전주시 보조금 집행 점검, 전주시 시정질문 자리에서 사업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캠틱종합기술원 답변 등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화려한 미사여구 속에 성과 검증도 없이 막대한 지자체 보조금이 투입되고, 그 과정에서 특정 단위가 이득을 얻는 행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전주MBC 드론축구 취재팀의 보도는 지역사회에서 드러나지 않던 문제의 실체를 드러내고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 보도라는 점, 지역 언론의 질적 향상과 지역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한 유의미한 보도였기에 전북민주언론상을 드립니다.

『제12회 특별상』은 <전북일보 정윤성 화백>이 선정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만평을 시작한 정윤성 화백은 현재 전북일보에서 <기린대로418> 코너를 통해 사회 모순과 정치 현실을 풍자해 오며 어려운 지역 언론 환경에서도 지역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어려운 사회 문제가 공론화가 될 수 있도록 역할 했다는 심사위원의 일치된 평입니다.

다매체 경쟁 환경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언론의 제작 여건이 더욱 악화되었고, 플랫폼으로서의 지위 역시 불투명해지고 있지만 전북일보의 <기린대로418>을 통해 지역과 공동체, 사회적 약자의 문제가 여론화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평입니다. 전주 페이퍼 황화수소 검출량 축소에 대한 만평, 이름만 바뀐 전북특별자치도 실태는 물론, 세월호로 인한 시민들의 슬픔과 분노,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절규를 그려냈던 만평을 많은 시민들이 기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지역 언론의 질적 향상과 품격 향상에 기여한 정윤성 화백에게 특별상을 드립니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역 언론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감시와 비판뿐 아니라 활성화를 위한 대안 제시에 이르기까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③ 진행 과정

가. 공모 접수 : 2024년 11월 25일(월)부터 12월 1일(일) 자정까지

나. 심사 : 2024년 12월 7일(토), 오전 10시

다. 시상식 일시 : 2024년 12월 27일(금), 오후 7시, 전주공동체라디오방송사 5층

라. 심사위원 : 박민, 김은규, 정무영, 손주화

④ 역대 수상작

연도	수상자	
제1회 (2013)	전북민주 언론상	[2천 억 짜리 엉터리 하수관로 지하 대 해부] KBS전주방송총국 특별취재팀 (김진희, 신재복, 오중호, 안광석)

		[노예장애인 그 후] JTV전주방송 (김철, 하원호, 권만택)
	특별상	[기자 출입까지 막는 전북도의회]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쫓겨나보니 서럽네] 전북인터넷대안언론 참소리 문주현
제2회 (2014)	전북민주 언론상	[유령사업에 하극상까지... 바닥친 자치단체 - 인사권·공사권 비서실장 공화국] 전북CBS (김진경 . 이균형 . 임상훈)
	특별상	[평화동 마을신문] 발행인 정원선, 편집인 김수돈
제3회 (2015)	전북민주 언론상	[『복마전으로 전락한 국립대 병원 건립사업』 집중 연속 보도] 전주 문화방송 (고차원, 강동엽, 홍창용, 진성민)
	특별상	[지리산 산내마을신문] 산내마을신문모임
제4회 (2016)	전북민주 언론상	수상작 없음
	시민미디 어상	[티브로드 전주방송 <우리동네 TV>] 티브로드 <우리동네 TV> 홍정완 피디 <우리동네 TV> 시민제작단
제5회 (2017)	전북민주 언론상	[‘하루 만에 동의... 고품 폐기물 발전소’] JTV 연속 보도 (JTV 김철, 나금동 기자)
	시민미디 어상	월간 ‘백운’ (월간 ‘백운’ 편집위원회)
	특별상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전주지부
제6회 (2018)	전북민주 언론상	[자광, 전북일보 주식 45% 인수 ‘논란’] 전주MBC 박찬익 기자
	시민미디 어상	[우리동네 선거방송] 티브로드 전주방송
	특별상	송천동마을신문
제7회 (2019)	전북민주 언론상	※공동 수상 [남용되는 행정권력 집중 감시해 온 진안신문 연속보도] 진안신문 류영우 기자 [방치된 군산지역 미군 송유관 실태 전북일보 연속보도] 전북일보 문정곤 기자, 엄승현 기자
제8회 (2020)	전북민주 언론상	※공동수상 [송하진 도지사 가문 우상화 사업인가? 연속 보도] 김제시민의신문 홍성근 편집국장, 남성훈 기자 [다큐멘터리 <할미냄>] KBS전주총국 맹남주, 허유리 피디 이승식 촬영, 송가영 작가
제9회 (2021)	전북민주 언론상	[전라북도 전 비서실장의 출렁다리 땅] 전북CBS 남승현·송승민·최명국 취재 기자
	특별상	[고창군과 동우팜투테이블 산단 입주 계약의 절차와 위법성 논란

		연속 보도] 주간해피데이 안상현 편집국장, 김동훈 취재 기자
제10회 (2022)	전북민주 언론상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사건] 전주MBC 고차원 기자
	특별상	전북의소리 박주현 대표
제11회 (2023)	전북민주 언론상	※공동 수상 [국비 127억 날리고도 한우 회식 100번.. 국립대 총장의 일탈, 그리고 R&D 카르텔] 전주MBC 박혜진 기자 [방산업계 1위 한화, '무기 개발' 수입산 둔갑] 전북CBS 남승현, 김대한 기자
	특별상	무주미디어협동조합 <무주신문>

5) 지역 지상파 방송 3사 시군 의제 보도 분기별 보고서

발행 일	제목	주요 내용
2024.06.10.	1분기 보고서, 임실, 무주, 진안, 장수 보도 비중 1%대	2024년 1분기 동안 가장 많이 보도된 지역은 전주시로 총 138건 보도됐다. 반면 임실군은 총 6건으로 가장 적게 보도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전주시와 23배 차이이다.
2024.07.26.	2분기 보고서, 1분기 이어 임실군 보도 비중 가장 낮아	2024년 2분기 동안 가장 많이 보도된 지역은 전주시로 총 189건(29.7%) 보도됐다. 반면 임실군은 총 6건(0.9%)으로 1분기와 마찬가지로 가장 적게 보도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1분기보다 지역별 보도량 차이가 더 벌어졌다.
2024.11.14.	3분기 보고서, 정읍시, 무주군 보도 비중 1.1%	가장 많이 보도된 지역은 전주시로 총 146건(27.3%) 보도됐다. 반면 정읍시와 무주군은 총 6건(1.1%)으로 가장 적게 보도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보도량 차이는 2분기와 비슷하다.
2025.02.07.	2024년 전북 지역 방송 3사 시군 의제 보도 실태 종합 보고서	2024년 한 해 동안 지역 방송 3사에서 가장 많이 보도한 지역은 전주시(581건)이고, 가장 적게 보도한 지역은 무주군(27건)으로 약 21.5배 차이이다. 2023년은 가장 많이 보도한 지역과 가장 적게 보도한 지역의 차이가 29배였는데, 상대적으로 지난해보다 지역별 보도 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6) 독자(권익)위원회 현황 보고서

일시	보고서	주요 내용
2024년 1월 19일	2022~2023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독자(권익)위원회 현황 보고서	<p>조사 기간: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p> <p>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전라북도 지역 종합일간지 3사의 독자(권익)위원회의 6년 평균 성비 구성은 남성 81%(109명), 여성 19%(25명)로 여전히 남성의 비율이 매우 높았으나 최근 2년 동안 개선 모습을 보였다.</p> <p>신문사 독자(권익)위원회 위원의 다수가 여전히 교수, 기업인, 공공기관장, 단체협회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기준 네 직업군의 비율이 6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p>

7) 2024 총선 모니터 활동

▶ 모니터 보고서 : 일일모니터에 총선 사안 결함	모니터 15회, 특별 보고서 1회
▶ 선거방송 토론회 불참 대응 및 현황 보고서 작성	진행/ 성명 1회, 토론회 보고서 2회
▶ 사이버 선거보도 제보 온라인 창구 운영 및 대응	진행/ 운영 및 대응 활동 진행
▶ 총선 주간 웹소식지 회원 및 단체 전달	진행
▶ <주목해야 할 총선 보도> 특별 보고서 발표	진행
▶ 지역미디어 정책 과제/ 후보자·정당에 의제 제안	진행/ 보도자료 2회
▶ [연대]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참여	참여

① 전북민언련 총선 활동 세부 내용

- ▶ [모니터]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에 쏟아진 지역 언론들의 비판, 전북 비례후보 한 명도 없어(뉴스 피클 2024.03.19.)
- ▶ [모니터] 전북 지역 언론들의 제22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결과 분석 정리(뉴스 피클 2024.03.25.)
- ▶ [모니터]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후보 KBS 토론회 보이콧 논란, 논란과 별개로 비판 이어지는 이유는?(뉴스 피클 2024.03.29.)
- ▶ [모니터] 제22대 총선 선거 기간 혐오 표현 감시하는 시민사회 활동 시작, 언론의 역할은 없을까?(뉴스 피클 2024.04.01.)
- ▶ [모니터] 이번에도 국회의원 선거에 묻힌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책임은 어디에?(뉴스 피클 2024.04.05.)
- ▶ [모니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북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에 대한 해석 신중해야(뉴스 피클 2024.04.08.)
- ▶ [모니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북 지역 언론 분석과 주목할 점 살펴보기(뉴스 피클 2024.04.11.)
- ▶ [모니터] 제22대 총선 전북 지역 경제 공약, 자원 확보 불투명하다는 지적 나와(뉴스 피클 2024.04.16.)
- ▶ [모니터] 전북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분석, 중진 정치인 강조와 정치 신인 부족하다는 비판 엇갈려(뉴스 피클 2024.03.15.)
- ▶ [모니터] 선거 앞두고 정책, 여성, 청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전북 지역 언론들의 지적 이어져(뉴스 피클 2024.03.13.)
- ▶ [모니터] 전북자치도 국회의원 선거구 10석 유지됐지만, 일부 부작용 및 갈등 우려(뉴스 피클 2024.03.04.)
- ▶ [모니터] 이번 총선은 기후 위기 대응 선거로 만들자는 움직임, 전북에서는 어떨까?(뉴스 피클 2024.02.27.)
- ▶ [모니터] 5인 → 4인 → 5인 경선, 혼란스러운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선거구 경선(뉴스 피클 2024.02.26.)
- ▶ [모니터] 기존 예비후보 아닌 새로운 인물 포함된 전주을 선거구 의문의 여론조사

논란(뉴스 피클 2024.0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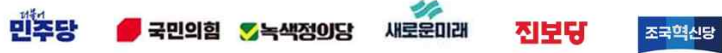
- ▶ [모니터] 21대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공약 얼마나 지켰을까?(뉴스 피클 2024.02.01.)
- ▶ [2024 총선 보고서]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북자치도 선거방송토론회(더불어민주당 경선) 현황/ 2024.03.11. 발표
- ▶ [제22대 총선 보고서] 총선 '정치선거 유튜브' 확장 나선 전주MBC, JTV전주방송/ 2024.04.09.
- ▶ [제22대 총선 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선거방송토론회 현황 보고서 2차/ 2024.04.11.
- ▶ [성명] '여사' 호칭 논란이 토론회 거부 명분이 될 수는 없다! - 전주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선거토론회 보이콧 입장을 보며/ 2024.03.28.
- ▶ [2024총선미디어감시연대] 언론 보도 신고 센터 개설/ 2024.03.06.
- ▶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공동 보도자료] 제22대 총선 지역미디어 정책 의제 제안 답변 결과/ 2024.04.03.
- ▶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공동 보도자료] 지역 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 제22대 총선 정책 의제 제안/ 2024.03.22.

② 지역미디어 의제 답변 결과

지역민언련 네트워크는 각 정당의 답변을 토대로 총선 이후 [지역시민의 '미디어 자치권' 실현을 위한 4대 분야 9개 세부 의제] 실현을 위한 정책 협의와 추진을 진행할 예정. 또한 지역 미디어를 위한 공적 자원 조성 등의 의제는 토론회를 비롯한 속의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공론화할 계획. 하반기에 전국민언련 공동 온라인 세미나 진행.

- ▶ 질의서 전달 : 2024년 3월 21일~22일
- ▶ 질의서 회신 : 2024년 4월 2일
- ▶ 질의 대상 : 8개 원내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 ▶ 정당별 답변 : 찬반 응답/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미답변/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무응답/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 ▶ 답변 내용 : 정책 제안 결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가 찬반 의견 및 세부 현안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답변해왔습니다. 조국혁신당, 국민의힘은 검토 결과 미 답변 의견으로 답변했습니다. 반면, 개혁신당과 자유통일당은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공동 보도자료]
제22대 총선 지역미디어 정책 의제 제안 답변 결과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 대표성 강화	지역 대표성 강화	찬성	미답변	찬성	찬성	찬성	미답변
	권역별 지역방송위원회 설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지역민 보편적 정보 접근권 보장	지역신로발전기금 건전성 강화	찬성	미답변	찬성	찬성	찬성	미답변
	지역방송발전기금 조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지역미디어를 위한 미디어 바꾸저 제도 수립 및 자원 마련	찬성 (기타의견)		찬성	반대 (기타의견)	찬성	
	지역미디어를 위한 공적 자원 조성	기타의견		찬성	찬성	찬성	
시민과 공동체 발전의 핵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제화 필요	기타의견	미답변	찬성	찬성	찬성	미답변
	지원 정책 수립 및 공동체미디어위원회 설치	기타의견		찬성	찬성	찬성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철폐	방송사 비정규직 실태파악 공개 및 재허가 조건 반영 요구	찬성	미답변	찬성	찬성	찬성	미답변

□ 조국혁신당 / 검토 결과 큰 틀에서 지역 언론 지원 정책 방향에 동의한다. 다만, 세부 사안에 대해 데이터를 토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찬반 답변은 하지 않기로 결정함. 총선 이후 관련 의제 관련 검토와 토론 진행할 수 있다.
 □ 국민의힘 / 검토하였으나 답변하지 않기로 함. 미답변 사유는 밝히지 않음.
 □ 개혁신당 / 무응답 □ 자유통합당 / 무응답
 * 정당별 기타 의견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https://www.malhora.or.kr/4799>) 참고

③ 선거 제보 대응) JTV 유튜브 콘텐츠 편향 문제

- ▶ 3월 12일 온라인 제보센터 접수
- ▶ 제보 내용 : 지역 지상파 방송이 최강욱이라는 특정 정당인 출신을 호스트로 특정 성향의 게스트를 초대해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튜브라고 해도 지상파 방송이라는 곳이 이렇게 편향된 내용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나팔수도 아니고.
- ▶ 대응 : 총선 유튜브 보고서 발행. 전주MBC와 JTV 유튜브 콘텐츠 편향 문제 거론

배경 및 경과

- 주로 지역 언론사 및 기자 윤리 위반 사례 대응한 활동이며 출입처, 주재기자·출입기자단 등 일상적 언론개혁활동 영역을 다루고 있다.
- 2024년은 전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이 중심이 된 청탁금지법 위반 건을 고발해 과태료 처분을 끌어낸 점, 선심성 광고비를 지급한 의혹으로 논란이 되었던 전북자치도청 대변인실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감사위원회에 민원 제기를 통해 홍보비 집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끌어내기도 했다. 또한 언론인 지위를 활용해 인사 청탁 및 취업한 사례, 에 대한 대응도 이어갔다.
- 이 과정에서 관련 출입기자단과 동료 언론인의 침묵, 무보도 사례가 이어지면서 본회에서는 기자단의 담합과 보도 침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공론화하기도 했다.

1) 전북도의회 출입기자단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① 사건 경위

지난 10일 전북에 내린 폭우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전북의 국회의원과,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기자단이 회식을 함. 이날 윤준병 국회의원이 자신의 SNS에 공개한 간담회 단체 사진은 술자리로 보이는 장소에서 정치인들과 기자단이 환하게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모습으로 촬영. 참석자들은 사전에 예정된 공식 간담회였다고 해명했으나 부적절한 간담회라는 언론 보도가 나옴.

② 진행 일지

- ▶ 07.10. 윤준병 국회의원 <정읍 고창 도의원과 전북기자단과의 만남(24.7.10)>이란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글 남김.
- ▶ 07.10. 프레시안 첫 기사 나옴. 도의회 기자단 생략되어 나옴
- ▶ 07.15. 정책위 보고 사안 논의
- ▶ 07.16. 공동 성명 발표 <도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나 - 재난 피해 속 술자리 강행 논란>
- ▶ 민주당 중앙당에서 조사 요구,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과문 발표
- ▶ 07.19. 이사회 고발 결정
- ▶ 07.25. 고발 취지 기자회견 진행 및 고발장 접수/ 전북도의회 오전 10시 30분

- ▶07.30. 고발인 조사, 전북경찰청
- ▶10.02. 전북경찰청 통지서 수령(결정일 2024.09.25.), 과태료 부과 사안으로 불송치 결정(각하)
- ▶10.10. 전북민언련 보도자료 배포(과태료 부과사안 이행 상황 점검 강조)
- ▶10.10. 전북도의회 총무과 이해충돌 담당자와 통화 및 진행상황 점검

③ 고발 내용

-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 피고발인 : 전북도의회 기자 9명(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뉴스1 전북, 뉴시스 전북, KBS전주총국, 전주MBC, JTV, 연합뉴스)/ 전북 국회의원 1인/ 전북도 의원 4인

④ 결정 내용

- ▶ 결정 종류 : 불송치(각하)
- ▶ 불송치 사유

2024.07.1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70 참여우명품플라자 도청 점에서 국회의원 윤○○, 전북도의회 의원 김○○ 등 4명, 전북도의회 출입기자 김○○ 기자 등 9명 등이 같이 식사를 하고 식사 대금 861,000원을 전북도의회 의원 임○○, 김○○ 의원이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의자 김○○가 제출한 업무용카드 결제 내역, 참여우 식당에서 압수한 영수증 및 CCTV 및 각 피의자들의 진술로 볼 때, 이들이 식사 한 것 외에 달리 선물 등 다른 금품을 주고 받은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당시 일괄 결제된 음식물의 가액을 산정한 결과 개인당 55,933원으로 확인된다. 이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과태료 사안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혐의 없어 불송치(각하). 이와 별도로, 이 사건은 부정청탁금지법 제8제2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과태료 부과 사안이므로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

⑤ 대응

- ▶ 10.10. 과태료 부과 사안으로 결과 보도자료로 배포 : 각 언론사는 소속 기자 과태료 처분 결정을 법원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보도자료에서 강조
- ▶ 미이행한 경우 1) 공개질의서 작성 배포(미 이행한 이유, 언론자율규제 미 준수에 대한 문제 제기, 미이행 언론사 명단 공개), 2) 한국기자협회에 협회 및 회원사 징계 요구(언론윤리강령 위배) 3) 2번 침묵할 경우 자율규제 준수하지 않는 협회에 대한 문제제기(성명, 또는 기자회견 진행) → 2025년 계속 진행 예정

2) 전북특별자치도청 대변인실 선심성 광고비 지급 관련

① 사건 경위

서울신문은 5월 23일 대변인이 자신을 좋지 않게 평가하는 전북도의회 출입 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 거액의 선심성 광고비를 지급해 도마 위에 올랐으며 여행을 가는 기자 7명에게 1개 사 당 400만 원씩 280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여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지적을 보도했다.

노컷뉴스 전북 또한 5월 28일 "A 간부는 부적절하게 광고비를 집행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A 간부가 본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전북도의회 출입 기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광고비를 지급했다"라고 보도했다.

② 대상 : 전북도의회 출입하는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전민일보, 전북중앙신문, 뉴시스, 뉴스1 (정치부 부장) → 전북기자협회 소속사

의뢰번호	광고건명	광고주명	담당부서	매체명	시작일	종료일	매체구분명	총합계
24024143	전북특별자치도 치유관광 10선 광고	북특별자치도	대변인실	전민일보	2024-04-23	2024-04-23	인쇄매체	4,000,000
24024143	전북특별자치도 치유관광 10선 광고	북특별자치도	대변인실	뉴시스전북	2024-04-18	2024-05-17	인터넷매체	4,000,000
24024143	전북특별자치도 치유관광 10선 광고	북특별자치도	대변인실	뉴스1코리아	2024-04-18	2024-05-17	인터넷매체	4,000,000
24024143	전북특별자치도 치유관광 10선 광고	북특별자치도	대변인실	전북도민일보	2024-04-22	2024-04-22	인쇄매체	4,000,000
24024143	전북특별자치도 치유관광 10선 광고	북특별자치도	대변인실	전라일보	2024-04-22	2024-04-22	인쇄매체	4,000,000
24024143	전북특별자치도 치유관광 10선 광고	북특별자치도	대변인실	전북중앙신문	2024-04-22	2024-04-22	인쇄매체	4,000,000
24024143	전북특별자치도 치유관광 10선 광고	북특별자치도	대변인실	전북일보	2024-04-24	2024-04-24	인쇄매체	4,060,000

③ 일지

- ▶ 05.23. 서울신문 보도로 사건 인지함.
- ▶ 05.29. 강○○ 전북기자협회장 통화
- ▶ 05.29. 김○○ 전북도의회 출입기자단 간사 통화
- ▶ 05.29. 임○ 전북특별자치도 대변인 통화
- ▶ 06.03. 성명 발표 <'갑질'부터 '용돈' 의혹까지 불러온 대변인실 광고비 지급 논란, 철저한 감사 및 기자단 해명 촉구한다.>
- ▶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6월 4일) → 연장 통지 음(7월 12일 마감 예정)
- ▶ 06.05. 정책위원회 회의 진행 향후 대응방안 논의/ 정책위 회의 자료 참고
- ▶ 06.10. [1차 공개질의서] 전북도청 대변인실 광고비 지급 논란 관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전북도의회 기자단에 문습니다.
- ▶ 06.11. 전북시민사회단체 연명 및 참여 요청 제안서 회람
- ▶ 06.12. 보도자료 배포
- ▶ 06.13. 기자회견 진행(오전 10시 30분, 전북도의회 앞)
51개 단체 연명, 30여명 참여, 감사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접수
- ▶ 06.14. 서울신문, 미디어오늘 후속 보도 나눔

- ▶ 06.19 [2차 공개질의서] 싹짓돈 논란 키운 전북자치도청 대변인실 광고비 집행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 ▶ 06.21. 전북자치도 대변인실에서 2023, 2024년 광고비 집행 내역 받음
- ▶ [감사위원회 1차 결과] 대변인실 전 직원 증징계 처분 받음/ 광고비 부정 지급, 시간외수당과 출장비 부당 수령과 관련된 내용으로 감사위원회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 ▶ 10.18. 미디어오늘 인터뷰
- ▶ 11.21. 기획행정위원회, 예결위에서 문제 예산으로 지적됨.
- ▶ 11.22. 전북자치도청 대변인 면담

전북자치도청 대변인 면담/ 민언련 주문사항

1. 2025년 예산 중 지역신문과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광고비 증액 삭감 요구.
 - 대변인실은 25년 광고비를 증액하며 증액 사유로 "증가하는 언론 매체에 대한 대응 및 다양한 매체 광고로 인한 증액"이라고 밝힘.
 - 2024년 늘어난 매체는 14개사로 대부분 지역 주간신문(3개) 인터넷 신문(10개)이며 지역주간지 대변인실 광고 비중 높지 않음. 신규 인터넷 매체에 대한 대변인실 광고비 비중 높지 않음.
 - 오히려 2023년 이후 전북기자협회 소속 신문사, 통신사에 대한 비중 높아짐. 2023년 대변인실 광고비 상위 50%는 출입기자단 및 전북기자협회 소속사가 대다수이며 2024년에는 전북기자협회 소속사에 대한 광고비 집중이 더 심화됨
 - 2023년 1~8위는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뉴스1, 전라일보, 전북중앙신문, 전민일보, 뉴시스, CBS 순서임 (전체 금액의 30%)/ 2024년(상반기 5월까지)에는 1~4위인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전북중앙신문, 전라일보가 전체 금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언론사 증가, 다양한 매체에 대한 광고라는 이유로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신규 매체의 경우 검증이 필요해 최소한의 진입 문턱을 형성하는 것이 더 타당함.
 - 신규진입 매체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기준 없는 광고비 증액은 광고비를 수주할 수 있는 신호를 주는 것과 같아, 25년 광고비 증액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함.
 - 전북도의회는 2024 행정사무감사 및 2025 예산심의에서 문제 예산으로 지적한 상황.
2. 지표 개발 등 논의를 위해 외부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홍보비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한 공론장 및 위원회 요구

(대변인 면담 답변)

민언련에서는 25년 1분기에 진행 요구, 대변인은 상반기 안에 진행하겠다고 답변
외부 전문가 포함한 위원회 만들어서 지표 개발 등을 논의하겠다고 답변.

- 현재 경기, 충북, 전남의 사례 등을 살피기 위해 출장을 다녀왔으며 경기도 안을 선정해 도지사에게 설명한 상황이라고 함. 선거 전까지 위원회 구성과 지표 개발 방식 도입을 진행하고, 선거 이후 홍보예산 집행기준안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논의함.

3. 전북지역을 기반으로 한 방송·인쇄·인터넷 매체의 정부광고 효과성 제고를 위한 보조지표 설정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것을 제안한다. 「인쇄·방송·인터넷 매체 이용조사」를 수행할 전문 리서치 기관을 선정하고, 통계학·미디어·사회학(사회통계) 등 유관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세밀하게 조사를 설계해야 한다.

(대변인 면담 답변) 동의함하며 언론현업기관들과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함.

*25년 상반기는 위원회 설치 및 지표 개발 논의 시작이 필요. 25년 하반기는 위탁 조사 진행하는 방식으로 선거 전까지 <홍보비집행기준> 시작 전 기본적인 데이터 확보와 위원회 구성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함.

④ 대응

- ▶ 10.16. [모니터] 전북도 대변인실 언론사 광고비 부정 지급 의혹 일부 사실로 드러나, 한계 지적도(뉴스 피클)
- ▶ 11.18. [보고서] 전북자치도청 행정 광고 집행 기준과 현황
- ▶ 11.20. [보고서] 전북자치도청 대변인실의 행정광고 집행 계획은 적절한가?
- ▶ 12.03. [모니터] 내년 전북자치도 언론 홍보 예산안 심사 과정, 어떤 내용 지적됐을까?(뉴스 피클)

⑤ 향후 계획

- ▶ 성명서 발표(홍보비 집행 기준 관련)
- ▶ 타 시도 홍보비 집행 기준 조사
- ▶ 정보공개청구진행(25년 1월)
- ▶ 분석(25년 3월)
- ▶ 의원 공동주최 지자체 홍보비 집행 기준 분석 발표 및 토론회 진행
- ▶ 시민사회단체 도지사 면담 진행 과정에서 집행 기준 마련 제안

3) 전주시민축구단 단장 기자 검직 및 출입기자단 침묵

① 사건 경위

전주시 K4에서 활동하는 팀이며 팀 단장은 전주일보 고○○ 기자임. 당시 6개월 이상 선수들 급여를 연체하고 보조금을 횡령(보조금 7억 4천 중 약 6억 횡령)한 혐의로 2024년에 수사를 받음. 보조금 횡령 및 전주시 보조금 관리 실패, 선수 인건비 유용, 지역 업체 피해 등이 산재함. 전주시출입기자단 등은 해당 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있음. 본회는 출입기자단의 무보도 상황에 대한 문제를 이어갔으며 이후 전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될 수 있도록 함.

② 관련 전북의소리 주요 보도

- ▶ 09.12. 전주시민축구단장 검직 지역 일간지 기자 '사망' 파문...전주시 '민간체육단체 보조금' 투명·적법성 의문,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 ▶ 09.14. 전주시 조례 없이 '전주시민축구단' 들쭉날쭉 예산 지원...보조금 '횡령·배임 의혹' 수사 중 단장 사망, 임금체불·거래업체 대금 결제 지연 등 피해 호소 잇따라
- ▶ 09.25. "전주시민축구단, 이대로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세요...단장 사망 후 임금체불 이어 숙소서 쫓겨났지만 전북 대표해 전국체전서 최선 다할 것"
- ▶ 09.27. 전주시민축구단 '보조금 유용·횡령 의혹' 단장 사망 후 전국체전 앞두고 길거리 내몰린 선수·가족들..." '보탬e 시스템' 제대로 관리만 했더라도 이런 사태 막았을 것" "언론들 '침묵' 탄압인가, 유착인가?" 피해 제보·호소 잇따라
- ▶ 10.25. 전주시민축구단 내년부터 3년간 '리그 참가 자격' 박탈...대한축구협회 '임금체불·보조금 횡령 등 파장' 이후 심사 결과 통보, 창단 17년 만에 '해체 위기'
- ▶ 10.29. 전주시민축구단 '울고', 전북 현대 B팀 '웃고'...희비 갈린 K4리그 최종전, '팀 해체 위기' 전주시민축구단 선수들 어떻게?
- ▶ 11.26. 전주시민축구단 '임금체불, 팀 해체' 진상조사·책임규명 요구 '빗발'...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 참여 제안' 관련 민원 '폭증' 불구 외면 '빈축'

③ 보고서 및 성명

- ▶ 09.13. [모니터] 언론사 기자 검직하던 전주시민축구단 단장, 배임·횡령 혐의로 수사 받던 중 사망(뉴스 피클)
- ▶ 09.25. [성명] 수억 원의 보조금 유용 횡령 의혹이 뉴스거리가 아니란 말인가! 전주시민축구단 보조금 유용·횡령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

4) 임실 사이비 기자 대응

① 사건 경위

2019년 본회에서 대응했던 임실 김성수 기자(이해충돌, 광고협박 등)관련 구형 내려짐(3년). 5월 28일 선고 공판 진행되었으며 이후 징역 1년 선고되었다. 이후 항소를 통해 10개월로 감형되었음.

② 선고 내용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28일 공갈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실의 인터넷신문 발행인 겸 기자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14일부터 지난해 5월13일까지 임실군을 상대로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하거나 비판 기사를 작성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2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임실군청 공무원노조가 자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려 하자 노조 간부를 협박, 규탄 대상이 자신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제외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지회 사무처장으로 지내는 과정에서 제명 처분을 받자 변호사 자문 비용으로 협회 자금 500만원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됨.

▶ 1심 선고(2024-05-28)/ 징역 1년 선고, 법정 구속

③ 대응

▶ 04.22. [성명] 보복 취재와 부업으로 연명하는 사이비 기자는 퇴출해야 한다!

5) JTV 전주방송 대주주 변경

① 사건 경위

- ▶ 일진홀딩스(40%) → 일진다이아몬드(40%)
- ▶ 보고서 <JTV전주방송 최대주주 변경 신청, 주목해야 하는 이유>/ 2024.03.26.
- ▶ 회의 속기록 공개됨(㈜전주방송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2024-16-048))
- ▶ 주주 변경 승인됨/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1일 전체회의를 통해 전주방송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에 관한 안건을 심의한 후 의결함.

1) 심사 항목

「방송법」제15조의2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심사기준으로 아래<표>와 같이 적용하여 심사 평가

2) 심사위원회 심사 의견

심사위원회는 일진다이아몬드(주)의 (주)전주방송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일 그룹 내에서 소유구조가 변경되는 사항으로 실질적 지배구조의 변화 없이 우량한 재무능력을 가진 자회사로 변경되는 사항이며, 방송법 심사 항목에 따라 살펴본 결과 최대액출자자 승인 요건에 현저히 반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서 및 의견청취를 통해 확인한 사항 중에 이행 담보 및 추가적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승인 조건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건의하였습니다.

3) 검토 의견

일진다이아몬드(주)의 (주)전주방송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승인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지적사항에 대한 신청인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조건 부가가 필요함.

첫째, 이행각서의 성실한 이행,

둘째, 1년 이내에 일진다이아몬드(주)의 지주회사 지정 해제,

셋째, 일진다이아몬드(주)의 (주)전주방송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 수립.

지주회사 지정해제 기한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는 6개월의 기한을 건의하였으나, 신청인 측이 이행각서 제출 과정에서 법정 기한인 1년으로 조정을 요청함.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1년으로 기한을 조정할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제18조 위반은 발생하지 않고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도 해소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인 부위원장 의견

- 이번 변경승인 신청은 실질적 지배구조의 변화 없이 재정적 능력이 더 나은 회사의 자회사로 전주방송이 편입되는 건입니다. 신청인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

해 노력하고,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편성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신청인은 전주방송을 소유하던 지주 회사의 동일 계열회사이자 상장기업으로서 사회적 신용 및 방송사를 지원할 충분한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청인은 향후 전주방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투자계획은 전주방송의 2023년도 재허가 신청서 기재 내용과 별 차이가 없어 그 지원 의지를 확인하기에 일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 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견, 이행각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최대액출자자 신청을 승인하되,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사무처의 의견과 같이 이행각서의 성실한 이행, 구체적인 투자계획의 수립 제출 등의 변경승인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사무처에서는 변경승인 이후에 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일 위원장 의견

사무처에서는 변경승인 후속 절차 등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부과된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대응

- ▶ 03.26. [모니터] JTV전주방송 최대주주 변경 신청, 주목해야 하는 이유(뉴스 피클)

6) 전라일보 전 편집국장의 중국사무소 특혜 채용 관련

① 사건 경위

2023년 12월 전라일보 편집국장 출신 장○○은 통상 경력이 없음에도 특정 인물의 도움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중국사무소(6급)에 채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함. 경제통상진흥원 민간전문가 자격으로 중국사무소에서 근무함. 1년 인건비는 1억 3천만 원으로 확인되었음. 본회는 사건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함. 해당 국장은 2022년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사건이 있었을 때 브로커로 지목된 자사 기자를 옹호하던 인물.

② 진행 과정

- ▶ 10.07. 이수진 전북도의원 도정질의 통해 중국사무소 특혜 채용 및 불법 근무 형태를 문제 제기했으며 이후 도지사에게 시정 요구를 함.
- ▶ 10.11. 장○○ 편집국장 사직서 제출 처리됨.

② 대응

- ▶ 10.08. [모니터] <전북특별자치도 중국사무소 성과와 부소장 채용 문제 지적, 지역 일간지 편집국장 경력이 중국 통상 전문가?(뉴스 피클)>
- ▶ 2024.10.10. 패트론헌북 해당 사안 문제제기 등 여론 작업 진행

7)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에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재선임

① 사건 경위

전국민언론네트워크는 2022년 11월 서 이사장 선임 결정에 '즉각 사퇴하라' 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전국단위와 연대해 해당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집중했었음. 그러나 3월 27일(수) 제41차 정기총회와 제157차 이사회를 열고 서 회장을 이사장으로 재선임 결정함.

사회적 책임과 자율규제 기구의 위상에 맞는 이사장을 선임해야 마땅할 신문윤리위가 결국 '범죄 경력'과 '토호 유착', '정언유착'으로 비판받아온 서창훈 이사장 재선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서창훈 이사장은 2005년 전북일보 사장 시절 신문사 별관 매각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이사장으로 있는 우석대학교 등록금 유용 등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받았음. 이후에도 전북일보 최대 주주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옹호 보도를 주도한 의혹, 이를 비판한 시민단체 활동가 고소·고발, 현직 언론사 회장 신분으로 유력 정치인 대선캠프 상임대표로 합류한 행보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지탄을 받음.

② 대응

- ▶04.03. [전국민언론네트워크 공동논평] 서창훈 신문윤리위 이사장 재선임, 심히 유감이다!
- ▶이후 전국언론노조에서도 성명 발표함.

배경 및 경과

- 2024년 연대 사업은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네트워크, 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됨.

1)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

① 주요 일정

- ▶ 02.06. 온라인 회의/ 지역별 상황 공유 및 총선 대응 논의
- ▶ 03.05. 온라인 회의/ 총선 대응 논의/ 지역미디어 정책 제안 논의
- ▶ 03.12. 온라인 회의/ 총선 대응 논의/ 지역미디어 정책 논의
- ▶ 03.21. 온라인 회의/ 지역별 상황 공유 및 총선 대응 논의, 전국 강연 논의
- ▶ 05.16. 온라인 회의/ 지역별 활동 내용, 하반기 전국민언련 활동가 교류의장 진행 (경기민언련) 논의
- ▶ 06.11. 온라인 회의/ 지역별 상황 공유
- ▶ 06.19. 온라인 회의 : 지역미디어 정책 제안 후속 작업을 위한 장기적 실천 과제 도출 및 세부 계획 논의를 위한 실무자 회의 진행 결정
- ▶ 07.12. 대전 청춘학교 회의실. 중장기 미디어의제 대응을 위한 실무자 회의
- ▶ 08.23. 온라인 회의/ 지역별 상황 공유
- ▶ 09.05.~09.06. 전국민언련 실무자 워크숍(경기도 수원) 민언련 홍보 방안 지역별 발표(충북, 부산, 서울, 전북)
- ▶ 09.26. 온라인 회의 : 지역미디어 정책 제안 후속 작업을 위한 장기적 실천 과제 도출 및 세부 계획 논의를 위한 실무자 회의
- ▶ 10.07. 온라인 진행 : KBS 사장 공모 관련한 대응 논의
- ▶ 10.14. <KBS 낙하산 사장 반대 및 시민 참여 재공모 촉구>를 위한 전국민언련 동시 1인 시위 진행. 각 지역 KBS 앞 (서울, 광주, 부산, 전북, 경남 민언련 참여)/ 보도자료 지역별 발송
- ▶ 10.31. 온라인 진행 : 실무자 회의 및 지역별 발표(전북민언련 홍보비 및 미디어

자치권 관련 발제)

- ▶ 11.28. 온라인 진행 : 지역미디어 정책 제안 후속 작업을 위한 장기적 실천 과제 도출 및 세부 계획 논의를 위한 실무자 회의(지발위 20년 등)

② 지역 미디어 의제 온라인 정책 간담회 진행

22대 총선에서 제안한 '4대 분야 9개 세부 의제' 중 이견 없는 '지발위 기금 예산 편성' '지역방송발전기금 현안' 등 관련 논평은 해당 시기 바로 발표. (담당 충북)

그 외 미디어자치권, 지역미디어 공적재원 마련, 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등 의제는 내부 토론과 합의가 필요한 주제이므로 매월 토론 형식(온라인)으로 진행기로 함.

지역미디어 의제는 하반기 중 내부 숙의와 토론 과정을 거치치는 과정을 갖으며 각 의제별로 각 지역에서 담당 맡아 발제 및 추진 상황을 확인하기로 함.

시기	의제 / 대응	담당지역
9월	지역신문발전기금 관련 논평	충북
9월	지역미디어 정책 대응 공동 활동 내역 및 현황 점검 - 홍보예산, 시청자위원회, 지역 언론 지원 조례	전북(홍보예산) 부산(그 외)
10월	미디어자치권	전북
11월	지발위 20년 평가, 새 모델 방안 모색	충북, 대전
12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경기

③ [방방-곡곡 미디어 Talk] 왜곡·혐오를 넘어 공존과 진실로 가는 길 강연

한국사회의 위기를 최일선에서 고민하는 저널리스트, 시민사회단체 구성원과 함께 전국 각지 시민을 찾아가는 프로젝트 '[방방-곡곡 미디어 Talk] 시민 미디어리터러시 전국강연' 2회 차를 전주에서 진행함. 1부는 '기록자'로서 언론의 이야기/홍주환 뉴스타파 기자 발제 2부는 '당사자'와 '목격자'인 시민의 이야기, 홍주환 뉴스타파 기자·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정성욱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부서장이 패널로 참여

- ▶ (사)민언련, 전북민언련 공동주최
- ▶ 05.25. 오후 2시 전주 중부비전센터 글로리아홀에서 진행
- ▶ 약 30여 명 대면 참여, 60여 명 온라인 참여로 진행함.

2)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① 주요 일정 및 결정사항

- ▶ 01.09.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및 전북시민사회단체 신규단체 점검
- ▶ 02.13. 대표자회의 안건 검토
- ▶ 03.12. 대표자회의 진행, 슬담 3층

1. 제23기 상임공동대표단 및 감사(안)

- 상임공동대표 : 익산참여연대 (장시근 대표)/ 전북YWCA협의회 (임경진 사무총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유영진 대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대표)
- 감사 : 전북희망나눔재단

2. 제23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무자(안)

- 공동운영위원장 : 익산참여연대(이상민 처장),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이창엽 처장)
- 간사단체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3. 신규 단체 승인의 건/ 정읍동학시정감시단(2021년 창립, 대표자 하승수)

4. 2024년 사업 방향

- 특별자치도 정책제안사업
 - 전북특자도법에 담긴 특례에 대해 객관적인 이해 과정이다.
 - 전북특자도 특례 조례입법과 실행계획에 대해 검토하는 자리이다.
 - 도의회와 집행부 정책간담회를 통한 정책제안과 공론화를 진행한다.
 - 시기 : 4월 9일 오전 10시 진행/ 김남규 공동대표 강의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내용 : 전북특자도법 체계적인 이해와 우리의 역할
 - 전북특별자치도와 도의회 정책간담회 추진(후속 활동)
 - 목적 : 전북자치도에 시민단체 정책입장과 공론화
 - 시기 : 5-6월 (정책간담회 추진)
 - 내용 : 전북특자도에 대한 문제와 우려점과 정책대안 제시
 - 2024년 활동가 예산분석 사업
 - 예산분석으로 상근자의 업무역량 의제 발굴 및 정책분석 역량 강화
 - 단체별로 기초자치단체 예산분석으로 사업의 성과를 확대한다.
 - 전북연대회의 단체 활동에 대한 정책적 이해 및 소통 강화
 - 시기 : 7 - 8월 (정부 예산안 제출 이전 진행)
 - 실전 : 25년 정부 예산안 분야(9월), 자치단체 예산정보공개청구(10월)
 - 25년 국가예산안 분석 사업
 - 목적 : 국가예산안 분석을 통해 전라북도의 예산 편성 의견 제시
 - 시기 방법 : 9월 3주 차 기자회견 진행
 - 내용 : 국가 예산 변화(삭감, 증액, 신규) 전라북도 예산 편성 정책 의견 제시
 - 진행 : 단체별 분야 설정, 검토 의견 취합 발표
 - 전라북도 예산안 분석 사업
-

-
- 목적 : 예산안 분석으로 도의회의 예산안 심의에 대한 의견제시
 - 내용 : 재정 운영, 세입세출, 분야/의제별, 검토 의견(예산삭감, 검증, 증액 요구 등)
 - 진행 : 정보공개 청구(10월 초), 예산안 분석 및 발표(10-11월)
 - 하계수련회 : 활동가들의 친목 도모와 쉼(7월)
 - 총선대응사업 : 총선넷과 연대해서 함께 대응한다.
 - 지역연대 활동 지속 사업 : 3.8 여성 대회/ 4.19 묘역 참배/ 5.18 행사 등
-

- ▶ 04.09. 활동가 역량강화 사업 진행 <전북연대회의 특별자치도 정책토론회>
- ▶ 04.19. <4.19 김주열 열사 묘역 참배>
- ▶ 05.14 전주시 전반기(민선 8기) 시정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제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관련 정책 제안 사업/ 단체별로 조례 특례 항목(2가지 이상) 연구 발표
- ▶ 07.04. <민선 8기 전주시정 2년 평가 기자회견> <예산 폭탄은 없었고, 시민의 삶과 도시에 대한 위협만 있었다> : 난개발 규제 완화 사업, 심각해진 재정 위기, 불통 행정으로 무너진 민관 협치, 널뛰기 정책 변경을 문제로 지적
- ▶ 07.09. 단체별 상황 공유, 연대회의 수련회(8월 29일) 및 2025년 전북자치도 예산안 분석을 위한 일정(8월 6일) 논의
- ▶ 08.06. 전북특자도 조례 상황, 기재부 2025년 예산안 검토
- ▶ 08.29. 활동가 워크숍 진행 완주
- ▶ 09.10. 전북특자도 조례 보완 검토
- ▶ 10.02. [기자회견] 천일제지 SRF 사용시설 불허하고,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로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민의 환경 권리를 보장하라!
- ▶ 10.08. 전북특자도 2025년 예산 검토 및 향후 기자회견 등 준비 논의
- ▶ 10.15. [공동성명] 천일제지 건축법과 건축물 관리법 위반 의혹 조사하고, 건축 허가 취소 검토하라!
- ▶ 10.22. 전북특자도 재정현황 예산분석 교육, 여성인력개발센터 3층
- ▶ 11.12. 단체별 상황 공유 및 기자회견 논의
- ▶ 11.19. 전라북도 예산 기자회견, 오전 10시 도의회기자실

3) 전주리싸이클링타운 공동대책위원회

- ▶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정상화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에서 연대 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이사회에서 참여 결정함.
- ▶ 9월 11일 합의문 채택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정상화를 위한 공동합의 선언식이 진행됨. 합의문에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해고자 원직 복직과 시설 정상화를 위한 내용들이 담겼고 전주시장,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장, 성우건설 사장, 김윤덕, 정동영, 이원택, 이성윤 국회의원,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서명함.
- ▶ 2024.10.08. 국정감사 안건 대응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대표운영사인 태영건설 최금락 부회장이 10월 8일 국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함. ▲2017년부터 이뤄진 음폐수 무단 반입 ▲운영능력 없는 성우건설의 부적격 운영 ▲중대재해의 원인이 된 청호스 배관 사용 ▲집단해고 문제 해결 ▲노사정 협의기구 구성 ▲시설 안전, 환경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주무부처인 환경부에는 ▲폐기물 무단 반입에 대한 법위반 사항 등 조사와 제도상 미비점 조사 ▲폐기물 처리 시설에 안전 점검을 위한 전수조사 등을 요구.
- ▶ 2024.10.16. 대표자 회의 진행 : 공동대책위 활동 종료와 관련 등 향후 일정 공유
- ▶ 2024.10.28.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해직자 전원 복직 대타결 이행 합의문 작성
- 해직자 11명 11월 1일자로 일괄 채용,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 및 상생에 적극 협조한다.
- 전주시는 상생하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근로자 및 시민을 위한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안전 및 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 ▶ 매주 수요일 <우범기 전주시장은 귀를 열어라> - 불통 행정을 향한 시민발언대 진행. 민언련에서 온라인 생중계 담당함.

4)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 ▶ 2024. 11. 06. 본부 구성 회의/ 전북민언련 참여 결정
- ▶ 회원 오픈채팅방 개설해서 계엄선포 이후 윤석열 탄핵 활동 계획을 공유함.
- ▶ 문자, 웹 소식지 등을 통해 지속적 참여 촉구 및 집회 참여 발언
- ▶ 가입 단체 현황 (12월 24일 기준 78개 단체)

<윤석열 탄핵 집회 경과>

① 전북도민대회

구분	일시	장소	행진	인원
1차	12월14일(토) 15시	객사앞 (4개차선)		15,000명
2차	12월21일(토) 16시	객사앞 (4개차선)		2,000명
3차	12월28일(토) 16시	객사앞 (3개차선)	국민의힘	2,000명
4차	01월04일(토) 16시	객사앞 (3개차선)	완산경찰서	2,000명

② 비상촛불집회

구분	일시	장소	행진	인원
1차	12월04일(수) 17시	객사앞 (1개차선)	객리단길	500명
2차	12월05일(목) 18시	객사앞 (2개차선)	객리단길	700명
3차	12월06일(금) 18시	객사앞 (2개차선)	객리단길	1,500명
4차	12월07일(토) 18시	객사앞 (3개차선)	국민의힘	3,000명
5차	12월09일(월) 18시	객사앞 (2개차선)	객리단길	1,000명
6차	12월10일(화) 18시	객사앞 (2개차선)	객리단길	1,000명
7차	12월11일(수) 18시	객사앞 (2개차선)	객리단길	1,500명
8차	12월12일(목) 18시	객사앞 (2개차선)	객리단길	1,000명
9차	12월13일(금) 18시	객사앞 (2개차선)	객리단길	1,000명

③ 기자회견

구분	일시	기자회견 제목	인원
1차	12월04일(수) 9시	계엄 철폐! 내란죄 윤석열 퇴진! 사회대개혁과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북도민 비상행동	300명

2차	12월05일(목) 13시	윤석열 탄핵거부,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 긴급 기자회견	50명
3차	12월09일(월) 11시	내란동조 국민의 해체, 조배숙 국회의원 사퇴	100명
4차	12월12일(금) 13시	윤석열탄핵, 국힘해체 1만전북도민대회 참가호소 기자회견	10명
5차	12월17일(화) 13시	윤석열 즉각 파면!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 기자회견	30명
6차	12월27일(금) 11시	내란범 한덕수 탄핵! 내란잔당 전원 즉각체포·구속! 긴급 기자회견	30명

④ 긴급 대표자회의

구분	일시	주요내용	인원
1차	12월04일(수) 14시	긴급대표자회의, 이후 투쟁계획	10명
2차	12월08일(일) 16시	긴급대표자회의, 12월2주 투쟁계획	30명
3차	12월16일(월) 16시	긴급대표자회의, 이후 투쟁계획	30명
4차	12월27일(금) 14시	공동상임대표단회의, 투쟁계획 및 조직운영 등	8명

5)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네트워크

전북민언련은 2017년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간사단체를 맡아 네트워크 활동에 결합하고 있음. 주 활동은 정책 사안 논의 및 행정 조율, 토론회, 행사, 공모전 등을 진행하고 있음.

① 집행위원회 및 대표자회의

제5기 3차 집행위원회	2024년 4월 22일(월)	2023년 사업 평가, 2024년 상반기 대표자회의 일정 논의
제5기 4차 집행위원회	2024년 7월 30일(화)	전북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사업 예산 삭감 대응 논의
제5기 5차 집행위원회	2024년 9월 30일(월)	2024년 하반기 대표자회의 일정 논의, 2024년 공모전, 토론회 세부 일정, 예산 논의
제5기 2차 대표자 회의	2024년 5월 20일(월)	전북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사업 점검, 2024년 사업 및 예산 승인, 최형열 도의원 공동토론회 제안 검토
제5기 3차 대표자 회의	2024년 10월 22일(화)	전북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사업 예산 삭감 대응, 공모전 및 활동가 교류의 날 세부 일정 및 역할 분담 논의

② 2024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 우수 콘텐츠 공모전

▶ 2024 우수콘텐츠 공모전 선정작 (총 15개)

구분	제작자	작품명
대상	꿈마루협동조합	익산지역 발달청소년의 진학과 진로 이야기 익산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가 생긴다 제17회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참가 이야기
최우수상	남지숙	2024년 기후선거, 각 정당 기후공약 뽀개기 새만금 마지막 갯벌에 공항을 짓는다
	진안 학선동마을	학선동 참 좋은 동네
우수상	송천미디어 (송천동마을신문)	장애물 없는 도시, 척수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변화 장애를 넘어 일상으로
	재미보라	재미보라의 재밋수다: 익산동네이야기
	다놀	덕진공원 취향정, 그날의 이야기 풍남문을 지키는 코끼리_문보상전
장려상	김제 황산면 의곡마을	의곡 마을이 왔다 정순진 어르신 등장, 순진의 결혼식 존스타의 안주 4개

	함라마을신문	함라 지역 기록적 폭우로 곳곳이 물바다 / 수해복구 작업의 숨겨진 영웅들/ 허가는 익산시, 공사는 사업주, 피해는 지역 주민이 봐야하나 귀농 7년 차 청년 창업 농부 친환경 농부 차재희님을 만나다
	송천동마을신문	깨지고 갈라진 도로, 운전자는 불안하다 지속적인 관리 중요해 전주 팔복동에 고품연료(SRF) 소각시설 설치 예정, 주민과 업체 갈등 해법 필요
	마을공작소 보다	나포와 사람들
	완주 화정마을	그때 그 시절 / 첫사랑 / 새참
	밤티널TV	밤티마을 다큐[밤샘] / 송전선로 현장 르포
	완주사람들	완주사람들 1편 / 완주사람들 2편 / 완주사람들 3편
	김은총	청년문화예술인들의 지역 생존기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공로상	꽃샘라디오 장옥자님	

③ 전북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 교류와 연대의 날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저변을 확대하고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과 교류 기회 제공,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 우수 콘텐츠 공유를 통한 마을미디어 중요성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로 진행하고 있음

- ▶ 일시 : 2024년 11월 30일(토) 17:00~19:00
- ▶ 장소 : 전주공동체라디오방송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825 4층) & 5층
- ▶ 주최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 주관 :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네트워크,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 ▶ 후원 : SK브로드밴드,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 ▶ 인원 : 약 70명(전북 지역 마을 미디어 활동가 및 시민, 단체관계자)

시간	내 용
16:30 ~ 17:00	접수 시작, 다과 제공
17:00 ~ 17:10	행사 안내 및 내빈 인사
17:10 ~ 17:20	선정작 하이라이트 영상 보기

17:20 ~ 17:40	축하 공연 (남원 고사리 팀)
17:40 ~ 17:55	대상 후보작 콘텐츠 시청 & 투표
17:55 ~ 18:40	시상식 진행 심사위원장 심사평 상패 수여 & 수상자 소감 대상 집계 결과 발표 최우수상/ 대상 상패 수여 & 수상자 소감
18:40 ~ 18:50	공지사항 전달, 단체 사진 촬영, 기념품 증정

④ 마을공동체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도의회 합동 토론회 개최

- ▶ 일시/장소 : 06.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3층 총회의실
- ▶ 주최/주관 : 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
- ▶ 협력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네트워크
- ▶ 세부 사항

시간	내 용
13:50~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 장낙인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 발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을미디어를 통한 공동체 강화 방안(20') : 안수정 (완주군의회 정책지원관) 2) 마을미디어 사회적 가치 증진과 거버넌스 협력 모델(20') : 허 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
15:00~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형열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농산업경제위원회) 2) 정충식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네트워크 집행위원장) 3) 이주봉 (군산대학교 미디어문화학부 교수)

⑤ 마을공동체미디어와 사회적 임팩트 토론회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지역 주민과 공동체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내며, 다양한 이야기를 세상과 공유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사회적 메시지를 강화하며 지역사회에 실질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미디어다. 마을과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역 문제, 환경문제, 사회적 갈등 등 다양한 지역의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데 효용성을 지니고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지역에서 영향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콘텐츠를 잘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과 지역의 여러 주체와 함께 그리고 지속가능한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연대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사회적 효용성과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임팩트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논의를 진행한 토론회

- ▶ 일시장소 : 11.30. 전주공동체라디오방송국 전주FM 5층
- ▶ 주최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 주관 :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네트워크,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 ▶ 후원 : SK브로드밴드,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 ▶ 세부 사항

○ 사 회 : 최성은(전주시민미디어센터장)

○ 발 제

- 1) 대구 마을공동체미디어 임팩트 콘텐츠 프로젝트 사례 - 우리동네 무더위 쉼터 사례를 중심으로 : 김은아 (성서공동체FM)
- 2) 서울 마을공동체미디어 참여와 임팩트 사례 : 김주현 (미디어액트)
- 3) 전북 마을공동체미디어 임팩트 사례1 - 평화동마을신문 사례를 중심으로 : 김수돈 (평화동마을신문 편집인)
- 4) 전북 마을공동체미디어 임팩트 사례2 - 송천동마을신문 사례를 중심으로 : 유수경 (송천동마을신문 편집장)

○ 토 론

신유정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신현이 (꼬뮤니티 대표)

안충환 (완주미디어센터장), 손주화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네트워크 집행위원)

6) 기타 연대

① <시민단체 초청 '사제 문규현 이야기' 북 콘서트> 참여

▶ 10.19. 오후 3시, 평화의전당,

▶ 생중계 민언련 유튜브 채널로 진행

배경 및 경과

- 웹소식지와 종이소식지 발행, 문자 안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웹소식지는 월 2회 정도, 오픈율은 20% 이상 꾸준히 나오고 있음. 특히 웹소식지는 지역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오픈율이 높으며 대외에 민연련 활동을 알리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
- 2024년 소식지 <말하라>는 재정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발행하고 문자로 회원들에게 링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회원 중심으로 배포되는 홍보 활동임.

1) 홍보

① 웹 소식지 발행

발행일	제목	오픈율
2024.12.04.	[성명] 위험적 비상계엄! 내란 시도! 윤석열 퇴진하라!	19.4%
2024.11.26.	[행사] 2024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 교류와 연대의 날	20.1%
2024.11.11.	[공모] 제12회 전북민주언론상 후보작 추천받습니다	21.4%
2024.11.11.	시민이 뽑은 <2024년 10월의 좋은 기사> 선정 결과 안내	22.7%
2024.11.07.	2024 전북마을미디어 우수 콘텐츠 공모전 안내	22.9%
2024.10.14.	시민이 뽑은 <2024년 9월의 좋은 기사> 선정 결과 안내	23.4%
2024.10.10.	[보도자료] 전북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청탁금지법 고발 건 소속 기관에 과태료 부과 사안으로 통보	25.5%
2024.09.25.	[성명] 수역 원의 유용할 횡령이 뉴스거리가 아니란 말인가! 전주시민축구단 관련	25.0%
2024.08.13.	시민이 뽑은 <2024년 7월의 좋은 기사> 선정 결과 안내	25.3%
2024.08.06.	2024 전북민연련 회원 모꼬지 함께 해요	25.2%
2024.07.24.	[보도자료] 도민 정서 안중에도 없던 전북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발 취지 기자회견 진행 안내	23.9%
2024.07.22.	[기자회견 연명 및 고발 참여 요청] 재난 피해 상황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도의원, 도의회기자단 술자리 간담회 관련	31.9%
2024.07.16.	[공동 성명] 도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었나? 전북 국회의원·전북도의원·전북도의회 기자단 재난 피해 속 술자리 간담회를	28.1%

	보며	
2024.07.09.	시민이 뽑은 <2024년 6월의 좋은 기사> 선정 결과 안내	26.4%
2024.06.19.	[2차 공개질의서] 싹짓돈 논란 키운 전북자치도청 대변인실 광고비 집행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21.0%
2024.06.12.	시민이 뽑은 <2024년 5월의 좋은 기사> 선정 결과 안내	23.8%
2024.06.12.	[보도자료] 전북특별자치도청 대변인실 선심성 광고비 지급 논란 관련 기자회견 안내	26.1%
2024.06.11.	[연명 및 참여 요청] 전북도청 대변인실 선심성 광고비 지급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 연명 및 참여 요청	29.0%
2024.06.10.	[공개질의서] 전북도청 대변인실 광고비 지급 논란 관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전북도의회 기자단에 묻습니다.	24.3%
2024.06.03	[성명] '갑질'부터 '용돈' 의혹까지 불러온 대변인실 광고비 지급 논란, 철저한 감사 및 기자단 해명 촉구한다.	25.0%
2024.05.29	전북민언론 라디오 방송 함께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26.9%
2024.05.17	시민이 뽑은 <2024년 3월~4월의 좋은 기사> 선정 결과 안내	21.8%
2024.05.09.	미디어리터러시 특강 안내:) 왜곡·혐오를 넘어 공존과 진실로 가는 길	21.9%
2024.04.22.	[성명] 보복 취재와 부업으로 연명하는 사이비 기자는 퇴출해야 한다!	27.2%
2024.04.12.	제22대 총선: '정치선거 유튜브' 확장 나선 전주MBC, JTV전주 방송	21.4%
2024.04.03.	제22대 총선, 지역 미디어 정책 제안 정당별 답변 결과	19.9%
2024.04.03.	[전국민언론 공동논평] 서창훈 신문윤리위 이사장 재선임, 심히 유감이다!	19.7%
2024.03.28.	[성명] '여사' 호칭 논란이 토론회 거부 명분이 될 수는 없다! - 전주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선거토론회 보이콧 입장을 보며	21.9%
2024.03.25.	제22대 총선, 지역 시민의 미디어자치권 실현 위한 9개 의제 제안!/ 전북선거방송토론회 현황	21.2%
2024.03.12.	시민이 뽑은 <2024년 2월의 좋은 기사> 선정 결과 안내	19.4%
2024.03.06.	2024 총선미디어감시단 발족/ 정기총회 현장/ 박민 신임 공동대표 선출까지!	20.4%
2024.02.28.	시민이 뽑은 <2024년 1월의 좋은 기사> 선정 결과 안내	23.2%
2024.02.13.	전북민언론 <2024 정기총회> 안내 (2월 16일 저녁 7시!)	23.1%
2024.01.18.	[모집] 부동산 PF 위기와 전북에 미칠 영향은? 이광수 대표 특강	19.4%
2024.01.12.	[전국민언론네트워크] 윤맹 뉴스도 모자라 지역 뉴스 축소하는 박민 사장 제정신인가!	20.9%
2024.01.02.	전북민언론 제12기 이사회 추천 및 기부금 영수증 안내	26.1%

② <2024 말하라> 지면 구성

지면	내용
1면	표지
2면	목차
3면	여는 말
4면~5면	윤석열 퇴진 운동본부 활동 외
6면	2024 총선 미디어 감시 활동
7면	2 방방곡곡 미디어 Talk, 시민 미디어리터러시 강연
8면~9면	지역 언론계 비위 대응
10면	전북도청 홍보예산 보고서
11면	전북 시민사회 연대활동
12면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 연대와 교류의 날
13면	2024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 우수 콘텐츠 공모전 선정작
14면~15면	제12회 전북민주언론상, 시상식, 2024송년회
16면~18면	지역 언론인을 만나다 - 전주MBC 정자형 기자
19면~21면	희망인을 만나다 - 윤석열 퇴진 집회에서 만난 회원들
22면	회계 보고
23면	후원 회원 명단
24면	2024 정기총회 광고

2) 회원 소모임 활동

① 하리 텃밭 모임

- ▶ 04.06. 총 15인 참석, 회원 친목 활동 및 감자 심기 외
- ▶ 05.11. 총 25인 참석. 회원배가를 위한 활동 공유 및 회원 친목 모임 진행
- ▶ 08.02. 회원 친목 모임 등
- ▶ 09.07. 김장용 배추, 무 등 모종 심기
- ▶ 10.26. 삼례하리텃밭 작물 나눔 및 식사 모임 진행
- ▶ 11.16. 삼례하리텃밭 작물 나눔 및 식사 모임 진행



② 영화모임

의미 있는 영화를 선택해 함께 본 후 소감을 나누는 영화모임 <달달>은 올해 두 번의 모임을 진행했으며 7명의 회원이 함께함. 최소 분기별 모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례화가 필요함.

- ▶ 06.28. 7명 참석 <소울> 상영
- ▶ 07.26. 7명 참석 <프렌치스프> 상영

③ 재무제표 분석모임

자광,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전주시내버스 등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활동가 모임인 <재무제표 분석모임>은 기업과 지자체의 보조금, 위탁 계약 형태가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2024년 전국적인 부동산PF 위기가 전북 지역에 미칠 영향 및 자광의 대한방직 부지 PF 사업의 문제 등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시민 특강 자리를 의원 공동 주최로 마련해 진행함.

- ▶ 이광수(광애널리스트) 시민 특강 <부동산PF 위기와 전북지역에 미칠 영향은?>
- 02.02. 오후 2시~5시,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컨퍼런스룸
- 공동 주최 : 한승우 전주시의원, 재무제표분석모임, 전주시민회, 전북민언련
- 50여 명 참석, 전주시·전주시의회 관계 부서 담당자 참석

④ 회원 모꼬지

- ▶ 일시장소 : 08.24.~08.25. 진안 외사양마을(에코타운)
- ▶ 총 32명 참석 (성인 26명, 아동 6명)

3) 위원회 활동

① 소식지 편집위원회

- ▶ 2024.10.17. 소식지 편집위원회 회의 진행
- ▶ 김민지, 고영준, 김병직, 이은영, 오청균, 문주현, 최태호 위원 등 총 7명 활동
- ▶ 소식지 제작, 편집/ 2024년 예산 부족으로 온라인으로만 발행(12월 31일)

② 정책위원회

- ▶ 2024.03.08. 지역미디어 정책 제안 초안 검토
- ▶ 2024.06.04. 현안 정책 사업 검토(대변인실 선심성 광고 문제 등)

1) 회원 배가 추진 특별위원회

① 진행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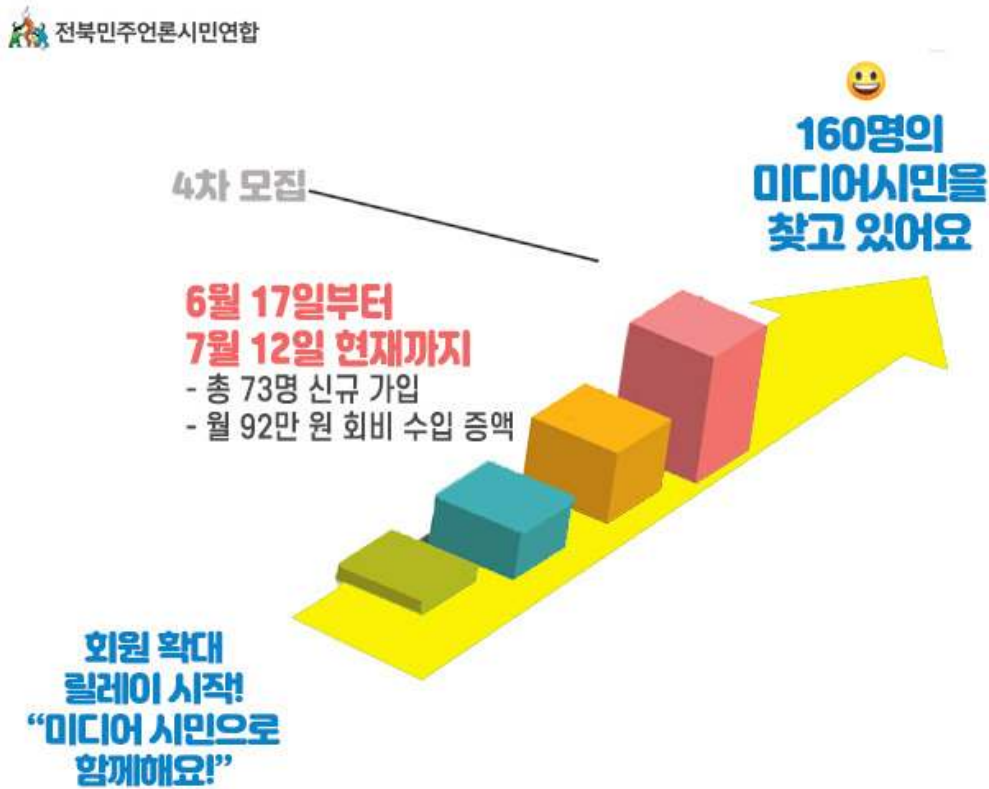
- ▶ 1차 위원회 회의 5월 2일(목) 오후 6시 30분에 사무처에 진행. 이종규·박민 대표, 이평강·오청균·손주화 이사 참여했으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함.
- ▶ 6월 17일부터 12일까지 4차에 걸쳐 회원 배가를 진행함. 1차 집계(21일)에는 총 31명(회비 40만 원), 2차 집계(28일)에서는 총 7명이 신규 가입, 4명의 회원이 증액함. 3차 집계(7월 5일)는 총 6명이 가입. 4차 집계(7월 12일) 기간에는 25명이 가입 및 증액, 일시 후원이 있었음.

“행동하는 미디어 시민”

구간	일시, 다액 후원	기본 후원	소액 후원
방식	- 후원처 발굴 필요 (기업 후원) - 노조 정기후원 발굴 (하이트 등 문의)	- 지인 중심의 전통적 방식의 회원 배가 릴레이 진행 - 이사회·회원이 이꿈이 주자로 참여하여 특정 일자에 신입회원 가입 유도	- 전북 민연련 활동의 외연 확장을 위한 활동 회원 모집을 목표로 함 - 언론 운동에 동참하고 싶은 온라인 미디어 시민을 찾고자 함.
회비 가입	10만 원 이상 일시 후원	1만 원~2만 원	5천 원·1만 원
누적 목표	목표! 2,000,000원	목표! 8~9,000,000원	목표! 1,000,000원
참여 중심축	고문 + 대표	이사회 중심 + 이꿈이 주자 (최소 50인 참여 필요)	온라인 + 회원배가 특별위원회
후속 모임	대표단 식사 진행	주기적 대면 모임 진행 - 회원 소모임 참여(텃밭모임 등) - 친목 모임 중심	민연련 신입 회원 만남의 날/ 사무실 초청 중심 일상 속 온라인 회원 참여 활동 진행 (이달의 좋은 기사 온라인 투표, 의제 투표, 캠페인 참여 의제 만들기)

홍보 방식	기본 방식 : 홈페이지, 문자, SNS, 웹 소식지 (시작, 진행, 결과 공지) ※ 회원배가 특별 페이지 운영 (5/7까지 제작) ※ 회원 가입 온라인 창구(구글 폼) ※ 쇼츠, 유튜브 등 제작 ※ 인스타 소액 광고 진행 ※ 오픈 채팅방 운영
보고 방식	※ 카카오톡 회원배가 대화방 통해 진행 경과 실시간 공유

<진행 경과 홍보 이미지>



② 회원 릴레이 최종 결과 : 목표의 73% 달성

- ▶신규 가입 50명 (600,000원)/ ▶재가입 16명 (200,000원)/ ▶증액 10명(183,000원)
월 회비 증액 금액(983,000원)
- ▶일시 후원(총 600,000원)
- ▶장기 미납자 확인/ 총 19명 장기 미납자 중 10명 해지 처리, 4명 계좌 변경 등

1) 전주공동체라디오방송 제작단 참여 활동

- ▶2024년 5월 31일 첫 방송,
-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오후 4시 전주공동체라디오 방송국에 편성되어 방송
- ▶2024년 12월까지 총 8회 방송

방송일시	출연자	방송내용
2024년 5월 31일	조재익	방송 소개,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 무주신문 이진경 기자 인터뷰
2024년 6월 21일	조재익, 고미아, 신경나	부안 지진 관련 뉴스,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 전북의소리 박주현 대표 인터뷰
2024년 7월 19일	조재익, 유시선, 고미아	전북 삼계탕 물가, 장애인, 전주페이퍼 황화수소 의혹 관련 보도
2024년 8월 23일	조재익, 고미아, 신경나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코로나19 재유행 관련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 전북의소리 박주현 대표 인터뷰
2024년 9월 20일	조재익, 고미아	추석 명절 관련 보도, 무상교육 예산 위기 관련 보도
2024년 10월 18일	조재익, 고미아	축제 관련 기사, 교육 관련 기사 이야기
2024년 11월 22일	조재익, 신경나	전북 올림픽 유치 도전, 완주문화원 관련 보도 이야기
2024년 12월 20일	조재익, 고미아	탄핵 정국 관련 언론 보도 이야기, 제12회 전북민주언론상

2) 유튜브 생방송 촬영, 방송

- ▶2024년 총 13회(기자회견 2건, 연대 요청 활동 10건, 촛불 집회 1건) 촬영 및 방송

방송 일시	방송 내용	비고
2024년 6월 13일(목)	전북자치도 대변인실 선심성 광고비 지급 관련 기자회견	
2024년 7월 3일(수)	우범기 시장 들어라 이어말하기 1편 - 한승우 전주시의원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공대위에서 생방송 연대 활동 요청

2024년 7월 10일(수)	우범기 시장 들어라 이어말하기 2편 - 최정학 교수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공대위에서 생방송 연대 활동 요청
2024년 7월 17일(수)	우범기 시장 들어라 이어말하기 3편 - 이정현 전북환경련 공동대표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공대위에서 생방송 연대 활동 요청
2024년 7월 25일(목)	도민 정서 안중에도 없던 전북 국회의원, 도의원, 도의회 기자단 고발 취지 기자회견	
2024년 8월 7일(수)	우범기 시장 들어라 이어말하기 4편 - 홍정훈 변호사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공대위에서 생방송 연대 활동 요청
2024년 8월 14일(수)	우범기 시장 들어라 이어말하기 5편 -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공대위에서 생방송 연대 활동 요청
2024년 8월 21일(수)	우범기 시장 들어라 이어말하기 6편 - 조성옥 전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대표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공대위에서 생방송 연대 활동 요청
2024년 9월 4일(수)	우범기 시장 들어라 이어말하기 7편 - 권영국 정의당 대표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공대위에서 생방송 연대 활동 요청
2024년 9월 25일(수)	우범기 시장 들어라 이어말하기 8편 - 현대자동차전주공장 노래패 디딤소리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공대위에서 생방송 연대 활동 요청
2024년 10월 16일(수)	우범기 시장 들어라 이어말하기 9편 - 김형우 현대자동차전주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공대위에서 생방송 연대 활동 요청
2024년 10월 19일(토)	사제 문규현 이야기 북 콘서트	시민사회 생방송 연대 활동 요청
2024년 12월 7일(토)	윤석열 퇴진 시민 촛불 문화제	전주공동체라디오에서 지원 받음

재무상태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 2024년 총수입 및 지출 결산

수입 합계		109,108,148
지출 합계		109,108,148
	운영비 지출	100,850,778
	사업비 지출	8,257,370

▶2025년 일반회계 이월금 : 4,003,822원

2) 2024년 수입 결산

정기후원금	CMS이체	72,687,000
	통장이체	3,290,000
비정기후원금	개인	10,085,000
	법인·단체	200,000
기타 수익	재정사업	1,154,190
	회원사업	1,620,000
	정책사업	850,000
	결산이자	78,038
	전월이월금합산액	9,143,920
차입금		10,000,000
수입 합계		109,108,148

▶전년도 일반회계 이월금 : 262,180원

▶차입금 상황

2022년 400만 원 차입. 2023년 400만 원 차입 (→ 2023년 10월, 7백만 원 반환)
 2023년 12월 360만 원 추가 차입 → 차입금 잔액 : 460만 원, 남은 적립금 : 1,040만 원
 2024년 1차 500만 원 차입, 차입금 잔액 : 960만 원, 남은 적립금 : 540만 원
 2024년 차입금 2차 500만 원, 남은 적립금 : 40만 원

3) 2024년 운영비 결산

	급여(세금 포함)	61,979,240
인건비	퇴직적립금	4,821,600
	4대 보험	7,037,110
	임차료	월임대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전기요금	1,198,252
	통신비	1,304,220
	CMS 은행수수료	1,185,920
	CMS 휴먼소프트웨어	702,000
	CMS 금융결제원	528,000
	퇴직연금운용 수수료	806,264
	은행 송금 수수료	9,400
	우편대금	44,060
일반운영비	사무기기 유지 관리비	638,400
	웹 기반 이용료	575,570
	업무용 소모품 구입	461,680
장치관리비	사무기기, 장비 구입	-
정기간행물 및 자료 구입	신문대금	712,000
	자료 구입비	57,500
기타	월 이월금 합산액	12,885,562
운영비 합계		100,850,778

4) 2024 사업비 결산

정책사업비(뉴스피클 발송비 외)	1,890,200
회의비	398,000
여비교통비	306,100
교육사업비	-
재정사업	-
연대사업	1,720,000
회원사업	944,020
행사비	2,999,050
사업비 합계	8,257,370

※ 특별회계 부분

분류	2024년 1월 1일 기준	2024년 12월 31일 기준
일반 회계	262,180	4,003,822
특별 회계	23,205,299	705,520
잔액	23,467,479	4,709,342

- ▶ 특별회계/ 퇴직적립금(1인)을 신한은행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으로 이전(통장 0392)
- ▶ 특별회계/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네트워크 통장 이전(통장 4011)
- ▶ 특별회계/ 공모사업 보조금 지출로 잔액 지출(통장 9324)
- ▶ 특별회계/ 사무실이전적립금 잔액 예치(통장 0415)
-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첨부

회계 별첨 자료

- 목차

1. 2024년 계좌 보유 현황 및 통장 잔액
 2. 2024년 기자재 보유 현황
-

계좌 보유 현황 및 통장 잔액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개설 통장 (2025년 이월금: 4,003,822원)

계좌번호	사용 목적	통장 개설 일자	2024년 1월 1일 잔고	2024년 12월 31일 잔고
510-23-03 18297 (전북은행)	사무실 대표 입출금식 통장 -CMS 통장 -사무실 일반 운영비 및 사업비 지출 통장	2008년	262,180	4,003,822
510-23-03 18302 (전북은행)	사무실 예비 입출금식 통장 -2022년에는 공모사업용 통장 으로 활용 -2019년에는 교육사업 및 재정 사업용 통장으로 활용 (수강료 입금통장)	2008년	0	0
510-23-03 19324 (전북은행)	사무실 예비 입출금식 통장 -2022년~2024년 공모사업용 통장으로 활용. 이후 회원사업 통장으로 일시적 활용 -2019년에는 교육사업용 통장 으로 활용 (수강료 입금통장)	2009년	601,110	0
505-23-03 20415 (전북은행)	사무실 예비 입출금식 통장 -사무실이전적립금	2011년	0	400,000
505-23-03 20392 (전북은행)	사무실 예비 입출금식 통장 사무실 이전비 충당 적립금 & 퇴직적립금 통장	2011년	12,977,490	0
510-13-03 34011 (전북은행)	사무실 예비 입출금식 통장 -2022년 연대사업인 마을미디 어네트워크 회비 통장으로 사 용 중 -2019년에는 사무실 식사비 적 립 통장으로 활용함	2013년	1,119,455	0
510-13-03 34003 (전북은행)	사무실 예비 입출금식 통장 사무실 인건(공제한 세금 적립 통장)으로 활용 중	2013년	361,864	305,520
1024-02-0 416296 (전북은행)	사무실 직원 퇴직금 예금 통장	해지	8,145,380	0
합계			23,467,479	4,709,342

기자재 보유 현황

▶ 2024년 12월 31일 기준

입수 시기	종류	모델명	개수	비고
2020년	데스크탑 PC		1	
2022년	데스크탑 PC		1	
2020년	모니터	LG	1	
	모니터(회색 테두리)	DELL	1	
2020년	프린터(흰색)	Officejet PRO 7740	1	
2021년	냉난방기	Carrier	1	
2010년	에어컨	삼성	1	*실외기 고장 수리 필요
2010년	에어컨(벽걸이)	삼성	1	*실외기 고장 수리 필요
2015년	히터	WINIX	2	
2010년 이전	선풍기(소)		1	
2014년	냉장고	LG	1	
2021년	정수기	RUHENS	1	
2014년	전자레인지	대우	1	
2014년	커피포트		1	
2019년	티 포트	TT-001K	1	
2017년	세절기	현대오피스 PK-525x	1	
2022년	인터넷전화 수화기	KT	3	
2018년	공유기	IPTIME	1	
2016년	휴대용 프로젝터		1	
2021년	발표용 무선 리모콘		1	
2021년	스피커(프로젝터용)		1	
	흰색 스크린		1	
2019년	HDMI - RGB 컨버터		1	
	간이 책상(소)		1	
	간이 책상(대)		1	
	X 배너대		2	
2024년	깃발대		1	
	휴대용 원형 멀티탭		1	
2021년	마이크		3	
2021년	마이크 스탠드		2	
2021년	마이크 케이블(소)		3	
2021년	마이크 케이블(대)		2	
2021년	스탠드 조명		2	
2021년	크로마키 배경		1	
2021년	믹서	야마하	1	

2021년	믹서-컴퓨터 케이블		2	
2021년	캡처보드	캠 링크	1	
2010년	디지털카메라	Canon IXUS 980 IS	1	
	- 충전기		1	
	- 배터리		1	
2018년	액션 캠코더	GoPro	1	
	- 충전케이블		1	
	- 메모리카드 16GB		1	
	- 메모리카드 128GB		1	
2020년	캠코더	Canon	1	익산공공영상미디어 센터 대여
	- SD카드 16GB		1	
	- 배터리		3	
	- 충전기		1	
	- 배터리 충전기		1	
2020년	삼각대		1	
2020년	카드 리더기		1	
2021년	캠코더(4K)	SONY FDR-AX43	1	비영리단체 IT 지원
	- 충전기		1	
2021년	노트북	HP 노트북	1	
	- 충전기		1	
2021년	SD카드 리더기	RDF5	1	
2021년	SD카드(256GB)	SanDisk ExtremePRO	2	

▶ 2023년 폐기 목록

	데스크탑 PC		1	6월 21일 폐기 완료
	데스크탑 PC		1	6월 21일 폐기 완료
2017년	데스크탑 PC		1	6월 21일 폐기 완료
	모니터(회색 테두리)	DELL	1	6월 21일 폐기 완료
	모니터(검정 테두리)	DELL	1	6월 21일 폐기 완료
	모니터	POTAION	1	6월 21일 폐기 완료
	프린터(검은색)	SAMSUNG 레이저 프린터	1	6월 21일 폐기 완료
2017년 이전	프린터(검은색)	Officejet PRO 8640	1	6월 21일 폐기 완료
2010년	복합기(복사, 인쇄)	SINDORICOH	1	6월 21일 폐기 완료
	스피커		2	6월 21일 폐기 완료

안건

● 목차

1. 2024년 사업·회계 감사 보고서 채택
 2. 정관 개정의 건
 3. 2025년 사업안 승인의 건
 4. 2025년 예산안 승인의 건
-

1. 감사 개요

1) 감사 근거

본 감사는 제3절15조②항(예산, 결산의 심의 의결) 및 제5절22조(감사), 제4조(재정) 규정에 따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에 대한 2024년도 재정 현황 및 운영과 그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바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2) 사업·회계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3) 감사 일시 : 2025년 2월 13일(목) 오후 6시 30분, 대면 감사 진행

2. 감사 결과

1) 사업 감사

2024년에는 전체적으로 9개 사업을 수립했으며 이 중 5개 사업이 진행 완료되었고 3개 사업이 일부 진행, 1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중점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예산과 구체적 사업안, 홍보를 통한 회원·시민 모집 등이 미진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민미디어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제시하고 싶은 비전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모니터 활동, 현안 대응, 보고서, 회원 활동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역 언론계에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사건에 대한 현안 대응 및 공론화가 잘 이뤄진 2024년이었습니다. 반면, 현안 대응 후 이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조율 및 정책토론회 등이 필요합니다. 정책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한 후속 작업이 이어지기 위해 정책위와 사무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사업이 부족한 점을 총회준비위원회에서 거론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도 2025년 사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전북민언

련을 구성하는 위원회 및 회원활동 활성화를 통한 조직 정비에 나서야 합니다. 2025년 주요 사업 안으로 올라와 있는 운영위원회 전환이 조직 활성화와 이어질 수 있는지 논의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및 회원 간의 공론 작업(설문, 간담회 등)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2) 회계 감사

2022년부터 발생했던 차입금은 총 1,460만 원으로 일부 상환 및 재차입을 반복하며 현재 잔액 40만 원을 남기고 전부 소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예비비가 세워져 있지만 향후 긴급하게 발생할지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일정 적립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예산은 인건비 삭감 등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조정한 것인 만큼 예산 유동성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후원 주점을 2025년 재정 사업으로 올렸으나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이사회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3년 감사에서 활동가 퇴직적립금 관련 <기업형 연금 상품>에 가입할 것은 재 건의했으며 기타 안건으로 운영내규 연차 규정 등을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확인 결과 일반 통장에 거치하던 퇴직적립금을 <기업형 연금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연차 규정도 이사회를 거쳐 개정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업비 예산이 매우 적어 중점 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공모사업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자금 마련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민언련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감사들도 임기 후에도 전북민언련과 늘 함께하며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21일

감사



여 민 영



최 태 호

<주문사항> 회칙 제3절(총회)제15조(의결사항)

1. 회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제5장(보칙) 제38조(회칙개정)에 의거하여

정관 개정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임원 임기에 관한 건

임원 임기에 2년만 규정되어 있고, 시작과 종료에 대한 명시가 없어 임기적용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정관 개정 안건임. 행정적 절차 과정에서도 필요한 부분임.

개정 전	개정 후
<p>제11조(임기)</p> <p>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p>② 임원 선출과 관련한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p>	<p>제11조(임기)</p> <p>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u>(전직 임원의 임기는 임기 총회가 있는 해의 2월 말에 종료되며 3월 1일부터 신임 이사 임기가 적용됨)</u></p> <p>② 임원 선출과 관련한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p>

2) 분과장 이사회 의무 참여 폐지의 건

회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단체 내 분과 모임과 관련, 기존에는 분과장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사 중 1인이 분과장을 맡고, 분과장을 임원으로 둬. 하지만 회원 사업에서 실제 참여하는 회원들이 분과장을 맡는 것이 회원사업 활성화, 회원 참여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손주화 사무처장이 2024년 3월 이사회에서 냈으며, 이에 분과장의 임원 분리, 이사회 참여 의무 폐지를 안건으로 냄.

개정 전	개정 후
<p>제2절 임원 제10조(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동대표 ② 정책위원장 ③ 재정위원장 ④ 조직위원장 ⑤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장 ⑥ 미디어교육위원장 ⑦ 미디어위원장(2021년 신설) ⑧ 미디어이용자권익위원장(2022년 신설) ⑨ 특별위원회 위원장 ⑩ 미디어연구소장 ⑪ <u>분과장</u> ⑫ 사무처장 	<p>제2절 임원 제10조(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동대표 ② 정책위원장 ③ 재정위원장 ④ 조직위원장 ⑤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장 ⑥ 미디어교육위원장 ⑦ 미디어위원장(2021년 신설) ⑧ 미디어이용자권익위원장(2022년 신설) ⑨ 특별위원회 위원장 ⑩ 미디어연구소장 ⑪ 사무처장
<p>제4절 이사회 제16조(지위 및 구성) ①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다음 총회까지 그 역할을 수행하며 본회의 운영 및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공동대표, 사무처장, 위원장, <u>분과장</u>, 미디어연구소장을 포함하여 30인 내외로 구성한다.</p>	<p>제4절 이사회 제16조(지위 및 구성) ①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다음 총회까지 그 역할을 수행하며 본회의 운영 및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공동대표, 사무처장, 위원장, 미디어연구소장을 포함하여 30인 내외로 구성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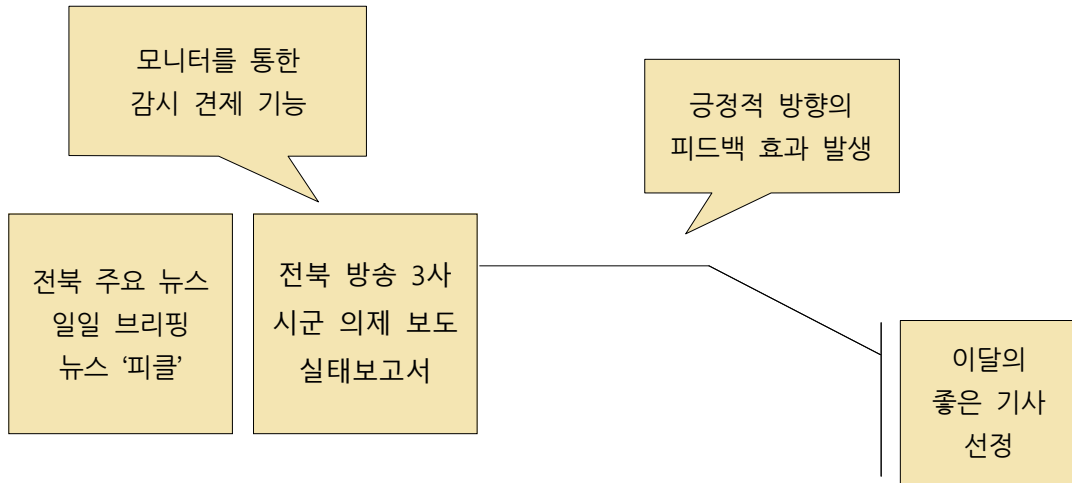
<주문사항> 제3절(총회)제15조(의결사항)

3.연 사업 방향 수립 및 사업 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안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사업 진행 요약(안)

항목	내용
시민미디어 플랫폼	정기적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공동체라디오 소위원회 구성 유튜브 <말하랑게TV> 채널을 통한 콘텐츠 연결 ※공동체라디오 제작단(분과) 콘텐츠 제작 활동 (집중 사업)
감시·견제 현안·대응	언론사 및 기자 윤리 위반 사례 현안 대응 출입처, 주재기자·출입기자단 등 일상적 언론개혁활동 영역 시민신고센터 제보 통한 언론 대응 활동 및 연계보고서 진행 예산, 행정 감시 활동을 기반으로 한 언론 대응 ※윤석열 정부 언론 정책 및 사회대변혁을 위한 의제 구성
모니터	전북주요뉴스 <뉴스피클>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 전북민주언론상 공모 및 선정 ※2025년 대선 모니터 진행 ※월 1회 기획/주제 모니터 진행
연구·토론	실태 보고서 발표/ 시청자위원회, 독자위원회, 방송패널 분석, 신문오 피니언필진, 지자체 홍보예산 분석 실태 보고서 발표 ※현안별 긴급 토론회 및 강좌 진행(학회, 기자, 시민, 회원)
교육	시민 대상 명사 특강 진행(사안 중심으로 불특정 시기 진행) ※지역 우수 콘텐츠 컨퍼런스
연대	각 단위 연대 사업 진행 -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언련 네트워크/ 전북풀뿌리언론 운동연대/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네트워크/ 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
재정	※재정 마련을 위한 후원 주점 진행
조직	이사회, 정책위원회, 소식지위원회, 회원조직 사업 일상적 진행 - 재무제표 분석 모임/ 영화모임/ 텃밭모임 등 ※운영위원회로 전환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 및 속의 과정 진행
홍보	웹 소식지 발행, 회원 <오픈 채팅방> 운영 연간 소식지 <말하라> 발행

1) 언론 모니터·보고서



▶기간: 2025년 3월-12월 상시 사업

- ① 전북 주요 뉴스 '피클'
- ② 전북 방송 3사 시군 의제 보도 실태보고서
- ③ 모니터 대상/ 매체 변경 시기(3월, 9월)

지역 신문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지역 방송	전주MBC 뉴스데스크, KBS전주총국 뉴스9, JTV 8뉴스
지역 주간지	김제시민의신문, 부안독립신문, 열린순창, 주간해피데이, 진안신문, 무주신문, 완주신문(신규)
인터넷 신문	전북CBS 노컷뉴스, 전북의소리
케이블	LG헬로비전 전북방송, SK브로드밴드 전주방송(신규)
기타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10대 매체, 종합편성채널 등 참고

- ④ 이달의 좋은기사
- ⑤ 전북민주언론상
- ⑥ [신규] 대선모니터(예정)/ 언론신고센터 운영 ▶전북지역에서 요구하는 대선 의제에 관한 감시 및 언론보도의 편향, 사주의 캠프 관여 등 감시 활동 진행
- ⑦ [신규] 기획모니터 진행 ▶월 1회 주제 모니터 진행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의제를 선정 양적분석 등 진행
- ⑧ [신규] 신문 오피니언 필진 분석 보고서 ▶그동안 언론사의 각종 위원회, 패널의 구성 다양성을 분석할 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 예정. 위 목적을 계속

유지한다는 취지에서 방송 패널에 대응되는 신문 오피니언 필진도 확인 필요.
 기존 보고서와 형태가 비슷해 작성하기도 용이하며 조사대상 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먼저 2년 반영 예정임.

⑨ 보고서/ 시청자위원회, 독자위원회, 방송패널 현황 분석 보고서 예정

2) 지역 언론계 활동 대응

주류 미디어 감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시민언론운동으로 언론윤리위반, 출입처 제도, 주재기자 개선 등 일상적인 감시 사업 영역이다. 또한 전북지자체 및 공공기관 홍보 예산 실태 분석 및 개선을 촉구하며 지역 언론 환경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수행.

▶기간: 2025년 3월-12월 상시 사업

언론 윤리 위반	촌지 및 향응제공, 금품수수 등 언론윤리위반 사례 감시 위반 사항이 확정되는 경우 지자체의 대응 촉구
출입처 제도	보도자료에 의존한 관급기사 및 출입처제도의 폐해를 감시비판
주재기자 실태	주재기자의 지역 이권 챙기기 실태 감시 주재기자 직업군 분석, 지자체 계약 수주관련 실태조사 통해 기자 지위를 통한 지역 이권 챙기기 사례를 지역과 공유, 대책 마련 촉구 예정
브리핑룸 기자실 운영 실태	브리핑룸 및 기자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해(접근제한 및 이권개입, 기타)에 대한 개혁,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알 권리 및 취재할 권리에 반하는 브리핑 룸, 기자실 운영 문제에 집중 ●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회견장 운영 시민사회 공동대응
전북지자체 공공기관 대언론홍보예산 집행 실태 분석	공고·광고비, 행사 등에 대한 후원, 연감대관 구매, 기획보도수수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진행 - 홍보예산 실태 연속보고서 상반기 발표 - 지자체 음성적 예산지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혁 - 연감대관 강매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공무원 노조와 공동 대응 필요 - 홍보예산집행기준 마련을 위한 지자체 공보담당자, 지역 의원과 간담회 추진

3) 시민미디어 플랫폼 활동 강화

시민 플랫폼 구축을 통해 미디어 소외 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미디어 연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단계별 프로젝트를 계획하고자 함. 정기적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공동체라디오 소위원회 구성해 미디어 활용 사각지대 대상을 선정 후 공동체라디오 제작 참여를 위한 교육 및 제작단 구성, 콘텐츠 제작을 2025년에도 함께할 예정임.

▶기간: 2025년 상시 사업

▶세부 계획 방향

의제 찾기	지역 의제 찾기	지역별 가능한 네트워크 탐색하기, 지역별, 계층별 주요 의제 찾기
신고센터	사이비 언론행위 신고센터 및 지역민 신문고 신고센터 운영	- 전라북도에서 발생하는 언론사 직위를 이용한 사이비 언론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 -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내 주요 의제에 대한 무보도 문제에 대한 신문고 기능을 갖춘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행정 대응을 위한 논의구조 마련
인식 개선 활동	노동, 인권, 소수자를 위한 미디어 교육프로그램 진행	-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진행 노동, 인권, 장애인, 소수자, 지역 이중소외 문제, 여성, 환경 등 지역보도를 직접 모니터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분야별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역민과 지역 기자들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이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 예정 -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실습 과정에서는 분야별 소모임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식견을 넓히도록 한다.
	집회 현장 등 캠페인 진행	집회 현장 및 관련 기자회견 시 연대 캠페인 진행
	온라인 홍보 활동	웹 소식지, SNS를 활용한 주기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해 인식 개선에 나선다
미디어 의제 확산	영상 제작지원, 보도 연대 등을 통한 지역 사회 의제 확산	일상적인 지역 언론사 보도 모니터링과 신고센터, 주민 의견 수렴 신고센터 등을 통해 지역의 소외된 의제를 발굴해 영상 제작지원을 통한 미디어 연대 활동을 진행한다. 위원회를 통해 의제 선정과 방법을 결정하며 영상 제작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

		에 의제가 확산되고, 지역 공론장 마련에 나서 참여적 사회 담론에 기여할 수 있다. 지역풀뿌리언론운동연대와의 기존 협력 관계를 통한 보도 지원도 고려한다.
콘텐츠 제작	공동체라디오활동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1월 24일(금) 첫 방송 예정, 1월 23일(수) 또는 1월 24일(목) 첫 녹음 예정 - 2월까지는 기존과 같은 형태로 방송, 3월 개편 앞두고 참가자 모집 및 프로그램 재구성을 위해 다음 개편까지 휴방 요청 - 6월 개편부터 재편성 요청

4) 조직 전환/ 운영위원회 구성

조직 전환 필요성이 2025 총회준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됨.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나눠 이사회/ 운영위원회 형태의 조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됨. 조직전환을 통한 비전을 설정하기 위한 숙의와 회원간의 소통 자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2025년에는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 기간을 갖고 결정이 되면 2026 임기 총회와 함께 진행하기로 논의됨.

- ▶준비기간: 2025년 3월-12월
- ▶타단체 정관안 검토
- ▶정관 수정안 논의
- ▶회원 설문 조사
- ▶회원 간담회 진행
- ▶총회준비위원회 논의
- ▶2026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

5) 재정 사업/ 후원 주점

재정 마련을 위한 후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함. 2025년에는 후원 주점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회원 참여를 요청할 계획임.

- ▶준비기간: 2025년 3월-8월
- ▶주점(예상)기간: 2025년 8월/ 9월 초

6) 교육 사업

① 현안별 긴급 토론회, 명사 특강 진행

이달의 좋은 기사, 모니터 현안, 보고서 등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단체, 지역 언론계, 학회와 연계해 긴급 토론회 및 명사 특강을 최소 상하반기에 진행하기로 총준위에서 논의됨.

기존에 일정 시기 고정된 형태로 진행되던 언론학교를 대체할 교육사업 기능과 함께, 현안에 긴급하게 대응이 가능한 긴급간담회 형태로 논의들을 진행할 계획임. 형태는 특강, 토론회, 간담회 등 사안에 맞는 형태로 진행하기로 함.

▶기간: 2025년 3월-12월, 최소 상하반기

② 지역 우수 콘텐츠 컨퍼런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루는 다양한 사례 발표와 토론을 통해 지역 언론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포럼은 두 가지 세션으로 나뉘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지역민의 시각에서 본 지역 언론의 역할과 시민 미디어 비평가들의 논의를 다룬다. 공동체 형성에 있어 언론의 역할과 책임, 실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달의 좋은 기사, 전북민주언론상 수상자 등 지역사회에서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지역언론인을 초청해 컨퍼런스를 구성할 예정임. 전북 내 대학교 신문방송학과와 적극적 협력 필요

구체적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 언론 인식 변화: 지역민의 시각을 반영한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고, 시민 미디어 비평가들의 의견을 통해 언론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촉진.▶공동체 형성: 참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언론이 공동체 애도를 도울 수 있는 역할을 심층적으로 논의.▶지역사회 문제 해결: 언론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토론을 통해 방향을 모색.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조: 지역 언론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보도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언론인 동기 부여: 우수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언론인들에게 동기 부여와 윤리적 책임 의식을 고취.
-----------	---

▶기간: 2025년4월 예정/ ▶언론노조와 협의 필요

▶하루에 약 6개 이상 소규모(15분~20분) 연속 발표 형태로 진행

2025년 주요 사업 월별 추진 일정

	연대 사업	재정·기획·교육 사업	회원·행사 사업
1월	전북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하례회 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	보고서) 지역시군 의제 보도울(2024년 종합)	2025 총회준비위원회 사업 회계 감사 공동체라디오 제작단 모임
2월	전북사회단체연대회의 월례회의 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	보고서) 전북 신문 3사 독자위원회 현황 분석 보고서) 신문 오피니언 필진 분석	2025 전북민언련 정기총회 공동체라디오 제작단 모임
3월	전북사회단체연대회의 월례회의(총회) 전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운영위원회 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	2025 대선모니터	영화분과 달달 정기모임
4월	전북사회단체연대회의 월례회의 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 전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상반기 대표자회의	기획토론회/ 홍보예산(도청) 2025 대선모니터 지역 우수 콘텐츠 컨퍼런스	
5월	전북사회단체연대회의 월례회의 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	보고서) 전북 방송 4사 토론프로그램 현황 분석 2025 대선모니터	영화분과 달달 정기모임
6월	전북사회단체연대회의 월례회의 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	보고서) 전북 홍보예산 보고서	
7월	전북사회단체연대회의 월례회의	보고서) 전북 방송 3사 시청자위원회 현황 분석	공동체라디오 제작단 모임
8월	전북사회단체연대회의 모꼬지	재정마련 일일주점	전북민언련 모꼬지 공동체라디오 제작단 모임
9월	전북사회단체연대회의 월례회의		영화분과 달달 정기모임 공동체라디오 제작단 모임
10월	전북사회단체연대회의 월례회의 전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하반기 대표자회의		공동체라디오 제작단 모임
11월	전북사회단체연대회의/ 기획사업 2025 전북마을미디어 우수 콘텐츠 공모전 2025 전북마을미디어 활동가의 밤		제13회 전북민주언론상 공모전 영화분과 달달 정기모임 공동체라디오 제작단 모임
12월	전북사회단체연대회의 월례회의	2026총회준비위원회 (임기총회, 운영위원회 전환 과정 준비)	2025 전북민언련 송년회 제13회 전북민주언론상 시상식 2025 연간 소식지 <말하라> 제작

<주문사항> 제3절(총회)제15조(의결사항)

2. 예산, 결산의 심의 의결에 의거하여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전체 예산

		2025년 예산	2024년 결산
수입합계		104,050,000	109,108,148
지출합계		104,050,000	109,108,148
	운영비	91,550,000	100,850,778
	사업비	12,500,000	8,257,370

▶2026년 일반회계 이월 예정액 : 1,026,802원

2) 2025년 수입

항목		2025년 예산	2024년 결산
정기후원금	CMS이체	78,000,000	72,687,000
	통장이체	3,000,000	3,290,000
비정기후원금	개인	3,000,000	10,085,000
	법인 등	-	200,000
기타 수익	재정사업	8,000,000	1,154,190
	회원사업	1,500,000	1,620,000
	정책사업	500,000	850,000
	결산이자	50,000	78,038
	전월이월금 합산액	10,000,000	9,143,920
차입금		0	10,000,000
수입 합계		104,050,000	109,108,148

▶2025년 일반회계 이월금 : 4,003,822원

3) 2025년 운영비

항목		2025년 예산	2024년 결산
인건비	급여(세금 포함)	58,710,480	61,979,240
	퇴직적립금	4,892,540	4,821,600
	4대 보험	7,000,000	7,037,110
임차료	월 임차료	5,904,000	5,904,000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전기요금	1,200,000	1,198,252
	통신비	1,000,000	1,304,220
	CMS 은행수수료	1,200,000	1,185,920
	CMS 휴먼소프트웨어	710,000	702,000
	CMS 금융결제원	530,000	528,000
	퇴직연금운용 수수료	400,000	806,264
	은행 송금 수수료	20,000	9,400
	우편대금	30,000	44,060
일반운영비	사무기기 유지 관리비	650,000	638,400
	웹 기반 이용료	200,000	575,570
	업무용 소모품 구입	500,000	461,680
장치관리비	사무기기, 장비 구입	300,000	-
정기간행물 및 자료 구입	신문 대금	720,000	712,000
	자료 구입비	60,000	57,500
기타	월 이월금 합산액	7,022,980	12,885,562
	예비비	500,000	-
운영비 합계		91,550,000	100,850,778

▶2026 이월금 예정액 : 1,026,802원

※ 2025년 인건비/ 상여금 삭감

구분	기본급	직급 수당	월급여	상여 금	퇴직 적립금	2025년 인건비	2024년 인건비	증감
사무 처장	2,096,270	500,000	2,596,270	-	2,596,270	33,751,510	35,350,360	-1,598,850
팀장	2,096,270	200,000	2,296,270	-	2,296,270	29,851,510	31,450,360	-1,598,850
합계	4,192,540	700,000	4,892,540	0	4,892,540	63,603,020	66,800,720	-3,197,700

4) 2025년 사업비

항목	2025년 예산	2024년 결산
정책사업비(공동체라디오분담금, 뉴스피클 발송비 등 정책.기획사업)	3,000,000	1,890,200
회의비	400,000	398,000
여비교통비	300,000	306,100
교육사업비	1,000,000	-
재정사업	3,000,000	-
연대사업	600,000	1,720,000
회원사업	700,000	944,020
행사비	3,000,000	2,999,050
예비비	500,000	-
사업비 합계	12,500,000	8,257,370

5) 2025년 공모사업 제출 예정

기관	내용	보조금
중앙행정기관	라디오 콘텐츠 제작 및 간담회	2,000만 원
합계		2,000만 원

참고 자료

● 목차

1. 조직 운영 원리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정관 및 내규
- ▶2024년 성명, 논평, 보고서, 기자회견 목록 및 전문
- ▶ 2024년 전북주요뉴스 피클 발행 목록

2. 함께 일하는 사람들

- ▶제12회 이사회, 감사, 사무처 구성 현황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 구성 현황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정관

제정	1999. 12. 16.
1차 개정	2001. 12. 18.
2차 개정	2003. 07. 16.
3차 개정	2003. 12. 22.
4차 개정	2005. 12. 27.
5차 개정	2007. 12. 28.
6차 개정	2010. 12. 17.
7차 개정	2013. 01. 25.
8차 개정	2014. 01. 24.
9차 개정	2017. 01. 24.
10차 개정	2019. 02. 15.
11차 개정	2021. 02. 26.
12차 개정	2022. 02. 25.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본회)이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전주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언론의 민주화와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론에 대한 감시와 비판, 견제 그리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는 시민운동단체다.

제4조(사업)

본회는 목적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대 언론 감시, 비판, 견제와 대안 제시를 위한 활동
- ② 시민의 올바른 언론관을 정립하기 위한 교육 활동
- ③ 본회의 활성화와 회원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및 가입)

-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며,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로 한다.
- ② 본회의 회원 가입 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발의권, 의결권을 갖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②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지며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본회의 회칙과 각급 회의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적극 실천해야 한다.
- ④ 소정의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7조(상벌)

- ①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및 시민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상할 수 있다.
-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에 처한다.
 1. 회칙을 위반하거나 주요 결의사항을 현저하게 위반한 때
 2. 본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행위를 한 때
- ③ 징계의 종류는 제명, 자격 정지, 경고로 한다.

제8조(회원 분과)

- ① 본회의 목적 실현과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 회원 분과를 둘 수 있다.
- ② 회원 분과는 분과장과 회원으로 구성하며 기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장 기구

제1절 기구

제9조(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총회
- ② 이사회
- ③ 정책위원회
- ④ 재정위원회
- ⑤ 조직위원회
- ⑥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 ⑦ 미디어교육위원회
- ⑧ 미디어위원회(2021년 신설)
- ⑨ 미디어이용자권익위원회(2022년 신설)
- ⑩ 특별위원회
- ⑪ 미디어연구소
- ⑫ 분과
- ⑬ 사무처

제2절 임원

제10조(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한다.

- ① 공동대표
- ② 정책위원장
- ③ 재정위원장
- ④ 조직위원장
- ⑤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장
- ⑥ 미디어교육위원장
- ⑦ 미디어위원장(2021년 신설)
- ⑧ 미디어이용자권익위원장(2022년 신설)
- ⑨ 특별위원회 위원장
- ⑩ 미디어연구소장
- ⑪ 분과장
- ⑫ 사무처장

제11조(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 선출과 관련한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제3절 총회

제12조(성격 및 구성)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소집)

- ① 총회는 매년 2월 내 공동대표가 소집하며 그 시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② 임시총회는 공동대표, 이사회 의결, 회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 ③ 총회 소집은 회의 일로부터 10일 전 일시와 장소 및 목적 사항을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총회의 의장은 공동대표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총회 준비를 위하여 이사회는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2022년 신설)

제14조(의결정족수)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15조4항과 15조5항에 관한 사항은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회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② 예산, 결산의 심의 의결
- ③ 연 사업 방향 수립 및 사업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 ④ 공동대표 및 감사의 선출, 불신임에 관한 사항

- ⑤ 본회의 해산과 합병에 관한 사항
- ⑥ 이사회회의 의결로 제안한 사항
- ⑦ 회원 1/5 이상의 연명으로 제안한 사항

제4절 이사회

제16조(지위 및 구성)

- ①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다음 총회까지 그 역할을 수행하며 본회의 운영 및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공동대표, 사무처장, 위원장, 분과장, 미디어연구소장을 포함하여 30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17조(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이사 선출과 관련한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2022년 신설)

제18조(소집)

- ① 이사회는 월 1회 이상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 ② 임시 이사회는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제19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원의 제명, 사무처장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② 임원과 이사 임면에 관한 사항. 단 공동대표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소관으로 한다.
- ③ 회칙 개정안 발의에 관한 사항
- ④ 사업 계획의 수립, 승인 및 주요 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
- ⑤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 ⑥ 정회원 인준에 관한 사항
- ⑦ 일반 시민의 시상에 관한 사항
- ⑧ 지도위원, 자문위원 및 사무처장 선출 동의와 불신임에 관한 사항
- ⑨ 분과 및 위원회, 사무처 부서 신설과 폐지에 관한 사항
- ⑩ 사무처 내규 승인에 관한 사항
- ⑪ 기타 제반 일상 사업의 계획 및 방침의 결정과 집행
- ⑫ 기타 본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 방향 수립과 집행

제5절 공동대표, 감사

제21조(공동대표)

- ①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한다.
- ② 공동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③ 공동대표는 필요에 따라 역할 분담에 관한 내규를 둘 수 있다.

제22조(감사)

- ① 총회에서 선출하는 2명으로 구성한다.
- ② 본회의 사업 및 재정에 대해 연 1회 이상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2021년 개정)

제6절 위원회 및 지도·자문 위원

제23조(정책위원회)

- ① 본회의 중장기 정책 방향 및 현안에 대한 지원 및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 ② 정책위원회는 공동대표, 정책위원장, 미디어연구소장,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정책위원회 운영은 내규로 정한다.

제24조(재정위원회)

- ① 재정위원회는 본회의 재정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 ② 재정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5조(조직위원회)

- ① 조직위원회는 본회의 조직 강화를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 ② 본 위원회의 운영은 내규로 정한다.

제26조(언론평해법률지원본부)

- ① 언론피해사례 등을 접수받고 언론중재위 제소 및 법률 자문 활동을 수행한다.
- ② 본 위원회의 운영은 내규로 정한다.

제27조(미디어교육위원회)

- ① 미디어교육위원회는 본회의 교육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업무지원 역할을 총괄한다.
- ② 미디어교육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8조(미디어위원회)

- ① 미디어위원회는 본회의 매체 설립 및 채널 운영과 관련한 사업을 담당한다.
- ② 미디어위원회 산하에 다음과 같은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소식지편집 소위원회
 - 2. 말하랑계TV 소위원회
 - 3. 공동체라디오 소위원회
- ③ 미디어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2021년 신설)

제29조(미디어이용자권익위원회)

- ① 미디어이용자권익위원회는 미디어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업무지원 역할을 총괄한다.
- ② 미디어이용자권익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22년 신설)

제30조(특별위원회)

- ① 한시적으로 특별한 사업을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 설치와 구성, 폐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1조(미디어연구소)

- ① 본회의 언론개혁 운동을 지원하고, 정책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설 미디어연구소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 ② 부설 미디어연구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2조(지도위원)

각 분과는 원활한 사업 추진과 활동의 전문성 제고 방안으로 지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 ① 지도위원은 본회의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이사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지도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33조(자문위원)

본회는 사업 추진과 관련한 자문을 받기 위해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① 자문위원은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지역 원로와 각계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 ② 자문위원은 대표나 분과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7절 사무처

제34조(사무처)

- ① 본회의 실무를 집행하기 위한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과 정책 사업을 담당하는 정책실장 및 실무 부서를 둘 수 있다.
- ③ 사무처장은 이사회에 동의를 받아 공동대표가 임명한다.
- ④ 사무처 운영은 내규에 따른다.

제4장 재정

제35조(수입)

본회의 재정은 회원 회비, 후원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36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예산결산)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총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5장 보칙

제38조(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이나 회원 1/5 이상의 연명에 의해 서면으로 발의한다.

제39조(재정 공개)

본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포함하는 수입과 지출 결산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제40조(해산 시 잔여 재산의 귀속)

본회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41조(준용)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따르고 다음으로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 이 회칙은 통과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운영내규

제정 2014.02.14
1차 개정 2014.07.18
2차 개정 2018.
3차 개정 2021.09.18.
4차 개정 2022.03.18.
5차 개정 2024.04.19.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사)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회원

제2조(회원 가입 절차)

-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자로, 회비 납부 규정이 포함된 회원가입서(약식서류 포함)를 제출함으로써 가입 절차를 완료한다.
- ② 회원 가입 후 연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해 총회 의결권 및 선거권을 부여한다.(2022년 개정)
- ③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2022년 개정) 회비납부가 중단될 경우 탈퇴로 본다.

제3절 임원 및 이사회

제3조(임원 및 이사 자격 요건)

- ① 본회의 이사는 언론의 민주화와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론에 대한 감시와 비판, 견제 그리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는 시민운동단체로서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정한 자격과 소양을 갖춘 자로 한다.
- ② 본회의 이사는 국가권력 및 자본권력을 견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보호하는 비영리섹터로서 시민사회단체의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
- ③ 임원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자는 아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2024년 개정)
 1. 전북민언련 이사 경력 1년 이상 회원. 단 현직이 아닌 전직 이사로 자천 가능하며 임기 단절이 있는 경우 재임기간을 합산한다.
- ④ 이사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자는 아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우리 회의 회원으로서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들의 신망이 높은 자
 2. 언론학계에 1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우리 회의 목적 및 활동에 공감하는 자
 3. 시민사회단체 소속되어 1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언론민주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4. 단, 제5조1항의 규정에 의해 해촉된 자를 이사로 재선임할 경우에는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임원 선임 절차)

- ① 본회 임원에 자천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해당 년도 12월 이내로 자기추천서와 회원 및 이사 추천을 받아 총회준비위원회에 제출한다.
 2. 본회 회원 30인 이상 또는 현직 이사 3인 이상의 서명이 들어간 추천서를 사무처에서 지정한 서식에 맞춰 제출한다.(2018년 신설)
 3. 총회준비위원회는 임원선출과 관련한 제반 사항(임원 선출 및 결원 임원 보강의 안)을 점검하며 총회준비위원회 참석위원 과반의 의결로 총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단 공동대표의 선임 및 선출 사항은 참석 위원 2/3의 의결로 상정한다.(2022년 신설)

제5조(결격사유)

- ① 공무원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자(단,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결격사유는 예외로 한다)
- ② 선출직 정치인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 간부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행정기구의 상근직 임원, 등록정당의 임원, 등록된 언론기관 종사자 등은 제척한다.
- ③ 제5조2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을 수행하기 전까지 이사직을 사임해야 하며 별도의 절차 없이 이사직에서 해촉된 것으로 본다.(20210918 개정)
- ④ 특별한 사유 없이 이사회에 2/3 이상(정례회의 9회 이상) 불참한 자는 이사직에서 해촉한다.
- ⑤ 단, 제5조②항과③항 관련 마을미디어와 공동체라디오를 포함한 비영리 공동체미디어는 제외한다.(20210918 신설)

제4절 사무처

제6조(사무처)

- ①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정책실장, 사무국장, 팀장, 간사 등을 두며,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한다.
- ② 사무처장 궐위 시 정책실장, 사무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사무처 활동가의 인사 및 관리는 사무처장이 총괄하며, 공동대표의 동의를 거친다.
- ④ 사무처 활동가 및 정책실장의 인건비 산출은 별표 규정에 따른다.
- ⑤ 사무처 활동가 및 정책실장의 복리후생 강화를 위해 이사회 동의를 얻어 매년 일정액의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용내역 및 규정은 별표규정에 따른다.

제7조(활동가의 임용)

- ① 임용은 사무처장이 총괄하며, 공동대표의 동의를 거친다.
- ② 임용은 서류 전형, 면접,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평가로 행한다.
- ③ 결원 보충은 신규 채용, 승진 임용 등의 방법에 의한다.

제8조(신규 채용 시 구비서류)활동가의 신규채용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이력서(사진포함)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통
4. 이력서에 포함된 자격증명서 각 1통
5. 기타 인사 관리상 필요한 사항

제9조(활동가의 직위해제 및 대기)

- ① 활동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를 명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3. 징계요구중인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제개편, 예산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직을 계속 부여할 수 없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받은 활동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 ③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을 받은 활동가의 직위해제 사유나 대기사유가 소멸되거나 해소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활동가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하였을 때
3.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때
5. 기타 직무수행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 ① 징계는 파면,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여 처분한다.
 1. 파면은 활동가의 신분을 상실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하고 본회 사무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2분의 1을 감한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4. 견책은 서면으로 훈계하여 반성하게 한다.
- ② 이 규정에 의한 징계는 손해배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2조(징계의 절차 및 시효)

- ① 징계처분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대표가 행한다.
- ② 징계의 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13조(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징계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물을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재심청구)

징계를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공동대표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대표는 인사위원회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의 감면)

징계 집행중인 자가 개전의 정이 뚜렷할 때에는 공동대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집행기간을 단축하거나 잔여 집행기간을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인사위원회 구성)

인사위원회는 본회의 공동대표 중 2인, 사무처장, 이사회에서 추천된 이사 2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동대표가, 간사는 사무처장이 된다. 단, 당연직 인사위원이 징계대상이 되었을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제척되며, 궐위 위원에 대한 충원은 이사회 논의를 거친다.

제17조(소집 및 의결)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8조(서면심의)

활동가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의안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일 때에는 서면심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회의록)

인사위원회 간사는 심의결과를 기재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인사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사항)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의 의결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2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회에 통과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별표1. 인건비 산정 기준]

- ▶ 기본급 : 기본급은 매년 최저임금과 연동
- ▶ 직급수당 : 사무처 (총장-70만, 처장-50만, 국장-30만, 팀장-20만, 간사-10만)
※ 정책실장은 사무처장에 준하여 지급한다.
- ▶ 명절상여금 : 기본급의 100% (설과 추석에 나눠 지급)
- ▶ 퇴직금 적립 : 총액의 1/12 (별도 퇴직연금 통장)

[별표2. 활동가 복리후생 규정]

1) 휴가 규정 (2024년 개정)

- ①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 휴가를 15일로 한다.
- ②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준다.
- ③ 3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경우에는 2년마다 1일의 휴가를 가산하며, 가산된 휴가 일수를 포함하여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넘을 수 없다.

2) 장기근속에 따른 유급휴직 규정

- ① 장기근속에 따른 유급휴직은 5년 1개월, 10년 6개월, 15년 12개월, 20년 24개월로 한다.
- ② 유급휴직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되, 적용 대상 및 적립 세부 내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총회준비위원회 역할 내규

전북민언론 정관 제3절(총회)제13조(소집)5항 총회 준비를 위하여 이사회는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2022년 신설)

제정 2022.03.18.

제1조(구성) 총회준비위원회(이하 총준위)는 매년 총회를 앞두고 12월에 구성한다. 구성인원은 공동대표, 정책위원장,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이사 및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위원장) 총준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한다.

제3조(역할) 총준위는 총회 의결 사항을 위임받아 조직의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임원선출이 있는 해는 임원선출과 관련한 제반 사항(임원 선출 및 결원 임원 보강의 안)을 점검한다.

제4조(안건 및 보고) 총준위의 안은 참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결정된 안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5조(총회 안건 상정) 총준위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참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에 상정한다.

제6조(해산) 총회가 끝나면 총준위는 자연 해소된다.

2024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발행 목록

▶ 성명·논평·기자회견 보도자료

- [공동 기자회견문] '청부민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즉각 해촉하라(2024/01/03)
- [지역민언론네트워크 공동 성명] 윤땡 뉴스도 모자라 지역 뉴스 축소하는 박민 사장 제정신인가!(2024/01/12)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출범선언문] 권력의 부당한 언론장악, 시민사회 연대로 막아내겠습니다(2024/03/06)
- [지역민언론네트워크 보도자료] 지역 시민의 '미디어 자치권' 실현을 위한 4대 분야·9개 세부 의제 제안(2024/03/22)
- [성명] '여사' 호칭 논란이 토론회 거부 명분이 될 수는 없다! - 전주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선거토론회 보이콧 입장을 보며 - (2024/03/28)
- [전국민언론네트워크 공동 논평] 서창훈 신문윤리위 이사장 재선임, 심히 유감이다!(2024/04/03)
- [지역민언론네트워크 보도자료] 제22대 총선 지역미디어 정책 의제 제안 답변 결과(2024/04/03)
- [성명] 보복 취재와 부업으로 연명하는 사이비 기자는 퇴출해야 한다!(2024/04/22)
- [성명] '갑질'부터 '용돈' 의혹까지 불려온 대변인실 광고비 지급 논란,철저한 감사 및 기자단 해명 촉구한다.(2024/06/03)
- [1차 공개질의서] 전북도청 대변인실 광고비 지급 논란 관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전북도의회 기자단에 묻습니다.(2024/06/10)
- [기자회견] '갑질'부터 '광고 용돈' 의혹까지 불려온 대변인실 광고비 지급 논란 김관영 도지사는 사과하고 개선 의지 밝혀라!(2024/06/13)
- [2차 공개질의서] 삼짓돈 논란 키운 전북자치도청 대변인실 광고비 집행의 진실은 무엇입니까?(2024.06.19.)
-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 정상화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2024/06/26)
-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민선8기 전주시정 2년 평가 기자회견> 예산 폭탄은 없었고, 시민의 삶과 도시에 대한 위협만 있었다.(2024/07/04)
- [전북민언론, 전주시민회 공동 성명] 도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었나? 전북 국회의원·전북도의원·전북도의회기자단 재난 피해 속 술자리 간담회를 보며(2024/07/16)
- [공동 기자회견] 도민 정서 안중에도 없던 전북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취지 기자회견(2024/07/25)
- [성명] 수억 원의 보조금 유용 횡령 의혹이 뉴스거리가 아니란 말인가! - 전주시민축구단 보조금 유용·횡령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 - (2024/09/25)
- [보도자료] 전북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청탁금지법 고발 건 소속 기관에 과태료 부과 사안으로 통보(2024/10/10)

- [전국민언론네트워크 보도자료] 전국민언론 'KBS 낙하산 사장 반대' 5개 지역 1인 시위(2024/10/14)
- [성명] 위헌적 비상계엄! 내란 시도! 윤석열 퇴진하라!(2024/12/04)
- [성명] 국민 기만 국민의힘 해산하라!(2024/12/08)

▶ 간담회, 토론회, 워크숍

- [재무제표 분석모임 특강] 부동산 PF 위기와 전북에 미칠 영향은? 이광수 대표 특강(#광수네북덕방)(2024/02/02)
- [방방-곡곡 미디어 Talk] 왜곡·혐오를 넘어 공존과 진실로 가는 길 강연(2024/05/25)
-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토론회(2024/6/17)
- 2024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 교류, 연대, 지금, 함께/ 마을미디어세미나(2024/12/2)

▶ 보고서 목록

- 보고서) 2022-2023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독자(권익)위원회 현황 보고서(2024/01/19)
- 보고서) 2023년 4분기 전북 방송 3사 시군 의제 보도 실태 보고서(2024/02/08)
- 보고서) 2024년 1분기 전북 방송 3사 시군 의제 보도 실태 보고서(2024/06/10)
- 보고서) 2024년 2분기 전북 방송 3사 시군 의제 보도 실태 보고서(2024/07/26)
- 보고서) 2024년 3분기 전북 방송 3사 시군 의제 보도 실태 보고서(2024/11/14)
- 보고서) 홍보예산보고서 전북자치도청 행정 광고 집행 기준과 현황 - 2019~2023년 광고비 집행 내역을 중심으로 - (2024/11/18)
- 보고서) 홍보예산보고서 전북자치도청 대변인실의 행정광고 집행 계획은 적절한가?(2024/11/20)

▶ 2024 총선미디어감시단

- 2024 총선미디어감시단 발족(2024/02/29)
- 전북자치도 국회의원 선거구 10석 유지됐지만, 일부 부작용 및 갈등 우려(3/4)
- 2024 총선미디어감시단 전북 지역 언론 보도 신고 센터 안내(2024/03/06)
- [2024 총선 보고서] 제22대 총선 전북자치도 선거방송토론회(더불어민주당 경선) 현황(2024/03/11)
- 선거 앞두고 정책, 여성, 청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전북 지역 언론들의 지적 이어져(2024/03/13)
- 전북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분석, 중진 정치인 강조와 정치 신인 부족하다는 비판 잇달려(2024/03/15)
-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에 쏟아진 지역 언론들의 비판, 전북 연고 정치인에 거는 지역 언론들의 기대감 반복(2024/03/19)
- 전북 지역 언론들의 제22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결과 분석 정리(2024/03/25)
-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후보 KBS 토론회 보이콧 논란, 논란과 별개로 비판 이어지는 이유는?(2024/03/29)

- 제22대 총선 선거 기간 혐오 표현 감시하는 시민사회 활동 시작, 언론의 역할은 없을까?(2024/04/01)
- 이번에도 국회의원 선거에 묻힌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책임은 어디에?(2024/04/05)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북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에 대한 해석 신중해야(2024/04/08)
- [2024 총선 보고서] 총선 '정치선거 유튜브' 확장 나선 전주MBC, JTV전주방송(2024/04/09)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북 지역 언론 분석과 주목할 점 살펴보기(2024/04/11)
- [제22대 총선 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선거방송토론회 현황 보고서 2차(2024/04/11)
- [2024 총선 토론회] 언론 프레임과 포털 뉴스, 민심과 어떻게 달랐나(2024/05/14)
- [제22대 총선 보고서] 지역 방송사 총선 유튜브 보고서 2차(2024/05/24)

성명·논평·기자회견 전문

1. [공동 기자회견문] '청부민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즉각 해촉하라

국민은 불법적 방송심의 묵과할 수 없다

'민원사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즉각 해촉하라

청부로 민원을 넣고 직접 심의해서 징계까지 내린 방송심의 초유의 '셀프심의' '민원사주' 사건이 벌어졌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뉴스타파 민원 60여 명 중 40여 명이 류희림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들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청부심의를 통한 비판언론 겁박이며, 조직적인 언론탄압이다.

류희림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징계할 목적으로 민원청구부터 심의와 제재까지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며 불법행위를 주동한 셈이다. 이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공적 심의기구를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며 사유화한 것이자 이해충돌방지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방지 규칙과 행동강령을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범죄행위이다.

이렇듯 불법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데도 류희림 위원장은 이를 '민원인 개인정보유출'로 규정짓고,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한 내부 특별감사에 나섰다. 더 나아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대범죄, 국기문란 운운하며 겁박하더니 지난주 검찰에 공익신고자를 처벌해 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류희림 위원장의 특별감찰 지시는 그 자체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해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부심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가 오히려 자신의 범죄를 알린 공익제보자부터 색출하겠다고 하니 그 뻔뻔함과 후안무치가 놀라울 뿐이다.

류희림 위원장의 신년사는 더욱 가관이다. "민원제기는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공익적 권리"라는 궤변과 함께 민원사주로 비판받는 사적 이해관계자들을 '공익제보자' 또는 '피해 민원인'으로 지칭하고, 그들에게 깊이 사과했다. 범죄 주동자가 공범에게 사과하는 웃지못할 코메디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8년 업무감사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1년~2017년 방송심의기획팀장이 당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지시로 친인척 명의를 동원해 민원을 신청한 것이 적발돼 파면 조치된 바 있다. 이에 비춰보자면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사주'와 '셀프 심의'는 그야말로 즉각 파면 대상이다.

지난해 10월 민언련, 언론노조 등 언론·시민단체는 위법적으로 뉴스타파 보도를 심의한 류희림 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검찰,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어느 곳 하나 불법적 언론탄압 범죄를 제대로 규명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 국회가 나서라. 국회는 류희림 위원장에게 제기된 불법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고

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하라.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언론을 겨냥해 위법적 정치심의, 표적심의, 편파심의로 모자라 청부심의까지 동원해 심의제도를 모독한 류희림 위원장의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언론자유를 무참히 짓밟고 민주질서 근간을 흔든 청부민원을 벌인 류희림 위원장에게 경고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장으로서 사명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적격자 류희림 위원장 위촉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하루 속히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직에서 해촉하라.

2024.1.3.

민주언론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 참여연대 ·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제정의실천연합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녹색교통운동 · 녹색미래 · 녹색연합 ·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 새언론포럼 · 여성환경연대 ·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 한국YWCA연합회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진보연대 · 한국투명성기구 · 함께하는 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

2. [지역민언론네트워크 공동 성명] 윤땡 뉴스도 모자라 지역 뉴스 축소하는 박민 사장 제정 신인가!

용산 낙하산 박민 KBS 사장의 무도한 행보가 이번에는 지역을 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난 1월 10일 "지역정책실은 오늘 업무보고에서 현재 9개 총국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자체 제작해 온 7시 뉴스를 현행 40분에서 10분으로 축소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뉴스를 축소하면 예산 40억 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하면서 KBS 지역방송에 대한 철학 빈곤을 박민 사장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박민 사장은 공영방송 수장으로서는 자질 부족과 지역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 부재로 임명 이전부터 많은 우려를 낳았다, 윤석열 정권의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으로 불안해진 공적 재원이 지역방송의 공적 서비스 위축을 가져올 것이고, 결국 지역시청자 권익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국민언련의 우려는 박민 KBS 사장 취임 이후 더 여실히 확인되고 있다. 취임 전부터 △인력 축소와 인건비 삭감 △프로그램 축소·폐지 △저효율 채널 중단 △지역국 통폐합 검토 △KBS 보유자산 매각을 밝혔던 박민 사장은 지역의 관점에서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던 윤석열 정권과 판박이다.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나 무책임하다.

지역 <뉴스7>은 단순한 KBS 뉴스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니다. 지역방송 활성화 정책으로 시작된 <뉴스7>의 편성 확대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본사에 집중된 예산 및 편성 권한을 지역에 나누는 중심에 있던 프로그램이다. 당시 KBS는 지역뉴스 제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자체제작 지역뉴스의 두 자리 시청률 기록이란 성과를 낳으며 시청자 관심을 모았다. 지역 풀뿌리미디어에 뉴스를 공유하고,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하는 역할도 시도했다.

이런 노력으로 <뉴스7>은 심층성, 다양성, 출입처 평판 및 시청자 만족도, 시청률 조사에서 기존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런데 단지 4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지역뉴스 강화'라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족시켜 온 프로그램을 사실상 폐지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것은 박민 사장 체제가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과 지역 시청자 권익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다.

낙하산 사장이 온 이후 KBS의 공공성 지표가 모두 하락하고 있다. 여러 어려움이 가중돼 있는 지역 언론은 무책임한 칼질이 아닌 다양한 정책과 그에 따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OTT 확산과 1인 미디어의 강세 속에 지역 콘텐츠 수요가 실종되는 환경에서 로컬 콘텐츠 제작 기지로서 공영방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사안별로 수많은 이해 당사자와 이권 갈등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이권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영방송의 존재는 필수적이기에 지역 <뉴스7>의 축소는 지역공동체에 기여하는 공적 서비스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지역에서 걷는 수신료를 재원의 주요 기반으로 활용하면서 지역 시청자 권익을 팽개치는 사장은 필요 없다. 전국민언론네트워크는 분명히 경고한다. 박민 KBS 사장은 <뉴스7> 축소를 당장 중단하라. 지역 시청자에 대한 폭력을 멈추고, 본사와 지역국의 수평적·유기적 연결과 적정한 지역총국 예산 실현을 통해 지역 공영방송의 모델을 재정립하라. KBS 점령군 박민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2024년 1월 12일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3.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출범선언문] 권력의 부당한 언론장악, 시민사회 연대로 막아내겠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틀어막는 반헌법적 언론자유 파괴를 반드시 분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과 언론 표현의 자유 파괴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비판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고소·고발 및 징계가 남발되는 가운데, 특히 공영방송과 공영미디어가 집중적인 장악과 통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검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언론을 장악했던 악행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방송의 공적 책무와 독립성·공공성을 실현하는 공적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영방송 장악과 통제, 공영미디어 사영화, 비판언론 탄압의 앞잡이로 전락했습니다. 이제는 제도권 언론을 넘어 시민들의 권력비판과 풍자까지 압수수색과 엄벌로 다스리겠다며 '입틀막'이 일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독재를 가르는 기준점인 언론 표현의 자유는 질식 직전에 있고, 국민의 자산인 공영방송은 윤석열 정권의 나팔수로 추락해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선배검사, 대통령 술친구, 과거 정부의 언론장악 전과자들이 총동원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공영방송 KBS 등 곳곳에 낙하산으로 대거 투하돼 언론자유와 미디어 공공성을 황폐화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위법성이 인정된 2인 위원 체제로 폭주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들을 터무니없는 이유로 해임했습니다. 대통령 낙하산 박민 KBS 사장은 방송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을 급격히 무너뜨리고, '국민의 방송'을 정권홍보용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더 가관입니다. 자의적인 '가짜뉴스' 심의를 빌미로 대선 검증보도를 범죄시하고, 비판 언론에 대한 편파·보복·청부 심의로 전례 없는 중징계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공적 소유구조를 기반으로 한 보도전문채널 YTN은 2인 체제 불법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한 날치기 졸속 심사를 통해 부적격한 저질 자본에 팔려나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검사 윤석열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탄압에 부역했던 자들을 처벌하더니, 대통령 윤석열은 이들을 사면해 언론장악의 사냥개로 다시 써먹는 황당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과 언론통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암흑기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이러한 장악과 파괴, 퇴행의 난장판 속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 의 헌법가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언론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편파·표적·청부 심의에 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은 집단 저항을 이어가고 있고, 세월호 10주기 다류 불방과 노골적인 권력추종 보도에 대한 KBS 노동자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영화를 막고자 법정투쟁을 불사하고 있는 YTN 노동자들, 테러에 가까운 정치심의에도 비판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MBC 노동자들, 폐국의 위기 속에서 투쟁하고 있는 TBS 구성원들까지 양심적 언론인들이 권력에 맞서며 신발 끈을 동여매고 있습니다.

지금은 언론인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시민사회가 함께 언론장악을 저지할 공동 연대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시민·노동·언론단체들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과 미디어 공공성 파괴 양상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광범위한 연대를 조직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정권의 반헌법적 언론장악과 미디어 공공성 파괴는 용인될 수 없습니다. 누가 권력을 쥐더라도 마음대로 공영방송과 공영미디어를 장악해 관제방송으로 만들고, 비판언론과 국민을 검열하고, 압수수색으로 검박하는 국가 폭력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이 시급합니다.

정권교체를 이유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장악을 시도한 정권들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언론의 주인은 정권도 국가도 아닌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옹호하는 각계 시민·노동·언론단체 등 오늘 모인 단체들은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을 출범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퇴행시키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폭주와 민주적 공론장을 파괴하는 폭력을 단호히 저지하고, 항구적인 언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2024년 3월 6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거래의길민족광장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고양여성민우회 광주 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후위기 기독교인연대 내부제보실천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사)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먹거리연대 미디어기독교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누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공공성연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 오픈넷 사월혁명회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새언론포럼 생명평화교회 세월호 제주기억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천불교승가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 시민연대 언론비상시국회의(전국비상시국회의 언론부문)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의료민영화 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주세월호분향소 제주여성민우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안416연대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YWCA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사)청주여성의회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여성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전국 90개 단체/3.6 17시 기준)

4. [지역민언론네트워크 보도자료] 지역 시민의 '미디어 자치권' 실현을 위한 4대 분야·9개 세부 의제 제안

지방에 대한 중앙의 권력화가 공고해지고 미디어 영역에서도 중앙 집중적 구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언론의 위기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매체 환경의 빠른 변화와 정부의 시장중심주의 미디어 정책 기조는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역 민주주의 실현, 지역소멸 위기 해법으로서 미디어 자치권 실현은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에서는 지역 미디어를 정상화하고 지역시민의 '미디어 자치권' 실현을 위한 4대 분야 9개 세부 의제를 제안합니다.

* 미디어자치권이란 시민주권 원리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실현에 있어 중앙정부에 위임된 규제와 진흥의 역할을 지방정부 및 시민에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사회 미디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와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권력이나 자본 등 외부 세력의 간섭 없이 미디어의 전문성과 자율성, 시민의 참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1.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 대표성 확보

1) 지역 대표성 강화

방송의 지역성 강화를 위해서 방송정책기구 및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역 대표성 보장은 필수적인 과제다. 하지만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 및 산하위원회,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역 대표성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이사회 등 방송정책기구 구성에서 지역성을 대표하는 인사 추천과 구성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나라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주무기관임과 동시에 공영방송인 KBS 이사 추천권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추천권을 갖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구성에서 지역 대표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지역성 훼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방송정책기구 및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역성 외면 결과는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지역 방송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지역 계열사 낙하산 사장 임명 관행과 불평등한 네트워크 규약 관행, 지역사 인력운용 및 채용 구조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를 파생한다. 결국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관련법과 고시를 개정해 방송지배구조의 지역성을 강화해야 한다.

2) 권역별 지역방송위원회 설치

장기적으로 중앙 중심의 방송 정책을 지역중심 방송정책으로 분권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 언론사의 중간에서 언론 공적 지원을 매개할 수 있는 '권역별 방송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권역별 지역방송위원회가 지역방송 정책 및 인허가 등 규제·지원 제도 수행, 지역성 콘텐츠 제작 지원, 지역방송 허가 갱신, 지역방송 제작비를 지원하는 등 지방정부의 직접 지원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

지역방송위원회의 대표가 방송통신정책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함께 구성함으로써 방송정책의 지역성 및 지역대표성 강화, 지역 현실에 맞는 콘텐츠 발전전략 수립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강화를 통해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민 보편적 정보 접근권 보장

1) 지역신문발전기금 건전성 강화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 기반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기금목적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상시법으로 전환 후에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전체 사업비 규모는 완연한 하락세이며, 예산 편성 시 정부출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할 경우 결국 사업 예산이나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이 정부출연금으로만 100%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은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지 못한다.

지역신문 지원 제도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금 건전성 강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기금 사업 개선 노력을 바탕으로 국회, 재정당국 등과의 협력을 통해 법에 규정된 재원 구성을 다변화하고 기금 규모 확대와 기금 예산의 지속적인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금의 확대만큼 지역신문의 질적 활성화를 구현하기 위한 기준 검토와 이를 검증하기 위한 방안도 강화해야 한다.

2) 지역방송발전기금 조성

2014년 제정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제정 당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기금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보면 지역방송발전기금 신설 등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서울권 방송사와의 불균형 해소, 지역방송 담당부서의 위상강화 등 근본적 해결책은 나오지 않아 지역방송 관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코로나와 각종 국지적 재난 등을 겪으며 지역방송사 중요성은 커져가고 있으며, 중앙 중심의 방송 정책을 지역중심 방송정책으로 분권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재원 지원이 반드시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3) 지역 미디어를 위한 미디어바우처 제도 수립 및 재원 마련

지역신문 기반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필요성 인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은 사실상 부재하다. 지역민의 지역신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미디어바우처를 지역 언론계에서는 요구해 왔으며 법제화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기금 조성 및 지자체 재원 등을 통해 미디어바우처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미디어바우처 법제화를 위한 정부광고법 등 법령 개정도 동반되어야 한다.

4) 지역 미디어를 위한 공적 재원 조성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진정한 자율권과 자치권을 가져야 한다. 미디어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미디어에 대한 공적 재원 조성은 당연하다.

장기적인 과제로 재원 확보를 위해, 수신료 지역 분배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 지역에서 걷는 수신료를 지역으로 분배해, 지역의 수신료가 지역에서 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공적 재원으로 활용해 온전한 지역미디어생태계 구축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차후 수신료 용어에 대한 재정립 필요하다. 또한 민영방송사(상업 방송), 공동체방송사(시민 영역) 영역으로 설정 시, 수신료 지역 분배 대상에 대한 영역은 향후 합의 과정과 공공 영역에 지상파 방송사 전체를 대상으로 설정할 것인지도 논의 과제다.

3. 시민과 공동체 발전의 핵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1)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제화 필요

공영미디어와 상업미디어와 구별되는 제3의 시민미디어 영역으로서 지위 인정 필요. 미디어가 민주주의와 공동체 발전의 핵심 영역이며 시민이 보편적으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미디어 격차 해소 및 참여 방안으로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필요성 인정.

2) 지원 정책 수립 및 공동체미디어위원회 설치

공동체라디오와 마을미디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 및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 설치 필요.

4.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철폐

1) 방송사 비정규직 실태파악 공개 및 재허가 조건 재반영 요구

방통위는 2023년 지상파 재허가 과정에서 방송사에 공통으로 부과했던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및 자료 제출' 조건을 삭제함.

위 조항은 언론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고 자본을 견제하기 위한 주요 조건이었으나 2023년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심사결과 조항에서 삭제되었다는 것이 확인됨.

이러한 조치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지역 방송사 내 비정규직을 더 위기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됨.

이에 방통위 '방송사 비정규직 현황 및 실태 파악' 보고서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향후 재허가 과정에서 비정규직 개선 방안 마련 조건을 재반영 할 것을 요구함.

5. [전북민언론 성명] '여사' 호칭 논란이 토론회 거부 명분이 될 수는 없다! - 전주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선거토론회 보이콧 입장을 보며 -

전주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KBS 전주총국에서 주최한 선거방송토론회를 보이콧했다.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KBS 전주총국 제작진이 자신의 공약인 '김건희 종합특검'을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으로 토론회 자막에 '여사'를 붙여 방송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성윤 후보자는 이번 논란을 '대통령 배우자 심기 경호' 때문에 발생한 '공약 입틀막'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진상조사와 대국민 사과가 선행되기 전까지 KBS 주최 토론회는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KBS전주총국은 후보자가 상황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는 반박 입장을 냈다.

우선 KBS전주총국도 해당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여사' 호칭 논란은 최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여사' 호칭을 사용하지 않은 SBS에 공정성 위반으로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시작되었는데 심의를 통해 방송 시사보도프로그램에 일종의 정부 여당을 비판하지 말라는 '보도지침'을 내린 것과 다르지 않다고 언론계의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런 논란 속에서 굳이 '여사'로 수정된 공약 명칭 자막을 권한 것은 저널리즘 본령보다 정권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KBS 현주소를 드러내는 동시에 박민 사장 취임 이후 KBS 종사자의 자기 검열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여사' 호칭 논란이 토론회 거부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항의 표시 방식은 적절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이성윤 후보자는 앞서 후보자 일정을 이유로 방송과 라디오 토론회에 연속 3회 불참했었고, 이에 고의적으로 검증을 회피하는 거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되던 상황이다. 거기에 기자회견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무지, 현안에 대한 준비 부족을 드러냈고, 반개혁 인사 아니냐는 정체성 논란까지 시민사회에 의해 지적받았다. '여사' 호칭을 빌미로 토론회에 불참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후보자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이처럼 후보자가 본인에게 제기되었던 지역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부 보도 지침에 휘둘리는 언론사의 문제를 주장하고자 했다면, 오히려 이성윤 후보자는 KBS전주총국의 토론회에 참여해 자신의 입장을 유권자에게 더욱 분명히 전달했어야 한다. 그것이 <반윤 검사>라고 소개한 이성윤 후보자의 정체성에도 부합하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참이라는 방식을 택했고, 결과적으로 정치적 계산을 앞세워 참여의 유불리만 따진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증폭시켰다. 과연 이 과정에서 유권자에 대한 의무, 유권자의 알 권리를 후보자 캠프에서 고려했는지 의문이 든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선거토론회를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치부하는 후보자는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공당 후보자로서 책임을 다하라! 유권자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지 말라! 이성윤 후보자는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검증인 선거토론회에 적극 나서라!

2024년 3월 28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상훈, 이종규, 박민

6. [전국민언론네트워크 공동 논평] 서창훈 신문윤리위 이사장 재선임, 심히 유감이다!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신문윤리위") 이사장으로 재선임 됐다. 신문윤리위는 3월 27일(수) 제41차 정기총회와 제157차 이사회를 열고 서 회장을 이사장으로 재선임했다.

서창훈 이사장 재선임 결정에 전국민언론네트워크는 심의 유감이고 참담한 심정이다. 전국민언론네트워크는 2022년 11월 서 이사장 선임 결정에 '즉각 사퇴하라' 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사회적 책임과 자율규제 기구의 위상에 맞는 이사장을 선임해야 마땅할 신문윤리위가 결국 '범죄 경력'과 '토호 유착', '정언유착'으로 비판받아온 서창훈 이사장 재선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윤리성과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자율규제기구 수장에 범죄 전력이 있는 인사가 가당키나 한 것인가?

서창훈 이사장은 2005년 전북일보 사장 시절 신문사 별관 매각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이사장으로 있는 우석대학교 등록금 유용 등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전북일보 최대 주주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옹호 보도를 주도한 의혹, 이를 비판한 시민단체 활동가 고소·고발, 현직 언론사 회장 신분으로 유력 정치인 대선캠프 상임대표로 합류한 행보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지탄을 받았다. 이 정도면 언론사 회장으로서의 자질도 문제인데, 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 재선임이라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신문윤리위는 언론윤리강령을 기초로 신문 기사 등의 자율 심의 및 제재 제도를 통해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하는 기구이다. 따라서 시민과 독자들에게 언론윤리에 대한 설명 의무와 실행 책무를 갖고 있다. 그런데 신문윤리위는 언론 신뢰 회복과 자율 규제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퇴행을 보이고 있다.

언론의 사회적 책무 실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신문윤리위의 신문사 자율 규제는 퇴보하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솜방망이 제재 위주로 일관하여 자율심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23년에도 445건 제재 중 442건이 주의 조치에 그쳤다. 그나마 신문사가 압박을 느낄 과징금 제재는 시행세칙 개정으로 유명무실해져 실효성 확보는 더 먼 얘기가 되었다. 자율 규제 대상인 신문 사업자가 운영 주체가 되는 신문윤리위의 구조적 한계가 심의와 제재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있다. 결국 시민의 감시와 참여가 없는 언론자율규제기구에 대한 기대는 환상임이 명확하다.

신문윤리위는 대표적인 언론자율규제기구로서 언론이 지켜야 할 사회적 책무의 내용과 방향을 설정해야 할 중대한 임무가 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의 설치 목적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사를 이사장에 재선임 함으로써 그 위상을 추락시켰다. 신문윤리위원회 이사회 결정에 다시 한번 심히 유감을 표한다.

2024년 4월 3일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7. [지역민언론네트워크 보도자료] 제22대 총선 지역미디어 정책 의제 제안 답변 결과

1. 국민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이하 지역민언론)는 각 지역의 유일한 언론 시민단체로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 지방에 대한 중앙의 권력화가 공고해지고 미디어 영역에서도 중앙 집중적 구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언론의 위기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매체 환경의 빠른 변화와 정부의 시장중심주의 미디어 정책 기조는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역 민주주의 실현, 지역소멸 위기 해법으로서 미디어 자치권 실현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3. 22대 총선을 맞아 지역민언론 네트워크는 8개 원내 정당(3월 22일 기준, 위성정당은 제외)에 [지역 미디어를 정상화하고 지역시민의 '미디어 자치권' 실현을 위한 4대 분야 9개 세부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질의서에는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 대표성 강화하기 위한 △지역 대표성 강화 △권역별 지역방송위원회 설치, 지역민 보편적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역신문발전기금 건전성 강화 △지역방송발전기금 조성 △지역미디어를 위한 미디어 바우처 제도 수립 및 재원 마련 △지역미디어를 위한 공적 재원 조성, 시민과 공동체 발전의 핵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제화 필요 △지원 정책 수립 및 공동체미디어위원회 설치,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철폐를 위한 △방송사 비정규직 실태파악 공개 및 재허가 조건 반영 요구였습니다.

4. 정책 제안 결과 아래 [붙임자료1]과 같이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가 찬반 의견 및 세부 현안에 대한 기타의견으로 답변해왔습니다. 조국혁신당, 국민의힘은 검토 결과 미답변 의견으로 답변했습니다. 반면, 개혁신당과 자유통일당은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5. 지역민언론 네트워크는 각 정당의 답변을 토대로 총선 이후 [지역시민의 '미디어 자치권' 실현을 위한 4대 분야 9개 세부 의제] 실현을 위한 정책 협의와 추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미디어를 위한 공적재원 조성 등의 의제는 토론회를 비롯한 속의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6. [지역시민의 '미디어 자치권' 실현을 위한 4대 분야 9개 세부 의제를 제안] 답변 세부 결과를 첨부합니다. 끝.

1. 추진 경과

- ▶ 질의서 전달 : 2024년 3월 21일~22일 ▶ 질의서 회신 : 2024년 4월 2일
- ▶ 질의 대상 : 8개 원내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기호순)

2. 답변 결과

- 1) 정당별 답변 현황 ▶ 찬반 응답 :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 미답변 :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 무응답 :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8. [전북민언론 성명] 보복 취재와 부업으로 연명하는 사이비 기자는 퇴출해야 한다!

비판 기사를 앞세워 광고비를 강요하고, 관변단체 임직원을 검직해 부업 논란까지 낳은 임실 지역 기자에게 검찰이 지난 3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해당 기자는 임실군에 소재한 인터넷신문 발행인이며 동시에 도내 인터넷신문과 뉴스통신사의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면서 임실군 관변단체 임원을 검직했는데 인건비를 보조금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이해충돌 논란을 낳았다. 또한 해당 기자는 관변단체 임원 자리를 맡는 과정에서 기자 권한을 활용하며 공익적 목적의 보도를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썼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2018년부터 임실군을 출입하며 비판 기사를 빌미로 광고비를 강요한 정황이다. 부당한 광고요구를 일삼고, 보복 취재에 대한 우려까지 발생하면서 임실군청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연맹에서는 해당 기자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 요구 및 적폐 언론 행위에 대한 전면 투쟁까지 거론하게 되었다.

이처럼 반복되는 언론인의 사이비 행위를 보는 우리의 심정은 참담하다. 지역 언론사의 윤리 의식과 처우개선 대책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언론 윤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기자들과 행정 일선이 느끼는 박탈감과 모멸감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언론에 대한 낮은 신뢰의 원인인 '구조와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 이상 유사한 문제는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언론계는 사이비 기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신문 및 통신사들은 지역독립법인이라며, 또는 프리랜서 기자라는 이유로 자사 지역 기자의 이해충돌 행위를 방치했으며, 지역의 일부 일간지에서는 인력 부족과 광고 영업의 필요성을 이유로 문제의 기자가 복귀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했다. 사이비 기자가 돌아오는 발판을 지역 언론사가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구조 개혁과 자율정화 의지를 앞장서서 천명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기자의 보복 취재와 검직 등 부업 논란이 빈번히 발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숨방망이 처벌 때문이기도 하다. 문제 행위를 반복해도 관찮다는 학습효과가 계속되는 한 위와 같은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법부가 해당 기자를 엄중하게 처벌해 나쁜 구조와 관행을 끊어내는 사례로 삼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역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감시,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번 임실 기자 사건이 보복 취재와 부업으로 연명하는 사이비 기자가 퇴출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4년 4월 22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상훈·이종규·박민

9. [전북민언론 성명] ‘갑질’부터 ‘용돈’ 의혹까지 불려온 대변인실 광고비 지급 논란, 철저한 감사 및 기자단 해명 촉구한다.

서울신문은 지난 23일 전북도청 대변인실 간부가 일부 지역 언론사에 입막음용 광고비를 지급해 뒷말이 무성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자신을 좋지 않게 평가하는 전북도의회 출입 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 거액의 선심성 광고비를 지급해 도마 위에 올랐다. 여행을 가는 기자 7명에게 1개사 당 400만 원씩 280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여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지적”을 전했다. 공적 예산인 도청 홍보비를 공무원 개인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활용했다는 비판이다.

이와 함께 노컷뉴스도 27일 대변인실 감사 착수 소식을 전하며 “A 간부는 B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했는데 “B 직원이 지난해 말 특정 언론사에 광고비를 임의로 몰아줬다”는 게 갑질 논란의 첫 번째 이유”라고 보도했다. 이어 “A 간부는 부적절하게 광고비를 집행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A 간부가 본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전북도의회 출입 기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광고비를 지급했다”라고 보도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대변인은 자신을 좋지 않게 평가하는 지역 언론사 기자들을 선별해 광고비를 지급했고, 특히 ‘여행을 가는 기자들’에게 지급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통상 언론사들은 광고를 가져오는 기자에게 광고비의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위 광고비가 일종의 여행을 앞둔 기자들에게 제공한 ‘우회적 용돈’이 아니었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이러한 형태의 광고 지급이 행정과 대변인에 대한 불편한 기사를 입막음하거나 또는 관계 회복을 염두에 둔 집행임을 알고 있었다면, 언론사 또는 출입 기자는 회피했어야 한다.

또한 보도에 나온 “B 직원이 지난해 말 특정 언론사에 광고비를 임의로 몰아줬다”라는 내용도 석연치 않다. 대변인실 내 홍보비 집행 기준과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걸 방증하는 부분이다. 특정 언론사를 지원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논란이 행정의 홍보비 집행 기준 미비라는 측면을 넘어 이해관계자 간에 광고를 매개로 한 청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하는 언론인이 윤리 준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는 이유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전북도청은 공적 자금인 홍보비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 투명성을 확보하라. 대변인은 광고비 집행이 자신의 고유 권한이라 주장하지만, 예산은 기준에 맞춰 집행하고 예외성을 최대한 배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대변인실의 업무가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홍보비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지역민의 불신을 더 키우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논란이 전북도청 홍보 예산 조례 마련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 전북기자협회는 그동안 연수를 빌미로 기자들의 부당한 광고 요구나 거래가 존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협회는 논란이 발생하자 다가오는 6월에 예정되어 있던 연수를 무기한 연기했다고 밝혔지만, 기자협회 연수를 빌미로 논란이 발생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번 광고비를 지급받은 대상이 협회사 소속이라는 점에서 의혹이 일부라도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징계에 대한 의지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하나, 전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은 진상을 조사하고 공개해야 한다.

도의회 출입기자단은 언론사 내, 고 연차 기자들이 출입하며 언론사 및 기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곳이다. 광고를 받게 된 경위 및 사건을 인지하게 된 이후 출입기자단의 대응까지 진상 조사를 통해 진위를 파악하고 해당 내용을 지역사회에 공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하나, 대변인실 문제를 내부 감사에서 제대로 규명해 낼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감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또한 이번 광고비 집행 건이 단순히 대변인의 판단에 의한 것인지, 제안자가 있는 것인지도 감사 과정에서 밝혀야 할 것이다.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관계자 징계나 수사의뢰까지 이어져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일개 부서, 개인의 갑질 논란으로만 국한할 수 없다. 그동안 계속해서 이어져온 홍보비 집행 기준의 세부 원칙 마련을 외면하고, 관례·관행이라는 이유로 전체의 윤리 의식이 무너지고 경계심이 해이해진 결과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철저한 감사와 자체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광고비 집행 의혹을 해명하길 요구한다.

2024년 6월 3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상훈·이종규·박민

10. [1차 공개질의서] 전북도청 대변인실 광고비 지급 논란 관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전북도의회 기자단에 묻습니다.

1.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전북민언련)은 지역 언론 환경을 감시·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시민사회단체입니다.

2. 본회는 지난 5월 서울신문 보도로 촉발된 전북도청 대변인실 광고비 지급 논란과 관련해 <‘갑질’부터 ‘용돈’ 의혹까지 불려온 대변인실 광고비 지급 논란, 철저한 감사 및 기자단 해명 촉구한다>는 성명을 6월 3일 발표하고 ▲홍보비 집행 원칙 기준 마련 및 투명성 확보 ▲전북기자협회 연수 상황 점검 ▲전북도의회출입기자단 진상 조사 및 공개 ▲감사위원회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3. 이후 본회는 전북기자협회를 통해 6월 4일 아래와 같은 전북도의회 기자단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전북기자협회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는 전북도의회 기자단의 입장을 받았습니다. 전북기자협회 연수는 자체 경비로 운영되며 도가 자체 판단으로 일부 언론사에 집행한 광고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단 전북기자협회는 도 감사 등으로 인해 연수를 잠정 연기했으며 추후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할 예정입니다.

4. 전북도의회 기자단이 공개한 입장으로는 보도에서 제기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에 전북도의회 기자단에 묻습니다.

첫째, 위 입장은 전북도의회 기자단의 공식 입장입니까? 아니면 전북기자협회 소속 전북도의회 출입 기자들만의 입장입니까? 기자단 공식적인 논의로 도출된 입장입니까?

둘째, 전북도의회 기자단이 주장하는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은 정확히 보도의 어떤 내용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닙니까? 본회는 위 광고비가 “일종의 여행을 앞둔 기자들 (일부)에게 제공한 ‘우회적 용돈’이 아니었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참고로 보도에서 지적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보도 내용)- 자신을 좋지 않게 평가하는 전북도의회 출입 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 거액의 선심성 광고비를 지급해 도마 위에 올랐다. 여행을 가는 기자 7명에게 1개사 당 400만원씩 280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여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지적- A 간부는 부적절하게 광고비를 집행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A 간부가 본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전북도의회 출입 기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광고비를 지급했다.

5. 다시 한번 전북도의회 기자단에 요구합니다. 광고를 받게 된 경위 및 사건을 인지하게 된 이후 기자단의 대응까지 진상 조사를 통해 진위를 소상히 파악하고 해당 내용을 지역사회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는 전북도의회 기자단의 입장을 기다리며 향후 이와 관련해 파악되는 내용을 모두 공개할 것임을 밝힙니다.

▶ 답변 요청 시기 : 2024년 6월 12일(수)

11. [2차 공개질의서] 싹짓돈 논란 키운 전북자치도청 대변인실 광고비 집행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1.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전북민언련)은 지역 언론 환경을 감시·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시민사회단체입니다.

2. 전북민언련은 지난 5월 언론 보도를 통해 대변인실에서 발생한 선심성 광고비 지출 문제를 인지하게 되었고, 이후 성명과, 공개질의서, 기자회견, 의견서 접수 등의 과정을 통해 ▲홍보비 집행 원칙 기준 마련 및 투명성 확보 ▲전북기자협회 연수 상황 점검 ▲전북도의회 출입기자단 진상 조사 및 공개 ▲감사위원회 철저한 조사를 요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이후 두 건의 보도를 통해 대변인과, 전북도의회 기자단의 입장 및 도청 광고비 집행 과정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변인은 이러한 선심성 광고 집행 또한 '대변인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며, 기자단은 "해명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해명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대변인실의 전북도의회 출입기자단 광고비 집행은 언론사의 협찬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생략) 대변인은 이날(4/16) 특정 언론사 기자 2명과 오찬을 함께 한 뒤 오후에 회의를 소집해 7개 언론사에 400만 원씩 총 2800만 원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언론사 당 광고비와 집행계획도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알렸다. 전북도의회 출입 7개 언론사는 전북자치도 대변인실에 광고 협찬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연락이 와서 통상적인 관행으로 알고 회사 측과 연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6/14

- 전북도청 대변인은 지난 13일 미디어오늘에 일상적인 광고 집행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임 대변인은 "광고 지출은 대변인의 권한"이라며 "출입하는 언론사들 상대로 꾸준히 광고비 지출을 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했다. (생략) 전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출입기자단 간사는 이날 미디어오늘에 "해명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해명할 필요도 없다"며 "전북도에서 감사를 하고 있으니 결과가 나오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6/14

4. 지금까지 보도를 살펴보면 이번 광고비 집행 건은 통상적인 절차도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집행의 목적, 예산 액수 산정의 근거, 배경 등 이번 홍보비 집행과 관련한 의문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자치도 대변인실에 묻습니다.

첫째, 갑질 논란의 시발점이 된 대변인실 주무관의 임의 집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둘째, 주무관이 서울신문과 인터뷰한 내용(6/14 보도, 대변인이 해당 언론사 기자와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회의에서 거론한 내용 및 제시한 근거)은 사실입니까?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이번 7개사 선별 지급의 사유 및 근거는 무엇입니까?

셋째, 대변인실은 광고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대변인 또는 담당 직원이 그때그때 임의로 집행이 가능했던 구조가 아니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보비 집행 기준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해명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해명할 필요가 없다'는 전북도의회 기자단에도 다시 묻습니다. 위 발언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전북도의회 기자단은 전북기자협회 외에는 해명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겁니까? 이번 감사에서 중요하게 밝혀져야 하는 것 중 하나는 관계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광고비를 수단화했는지 여부입니다. 4월 16일 대변인과 특정 기자 2명이 오찬을 함께했으며 이후 광고 집행이 이어졌다는 보도 내용은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지역사회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공식적, 공개적으로 제시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6. 본회는 이번 논란이 전북도 홍보비 집행 기준의 원칙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해 파악되는 내용은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임을 밝힙니다.

12.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 운영 정상화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1만 인 서명으로 우범기 시장, 태영건설 회장 국감 세울 것 전주시는 리사이클링타운 실시협약 해지하고, 해고노동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전주시에서 발생한 음식물 및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인 종합리사이클링타운의 운영 파행이 반 년을 지나고 있다. 전주시민의 재산이지만 그 운영은 민간기업에게 맡겨져 있는 전주리사이클링타운은 민간투자사업이 갖는 문제들의 백과사전 격이다. 민간기업은 시민의 재산으로 음폐수를 무단 반입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바빴고, 이를 문제 삼고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한 조합원들은 해고하고 나섰다. 경험 없는 운영사가 운영을 맡으며 사고는 빈번했으며 결국 폭발 재해로 노동자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으며 그 중 1명은 목숨을 잃었다.

5월 2일에 발생한 리사이클링타운 폭발 재해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희생 시킨 전형적인 사례다. 리사이클링타운 시설은 수년 전부터 스테인레스 배관이 있던 자리를 청호스로 대체한 상태로 운영 중이었다. 비용 절감 때문이다. 스테인레스 배관으로의 교체였다면 화기를 사용할 일이 없었지만, 청호스 교체에는 화기 사용이 필요하다. 또한 밸브와 유량계가 있는 스테인레스 배관과 달리 청호스는 배관 내부 상태를 알 수 없다. 청호스 사용자체가 누출 및 폭발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 또한 여기에 기존의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 해고와 시설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성우건설의 운영이 겹치면서 폭발재해로 이어지게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전주시에 있다. 전주시는 시민의 재산인 리사이클링타운이 환경공단의 승인을 거친 설계규격에 따라 건설, 유지되도록 관리할 책무가 있다. 스테인레스 배관을 청호스로 교체하는 것은 설비의 중대한 변경이자 보증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전주시의 승인이 필요하다. 화관법, 산안법이 정한 배관 기준을 위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업체의 무단 시설변경이 중대재해로 이어졌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지금도 원래 스테인레스 배관이 있던 자리는 청호스로 대체된 채 시설이 가동 중이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시설이 안전해 졌으니 재가동해도 된다는 태영건설의 주장을 거들 뿐이다. 게다가 태영건설 컨소시엄 측이 사고의 원인이 노동자에게 있다는 식의 왜곡 인터뷰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전주시는 이를 정정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다.

전주시의 봐주기는 이 뿐만이 아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관리운영계약서에 따르면 전주리사이클링타운 시설은 태영건설의 명의로 제반 책임과 의무가 이행되어야 한다. 태영이 성우건설을 앞세워 계약을 명백히 부정하고 있음에도 전주시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운영사 변경 역시 그 절차의 모든 과정이 불법으로 점철됐다. 시설기본계획과 실시협약(제42조)에 따르면 운영사는 소각시설 50톤/일 또는 음식물처리시설 100톤/일의 운영실적 자격을 갖춰야 하지만 성우건설은 리사이클링타운 운영 전에 환경시설 운영실적이 전무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성우건설로의 운영사 변경을 승인했다. 또한 실시협약(제44조)에는 시설이 보증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도록 정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에서 복합약취가 설비 보증기준을 수 백 배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을 때에도 전주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오히려 전주시는 태영건설 대신 시민의 세금을 20여 억 들여 악취저감시설 공사를 해주겠다

고 나서는 실정이다.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우리는 태영건설 하수인을 자처하는 전주시에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한 뜻으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전주시가 이미 휴지 조각으로 만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리사이클링타운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또한 공대위는 1만인 서명을 통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 반드시 우범기 전주시장과 태영건설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리사이클링타운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활동은 기후 위기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폐기물 순환의 공공성을 되 찾는 과정이기도 하다.

전주시는 리사이클링타운 실시협약을 해지하라!
전주시는 리사이클링타운 사용료 지급을 중단하라!
전주시는 해고노동자를 즉시 복직시켜라!
전주시는 태영건설 컨소시엄 불법 행위 즉시 처분하라!
국회는 우범기 시장과 태영회장을 증인 채택하라!

2024년 6월 26일

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 운영 정상화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북교육연대,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정의당전북특별자치도당, 진보광장, 진보당전북특별자치도당,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13.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민선8기 전주시정 2년 평가 기자회견> 예산 폭탄은 없었고, 시민의 삶과 도시에 대한 위협만 있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7월 3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프로젝트'와 '10대 역점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시민 불통'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독선적인 행정에 대해 아무런 반성과 평가 없이 그 근거가 불분명한 장밋빛 수사들로만 채워진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하다. 지키지 못한 예산 폭탄이라는 약속과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원도심의 공실 발생과 공동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전주 민생경제 추락에 대해 아무런 해명과 대책도 없었다. 왕의 공원 프로젝트,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 등 거창한 계획만 있을 뿐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던 것은 지난 2년 동안 우범기 시장이 진행한 내용 없는 현장 브리핑 이벤트와 닮아있다는 점이 더욱 서글프다.

우리 전북지역 시민사회는 민선8기 전주시정 2년을 평가하고 남은 2년 전주 발전의 올바른 방향을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1. 시민의 삶과 도시를 위협하는 난개발 규제 완화 사업

백년대계 도시계획은 우범기 시장의 개발 우위, 기업 우선 정책에 따라 춤을 쳤다. 한옥마을 프랜차이즈 입점 등 건축물 용도 완화, 고도 제한 해제, 한옥마을 케이블카 추진 등으로 천년 역사도시 전주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대규모 개발 계획과 규제 완화를 남발하면서 도시계획의 공공성은 위축되고 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균형 있는 정비, 미래세대를 염두에 두고 철저히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지역의 전문가 시민, 단체들의 참여 속에서 오랜 시간 충분한 토론과 검토,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만든 조례와 정책이 폐기되었다. 시 건축물 높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폐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 상향, 자연녹지 규제 완화, 고도제한 해제 등 도시의 고유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도시계획조례도 크게 후퇴했다. 규제 완화의 명분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 해소이지만 가장 큰 혜택을 본 건 대한방직 터와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자인 (주)자광과 (주)롯데쇼핑이다.

우시장이 그린 100만 광역도시의 밑그림에는 현재에 대한 분석,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 지역 사회 공론화가 없다. 전주 발전에 장애가 되는 벽을 허물겠다며 현장 브리핑이라는 이벤트를 벌이고 다니지만 대부분 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하고 실현될 가능성도 낮다. 예산 계획도 예산 확보도 불투명하다.

우시장은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기업들이 온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해왔다. 공공의 이익, 시민의 이익을 지켜야하는 시장이 대규모 아파트 사업과 복합쇼핑몰 개발을 추진하는 업체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

2. '로또 대박, 예산 폭탄'은 없었다. 외려 심각해진 재정 위기

우범기 시장은 후보 시절 각종 개발 공약과 지역발전론을 부각하면서 시장에 당선되었다. 과거의 영광을 강조하면서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예산 폭탄을 장담했다. 하지만, '전주의 로또'라면서 입만 열면 강조하던 '예산 폭탄'은 어디에도 떨어지지 않았다. 재원이 없어 아직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 국비 매칭 예산이 없어 사업을 반납해야 할 정도라고 한다.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 4천억 원가량인데, 확보된 예산은 순 세계 잉여금 200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시의회의 지적이다. 추경 편성 예산 대부분이 민생과 직결되어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복지 안전망이 가장 먼저 구멍이 날 판이다.

그런데, 우범기 시장은 실적 부풀리기 개발사업 이벤트에만 열을 올렸다. 23년 1월부터 현장 브리핑이라는 이름의 개발사업 이벤트 기자회견만 모두 8차례 진행했다.(시 홈페이지 보도자료 및 기사 검색) 관련 사업비만 총 5조 369억 원에 이른다. 화려한 조감도만 난무할 뿐 사업의 타당성에 기반한 세부 추진 계획은 부실하고 구체적 예산확보 계획은 찾아보기 어렵다. 아니면 말고 식 선언에 그쳤다.

3. '귀틀막' 불통 행정으로 무너진 민관협치

각종 위원회나 민관협력 기구도 해체 수준의 변화를 겪거나 폐지되었다. 거버넌스 기구의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고, 청년 여성 정책의 거점 역할을 하던 사회혁신센터는 문을 닫았다. '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되던 다울 마당은 이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우시장은 어떤 공론 절차도 없이, 다른 대체 기구도 없이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배제했다.

대신, 시민이 자유롭게 드나들던 시청사에는 불통의 상징인 게이트를 설치했다. 비서실은 전화를 받지 않고, 직소 민원실이 비서실의 하위조직처럼 전화를 당겨 받는다. 시민 동의 절차는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내는 동별 주민간담회로 대체됐다. 권위주의 시대어나 있을법한 전시성 행사를 정말 소통 행보라고 믿고 있는지 안타깝다.

시민들이 화를 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런 예고없이 아름답리 버드나무를 벌목한 것이다. 오목대 상수리나무와 도시공원에 있는 나무들도 시민들과 아무런 논의과정도 없이 잘려 나갔다.

4. 널뛰기 정책 변경

실현가능성 논란과 지자체 공약사업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천안~전주 간 KTX 노선 신설 공약은 사라지고, 정부의 타당성 조사가 예정된 <새만금 ~ 전주 ~ 김천 철도 구축> 3조 5천 억 원(국비)으로 바뀌었다. 이 사업 또한 중앙정부가 정할 국가 정책사업이다. 국가 정책 반영을 위한 비예산 사업으로 배치해야 하나, 공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 부풀리기의 전형이다.

'전주 호남제일문 조성 사업'은 '전주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대표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무려, 총 사업 면적은 총 88만2074㎡에 사업비는 1조 3,723억 원(국비 273억, 도비 11, 시비 9,093, 지방채 146, 민자 4,200) 규모로 예산도 늘려 잡았다. 육상경기장, 실내 체육관, 월드컵경기장을 복합스포츠타운에 포함한 이 사업의 실현 시기 목표는 2040년이다. 과연 실현을 위한 계획인지 말 뿐인 계획에 불과한 지 알 수가 없는 전형적인 사업 규모 뺑뺑이이다.

20년간 1조 5천억 원을 쏟는 문화관광 대표 공약 사업인 <24. 조선 공원 프로젝트>는 시장이 현장 발표한 지 1년여 만에, '왕의궁원' 프로젝트의 용어 및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는 용역을 추진한다. 사업 내용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의회나 전문가 등의 지적 사항이 이어지자, 사업을 재구조화하겠다는 것이다. 후백제 유적과 조선왕조 유산을 연계해 역사관광 콘텐츠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취지인데, 이와 정반대되는 전주한옥마을 관광케이블카 건설 한옥마을 슬로시티 폐지, 대규모 쇼핑몰 건설 사업이 세부 사업으로 배치되었다. <25. 후백제 왕도 복원사업>은 <후백제 왕도 역사골격 조성>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예산은 2,613억 원(국

비 1,295, 도비 653, 시비 665)으로 줄었다.

<49. 전주 관광(한옥마을) 케이블카> 인수위 확정 공약은 540억 원, 시비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최종 600억원 대 민간투자 방식으로 변경했다. 최근 이용자 수가 크게 줄고, 우후죽순 케이블카 난립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환경과 경관을 훼손하고 경제성도 낮은 난개발 사업이 될 우려가 크다.

이 사업들은 시 예산으로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추진 중이다. 용역만 하고 책상 서랍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반환점을 돈 하반기에는 사라지고 무너진 민관협치를 복원해 소통을 강화하고 민주적 숙의 절차에 따른 정책수립이 이뤄져야 한다, 행정의 일방적인 결정과 강행으로는 힘을 실을 수 없다. 사회적 갈등과 논쟁만 불러올 뿐이다. 시민의 신뢰도 잃고 시장의 리더십에 상처만 남길 것이다. 시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거쳐 결정한 사안은 힘이 세다. 결정의 구속력이 크고, 효율성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시정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2024년 7월 4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4. [전북민언론, 전주시민회 공동 성명] 도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었나? 전북 국회의원·전북도의원·전북도의회기자단 재난 피해 속 술자리 간담회를 보며

지난 10일 전북에 내린 폭우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전북의 국회의원,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기자단이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날 윤준병 국회의원이 자신의 SNS에 공개한 간담회 단체 사진은 술자리로 보이는 장소에서 정치인들과 기자단이 환하게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모습이였다. 주민의 피해와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새다. 참석자들은 사전에 예정된 공식 간담회였다고 해명했으나 술자리까지 이어진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부적절한 모습이다.

낮은 재난 감수성은 물론 업무추진비 회계 지침을 우회하려 한 문제도 심각하다. 프레스안 전북취재본부는 식사 값을 업무추진비로 '쪼개기 결제'한 상황 및 언론 보도 이후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지불한 정황을 포착해 보도하며 이러한 결제 과정이 행안부의 회계 지침을 비껴가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언론의 보도처럼 이번 업무추진비 결제 행태는 그동안 문제적 행태로 거론되던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를 그대로 구현하며 도민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모양새가 되었다.

김영란법 위배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 프레스안 전북취재본부 기사에 따르면 "이날 한우 고기와 술을 곁들인 식사를 했고 후식까지 포함한 총 결제금액은 86만 1000원"으로 밝혀졌다. 분회에서 확인한 결과 이날 식사자리는 언론인 9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이며 각 50,650원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언론인에게 제공 가능한 식사비 3만 원을 초과했다.

당연히 비용처리 절차가 정상적이었는지도 의문이다. 기자단은 간담회 이후 비용을 분담해 도의원에게 송금했다고 해명했음에도 여전히 결제 과정에 많은 의혹이 남는다. 모두 언론 보도로 사안이 알려진 후에 기자단 비용 송금과 현금 재결제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소위 사실을 감추려 참석자들 사이에 말맞추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기자단이 모두 전북기자협회 소속사이며, 특히 언론윤리와 이해충돌 방지를 요구받는 협회 소속 언론사라는 점에 분회는 더욱더 유감을 표한다. 도의회를 출입하는 기자와 도의원은 이해관계가 있기에 간담회 형식과 절차,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더욱 엄격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사전 노력이 충분했는지 의문이다. 회식으로 이어지는 저녁 시간대, 고가의 간담회 식사 장소, 업무추진비 선결제 후정산 등의 상황을 피할 수 없었냐는 것이다. 오히려 사후에 이뤄진 조치로 의혹만을 키웠을 뿐이다. 더구나 지난 6월 전북자치도 대변인실 연수 관련 선심성 광고 논란에 해명과 진상조사를 요구한 시민사회단체에 "해명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해명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으로 도민 무시 행태를 보였던 전북도의회기자단이다. 낮은 재난 감수성까지 드러낸 기자단에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재난 피해 상황에서 적극적 대책 마련과 낮은 책임의식을 드러낸 이번 술자리 간담회 문제에 대해 지적한 프레스안과 전북의소리 등 일부 언론사를 제외하고는 도내 주요 언론사 다수는 해당 문제를 침묵하고 있다. 자사가 관여되어 있거나, 언론계 내부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나쁜 관행이 이번 사안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역 언론에 대한 신뢰를 높일 의지가 없다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소속 정읍·고창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의 술자리에 대해 진상조사를

전북도당에 요구했다고 한다. 도당은 제기된 위반 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해 징계해야 할 것이며 지역 언론은 적절한 징계와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보도해야 할 것이다.

전북민언련과 전주시민회는 청탁금지법을 포함한 이번 논란에 대해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정치권의 조치와 언론사의 보도 행태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4년 7월 16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주시민회

15. 도민 정서 안중에도 없던 전북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취지 기자회견

7월 10일 저녁, 윤준병 국회의원은 자신의 SNS에 도의원, 도의회 기자단과 함께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사진을 올렸다. 지역 내 고가의 한우식당에서 다수의 술병이 선명하게 찍혀 있던 단체 사진이었다. 지난 10일이 어떤 날인가? 전날부터 내린 역대급 폭우로 도민들의 재산피해와 함께 인명 사고까지 속출하던 때였다. 현장을 살피거나, 혹시 모를 피해를 대비해야 할 시점에 정치인들과 기자단 소속 기자들이 모여 술자리로 이어진 식사를 진행한 것이다. 당장 정치인들의 낮은 재난 감수성에 대한 거센 비판이 나왔다. 이에 당사자들은 사전에 잡혀있던 기자단과의 공식 간담회였다는 해명을 내놨으나 비상시기에 술자리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도민 피해와 정서는 안중에도 없던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식사비 결제 과정도 석연치 않다.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 기사에 따르면 “이날 한우고기와 술을 곁들인 식사를 했고 후식까지 포함한 총 결제금액은 86만 1000원”이며 45만 원은 식사 전에 ‘선결제’가 이뤄졌고 나머지 41만1000원은 전북도의회 의원들의 다른 위원장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후결제해 해당 의원은 이후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재결제한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이처럼 ‘쪼개기 결제’에 ‘카드깡’ 논란까지 불러온 무리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행안부 회계 지침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그동안 문제적 행태로 거론되던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말할 것도 없다. 해당 간담회는 정치인 5명, 언론인 9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이 식사를 했으며 개인 당 5만 원이 넘는 식사 값이 지불되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를 출입하는 기자들이며 직무를 담당하면서 형성된 관계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존재하기에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되는 언론인은 3만 원이라는 가액 금액을 넘어서는 식사를 제공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당연히 비용처리 절차가 정상적이었는지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기자단은 간담회 이후 비용을 분담해 7월 12일 도의원에게 송금했다고 해명했음에도 여전히 결제 과정에 많은 의혹이 남는다. 모두 언론 보도로 사안이 알려진 후에 기자단 비용 송금과 의원의 현금 재결제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사후 처리에 불과하다. 소위 사실을 감추려 참석자들 사이에 말맞추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때문에 보도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사후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지역사회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간담회 이전에 공식적인 비용 부담 논의가 있었는지 수사를 통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행태를 비판하고 견제했어야 할 언론인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 상황은 참담하기까지 하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기자단이 모두 언론윤리와 이해충돌 방지를 요구받는 전북기자협회 소속 언론사라는 점에서 더욱 유감이다. 간담회 형식과 절차, 비용 등에 있어 더욱 엄격한 고려가 필요했지만 이를 회피하기 위한 사전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일부 언론사를 제외하고 해당 언론사들은 자사 기자들이 관여된 해당 사안을 보도하지 않는 문제점까지 드러냈다. 비판의 대상이 된 것으로도 모자라, 침묵으로 일관하는 행태라니! 언론계 내부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나쁜 관행을 이번 사안에서도 여실히 드러내며 지역 언론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는 걸 방치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소속 정읍·고창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의 술자리에 대해 진상조사를 전북도당에 요구했다고 하나 별다른 진상조사 없이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다. 도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명의로 사과문을 돌리고 마무리했다. 도의회기자단은 별다른 사과문도 나오지 않았다. 고발까지 사안이 이어지게 된 것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에 대한 해당 단위들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이번 사안의 고발인으로 참여하며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또한 정치권의 후속 조치와 도의회기자단의 관계, 향후 보도를 예의주시하며 책임을 물어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다. 다시 한번 수사 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2024년 7월 25일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총전북본부,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민회, 정읍동학시정감시단,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책방토닥토닥

16. [성명] 수억 원의 보조금 유용 횡령 의혹이 뉴스거리가 아니란 말인가! - 전주시민축구단 보조금 유용·횡령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 -

전주시 보조금 관리 부실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이번에는 전주 시민축구단이다.

<전북의소리>는 지난 12일에 “전주시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전주 시민축구단이 최근 자금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단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전주 시민축구단은 전주시를 연고로 K4리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전주시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팀이다. 기사는 해당 보조금이 축구단 소속 선수의 인건비와 구단 운영비 등에 사용되었으나 올해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내부 고발이 있었고, 전주시가 수사의뢰에 나서는 등 대처에 나섰지만 내재됐던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사망한 단장이 최근까지 전북지역 한 일간지에서 부장급 기사를 검직해 왔고 체육회를 출입해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는 점, 이후 후속기사에서는 임금체불뿐 아니라 대금결제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본 거래 업체들이 있음도 밝혔다.

우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역 언론의 보도 행태에 주목하고 있다. 기사 및 본회가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이번 사안은 한해에 우연히 발생하게 된 일회적인 사안이 아니다. 이미 2022년부터 전주시의회에서 축구단의 보조금 유용을 포함한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2023년 해당 예산이 삭감되기도 하는 등 이미 많은 단위에서 문제를 인지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전주 시민축구단의 예산은 2013년 38백만 원부터 시작해, 현재는 7억 이상의 보조금이 집행될 만큼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지원액으로는 상위 순위권에 해당될 정도로 규모가 커진 사업이다. 그런데 축구단 지원 예산이 늘어나고, 일부 삭감되었던 예산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일부 동료 기자들이 언론인의 지위를 활용해 개입한 정황들도 전해지고 있다. 국민의 혈세가 투명하게 집행되는 것을 감시해야 할 기자들이 오히려 동료 기자의 활동을 비호하는 데만 앞장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의할 대목 가운데 하나는 전주시청 출입기자단의 보도 행태다. 현재처럼 파문이 커진 상황에서도 출입기자단 소속 언론사 다수가 사건 자체를 무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당사자가 사망했고, 관련 의혹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지만, 보조금 유용으로 인한 인건비 미지급이 내부 고발에서 나왔고, 이미 수년 전부터 의회의 문제제기가 있어왔으며, 수사의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무보도 된 경위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전주시청출입기자단 관계자들의 발언과 해명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보조금을 그렇게 유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다는 해명과 동료애를 강조할 뿐, 해당 사안을 공적으로 드러내 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하려는 언론인으로서의 자세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환경감시 기능은 당연히 퇴색할 수밖에 없고, 그동안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가 요원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출입기자단의 존재이유를 고려할 때 스스로 감시 기능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대한드론축구협회 보조금 문제로 전주시가 자체 감사를 진행한 게 불과 얼마 전이다. 연이

은 보조금 관리 부실 문제, 그리고 언론인이자 단장의 유용·횡령까지 거론되며 다수의 피해가 드러나는 현 상황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그만큼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수적이다. 또한 겹겹의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 촉구단 정상화를 위한 언론사의 취재 또한 필수적일 것이다. 철저한 수사 관련 보도가 이어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4년 9월 25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상훈·이종규·박민

17. [보도자료] 전북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청탁금지법 고발 건 소속기관에 과태료 부과 사안으로 통보

1.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전북민언련)은 지역 언론 환경을 감시·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시민사회단체입니다.
2. 지난 7월 10일 국회의원·전북도의원 5인이 간담회 명목으로 전북도의회 출입기자 9인과 함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대금 861,000원을 전북도의원 두 명이 나눠 결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일괄 결제된 음식물의 가액을 산정한 결과 개인당 55,933원으로 확인되어 전북지역 시민사회 활동가 17인이 고발인이 되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총 14인을 7월 25일 고발했습니다.
3. 전북경찰청은 9월 25일 불송치(각하)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사유로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과태료 사안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혐의 없어 불송치(각하)”했으며 이와 별도로 “이 사건은 부정청탁금지법 제8제2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과태료 부과 사안이므로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액(공직자등 1회 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대가성과 상관없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4. 앞으로,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소속기관(도의회 및 언론사)은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안의 경우 소속 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그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며, 과태료 관할 법원이 재판(결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7항) 이에 소속 기관의 법원 통보 이행을 준수할지 여부를 본회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5. 전북민언련은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법원 통보 이행 여부 및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지역 사회에 공개할 것임을 알립니다. 향후 정치권의 조치와 언론 보도 경향도 지켜보겠습니다.<끝>

18. [전국민언론네트워크 보도자료] 전국민언론 'KBS 낙하산 사장 반대' 5개지역 1인 시위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전국민언론네트워크)가 서울, 광주, 부산, 전주, 창원 등 5개 지역 KBS 앞에서 'KBS파괴' 주범인 윤석열 정권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고 시민참여단 평가를 통한 사장 재공모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동시다발로 벌였다.

10월 14일(월) 낮12시부터 1시까지 진행된 이번 1인시위에서 전국민언론네트워크는 '공영방송 사장은 국민이 직접 뽑자'는 구호를 내걸고,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시민참여에 의한 사장 선임이 필수 절차라며 재공모를 요구했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이진숙·김태규 두 명만 참여한 방통위 추천으로 구성된 KBS 이사회 의 일방적 차기 사장 선임 절차는 원천 무효라고 민언련은 비판했다. 특히 2018년 도입한 시민참여단 평가 배제는 정권 입맛대로 공영방송을 위락편락할 낙하산 사장을 내리꽂기 위한 밀실선임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전국민언론네트워크는 KBS 차기 사장 후보로 지원한 박민 사장, 박장범 뉴스9 앵커, 김성진 방송뉴스주간, 김영수 전 한화건설 부사장 모두 KBS를 망치는 데 앞장서거나 방송경력이 전무한 부적격임을 선언하고, 공영방송의 개방성·투명성·공정성 제고와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시민참여단 평가를 통한 재공모를 거듭 촉구했다.

전국민언론네트워크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등 8개 민언련이 참여하고 있다.

19. [성명] 위헌적 비상계엄! 내란 시도! 윤석열 퇴진하라!

윤석열의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을 흔들었다. '반국가세력', '종북세력' 등 선동적 표현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며 위헌적·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요건도 갖추지 못한 윤석열의 명백한 내란 시도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초헌법적인 포고령을 통해 언론 통제 의지까지 결연하게 드러냈다. 제1호 포고령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공포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고 했다. 실제 계엄사령부가 4일 보도처를 설치해 언론에 대한 통제와 검열 기능도 맡을 예정이었다는 것이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임기 시작부터 언론을 통제하고 공공성을 훼손해 온 윤석열의 행보는 악랄했던 전두환 정권의 언론 탄압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군대를 동원한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와 주권자를 위협한 헌정질서 파괴행위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을 향해 '척결'과 '처단'을 언급하며 총부리를 겨누었다는 점은 용납될 수 없다.

민주주의와 주권자를 위협한 윤석열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 윤석열에 동조해 내란에 가담한 김용현 국방장관, 군 지휘자 모두 구속 수사하라. 또한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며 제지에 나서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공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국민을 위협하고 내란을 감행한 대통령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그럼에도 윤석열이 끝까지 자신의 권력만을 지키고자 한다면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민주주의! 언론자유! 헌정질서를 되찾기 위한 싸움에 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상훈·이종규·박민

20. [성명] 국민 기만 국민의힘 해산하라!

민주주의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 어제(7일) 윤석열은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내란 공범인 “우리 당(국민의힘)”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겠다는 헛소리로 국민의 분노를 키웠다. 국민의힘은 당론을 앞세운 조직적 투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키더니 오늘 한덕수-한동훈은 “질서 있는 퇴진”을 언급하며 국민을 우롱하기까지 했다.

대통령 권한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어떻게 위임이 가능하며 정국을 수습하겠다는 것인가?

다시 한번 말한다. “질서 있는 퇴진”이란 없다. 당신들은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공당이 아닌 내란범과 공동 정범일 뿐이다. 신속한 체포와 수사를 받아야 할 공범들이 어디서 감히 안정적 정국 수습을 위한 책임자로 나서겠다는 말을 언급하는가? 권력 연장에 대한 비열한 야욕을, 허울좋은 말로 치장하는 윤석열을 탄핵하고, 공동 정범 국민의힘은 당장 해산하라!

어제의 탄핵 부결은 무너진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의 첫 시작일 뿐이다. 국회는 탄핵 재추진과 함께 계엄령의 위헌, 위법성과 실행 과정의 진상을 드러내기 위한 철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수사당국은 지체없이 수사에 나서 대통령과 공모자들의 증거인멸과 추가 범죄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도와 흐름은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 시민들의 저항은 시작되었고 투쟁은 더 단결될 것이며 내란범 윤석열과 공동 정범들은 반드시 법정 앞에 세워질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투쟁에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나아가겠다.

2024년 12월 8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상훈·이종규·박민

2024년 뉴스 피클 발행 목록

일시	제목
2024-01-15(월)	이귀재 교수 위증 자백에 복잡해진 서거석 교육감 재판
2024-01-16(화)	군산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최종 무산, 위기와 재추진 오고갔던 언론 보도 정리
2024-01-17(수)	남원시, 남원테마파크에 일부 손해배상 하라는 판결 나와, 수백억 원 대신 값을 수 있다는 우려도
2024-01-18(목)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 앞두고 갈등 반복, 지역 언론 비판 이어져
2024-01-19(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관련 보도 속 엇갈린 강성희 의원 강제 퇴장 보도
2024-01-22(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특구 지정 특례, 개발 기대감과 우려의 목소리
2024-01-23(화)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사업 시행사 (주)자광홀딩스, 부지 매각 대금 못 내 사업 추진 미지수
2024-01-24(수)	일방적 추진 발언에 반발 불러온 전주-완주 통합론
2024-01-25(목)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수의계약 비율은 얼마나 될까?
2024-01-26(금)	지방의회가 국회의원 공천 경쟁 대리전? 지방의회 역할은 어디에?
2024-01-29(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지역 언론 보도는?
2024-01-30(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부실 회계 관리, 조직위원장 마음대로 수의계약 드러나
2024-01-31(수)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에 이어지는 비판 여론
2024-02-01(목)	21대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공약 얼마나 지켰을까?
2024-02-02(금)	50년 후 전북특별자치도는? 점차 사라지는 유치원·어린이집·학교
2024-02-05(월)	학령인구 감소, 작은 학교 살리기 대안 농촌유학? 정책 효과 냉철한 고민 필요해
2024-02-06(화)	전북특별자치도 됐으니 지역 발전할까? 문제는 예산 확보
2024-02-07(수)	내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지역 언론들은 지역 의료 정책에 좀 더 주목
2024-02-08(목)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논란 속, 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석연치 않다고 지적한 김제시민의신문
2024-02-13(화)	남원테마파크 관광개발사업 운영중단, '제2의 레고랜드 사태'될까?
2024-02-14(수)	2023 전북사회조사 결과, 지역 언론이 주목한 결과는?
2024-02-15(목)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아파트 분양가 평당 1,490만 원 확정됐지만, 고분양가 논란은 여전히
2024-02-16(금)	새만금 잼버리 대회 후유증은 현재 진행형, 예산 낭비에 참가비 지원 차별 논란까지
2024-02-19(월)	지방소멸대응기금 3년 차, 올해는 제대로 사용할까?
2024-02-20(화)	어려운 경제 상황, 소상공인 위한 공제 제도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규모 역대 최대
2024-02-21(수)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 갈등, 지역 언론들이 집중한 부분 달라
2024-02-22(목)	기존 예비후보 아닌 새로운 인물 포함된 전주을 선거구 의문의 여론조사 논란

2024-02-23(금)	익산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후보 경선 승리, 지역 언론들의 분석은?
2024-02-26(월)	5인 → 4인 → 5인 경선, 혼란스러운 더불어민주당 전주를 선거구 경선
2024-02-27(화)	이번 총선은 기후 위기 대응 선거로 만들자는 움직임, 전북에서는 어떨까?
2024-02-28(수)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협상 시작, 개발 속도 강조한 보도와 실현 가능성 의문 전달한 보도 엇갈려
2024-02-29(목)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영 위기와 노조 파업 예고
2024-03-04(월)	전북자치도 국회의원 선거구 10석 유지됐지만, 일부 부작용 및 갈등 우려
2024-03-05(화)	군산형 일자리 사업 정부 지원 기간 만료, 성과와 아쉬움 정리
2024-03-06(수)	1년여 만에 되풀이 된 전주시 일방적 별목 논란과 갈등
2024-03-07(목)	도내 시외버스 적자 노선 대폭 감축 위기, 결국 손실보전금과 지자체 재정부담이 핵심
2024-03-08(금)	민간투자 받기로 한 전북국제금융센터, 자금확보 어려움 겪고 있다는 지적 나와
2024-03-11(월)	의대 정원 확대 갈등, 도내 의과대학 교육 현장까지 확산
2024-03-12(화)	공중보건 의사·군의원 상급종합병원 투입에 지역 의료 역공백 현상 우려
2024-03-13(수)	선거 앞두고 정책, 여성, 청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전북 지역 언론들의 지적 이어져
2024-03-14(목)	도내 학생 학력평가 횡수 크게 늘어, 학력 신장과 과열 경쟁 논란
2024-03-15(금)	전북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분석, 중진 정치인 강조와 정치 신인 부족하다는 비판 엇갈려
2024-03-19(화)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에 쏟아진 지역 언론들의 비판, 전북 비례후보 한 명도 없어
2024-03-20(수)	농축산물 물가 상승, 이상기후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2024-03-21(목)	이차전지 폐수 관리 방안 찾는 전북자치도, 배출 기준과 관리·감독 방법 주목 필요해
2024-03-22(금)	전주 시내버스 부분 파업, 파업 장기화 우려 목소리도
2024-03-25(월)	전북 지역 언론들의 제22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결과 분석 정리
2024-03-26(화)	JTV전주방송 최대주주 변경 신청, 주목해야 하는 이유
2024-03-27(수)	도내 의대 교수들 사직서 제출 시작, 양오봉 전북대 총장 일방적 소통 역효과라는 지적
2024-03-28(목)	전주시 전주천·삼천 명품 하천 프로젝트 계획 발표 이후 백지화, 하천법 위반 주장 나와
2024-03-29(금)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후보 KBS 토론회 보이콧 논란, 논란과 별개로 비판 이어지는 이유는?
2024-04-01(월)	제22대 총선 선거 기간 혐오 표현 감시하는 시민사회 활동 시작, 언론의 역할은 없을까?
2024-04-02(화)	전문가들이 선정한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 1위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 그 외에 전북 관련 사업은?
2024-04-03(수)	전북대학교 교수 채용 논란, 문제 제기 계속 이어져
2024-04-04(목)	비판 기사로 광고비 달라 협박한 의혹 기자 징역 3년 구형, 공무원 노

	조 환영 의사 밝혀
2024-04-05(금)	이번에도 국회의원 선거에 묻힌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책임은 어디에?
2024-04-08(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북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에 대한 해석 신중해야
2024-04-11(목)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북 지역 언론 분석과 주목할 점 살펴보기
2024-04-12(금)	수상한 부안군 터미널 인근 주차장 부지 매입 특혜 의혹, 부안군은 부안독립신문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2024-04-15(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안 주민 설명회 앞두고, (주)자광 재정 문제 심각하다는 지적 나와
2024-04-16(화)	제22대 총선 전북 지역 경제 공약, 재원 확보 불투명하다는 지적 나와
2024-04-17(수)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 11명 부당해고 판정 나왔지만...
2024-04-18(목)	군산 은파호수공원 테라스하우스 건폐율 완화 특혜 의혹, 난개발 논란도
2024-04-19(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됐지만 올해도 노동자 사망사고 반복
2024-04-23(화)	한빛원전 1·2호기 가동 기간 연장 추진 논란 계속되는 이유
2024-04-24(수)	새만금 잼버리 대회 문제는 한국 정부 주도 때문? 세계스카우트연맹 보고서 파장
2024-04-25(목)	전북자치도의회, 전주시의회 연이은 해외연수에 비판 목소리
2024-04-26(금)	익산시 언론인과 공무원의 결탁, 그리고 인사 청탁 논란
2024-04-29(월)	전주농협 100억 원대 대출 목적은 에코시티 인근 부동산 투기? 내부 임직원 연관 의혹도
2024-05-02(목)	위증 혐의 이귀재 교수 재판 파장 커지는데, 다수 지역 일간 신문은 보도 없어
2024-05-03(금)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수사 정치권까지,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 단지 될 것이라던 전망은 어디에?
2024-05-07(화)	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 투표 서명부 이의신청 많아, 실시 여부 미지수 전망
2024-05-08(수)	군산 화학 공장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 지난해에 이어 또 발생. 대책은?
2024-05-09(목)	위기의 전북 경제 상황 지적인 지역 언론 보도 모음
2024-05-10(금)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용지 적절성 논란
2024-05-13(월)	2023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각 시·군 공약 이행 평가는?
2024-05-14(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준비 상황과 우려되는 점 정리
2024-05-16(목)	세아베스틸 대표 구속영장 기각, 노동계 반발과 비판 이어져
2024-05-17(금)	계절 노동자 브로커 폐해 막기 위한 대책, 장기적인 정착 정책도 필요해
2024-05-21(화)	전북발전을 위한 재도약 원탁회의, 의미와 함께 한계 지적인 지역 언론
2024-05-22(수)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 긍정적 평가한 전북일보, 전라일보. 행정구역 통합 의제 강조
2024-05-23(목)	전북특별자치도청 직원 잇단 사망과 갑질 논란까지
2024-05-24(금)	군산시의회와 군산시립예술단 갈등, 지역 언론들도 쟁점보다 갈등 상황에 초점 맞춰
2024-05-27(월)	갑질 논란 속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역할 의문이라는 보도 나와
2024-05-28(화)	전북대학교 의대 입학 정원 학칙 개정안 가결, 갈등 속 일부에서는 '전

	북 유학 시대' 전망
2024-05-29(수)	비판 기사로 광고비 달라 협박한 임실 인터넷 신문 발행인 징역 1년 법정구속
2024-05-30(목)	(주)명신 사업 변경에 군산형 일자리 지속 가능성 의문
2024-05-31(금)	시공사 자금난으로 전주시 육상경기장·야구장 착공 중단, 도내 실적 1위 계성건설 우려 이어져
2024-06-03(월)	전북특별자치도청 대변인실 갑질 논란 원인은 지역 언론 광고비 때문? 철저한 감사와 해명 필요해
2024-06-04(화)	허점투성이 한국어능력시험, 암표상에 대리시험 의혹까지. 시험 공신력 의문 제기한 전라일보
2024-06-05(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폭·교권 전담 변호사 채용 늘린다 밝혔지만...
2024-06-07(금)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 '표적 감사'로 볼 수 있을까?
2024-06-10(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서류 위조, 거짓 진술 의혹, 서예비엔날레관 건립 사업 용역도 의문 제기
2024-06-11(화)	22대 전북 국회의원 상임위 배정 두고 엇갈린 지역 언론 평가
2024-06-12(수)	자극적 영상 노출에 초등학생 악마화, 교육계 자성 목소리 이어져. 지역 언론들도 폭행 사진, 영상 반복 노출
2024-06-14(금)	전북도 지진 안전 지대 아니다. 불안 지진 피해, 대응 지역 언론 관련 보도 이어져
2024-06-17(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운영 문제 연이어 나와, 날인 없는 언론사 광고 계약도 문제
2024-06-18(화)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사고 후 치료받던 1명 사망, 전주시 책임론 더 커지나?
2024-06-19(수)	전주 공원지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일부 난개발 우려 목소리
2024-06-20(목)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공공기여금 산정 논란, 특혜라는 주장 이어져
2024-06-21(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출범, 위원회 난립과 서거석 교육감 보은 인사 논란
2024-06-24(월)	전주시 드론 축구 관련 사업 띄우는 가운데, 대한드론축구협회 수천만원 뒷거래와 비자금 은닉 폭로 나와
2024-06-25(화)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청년 노동자 사망, 진상규명 목소리
2024-06-26(수)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에 이차전지 특구 전북도 안전 대책 마련 필요하다는 보도 이어져
2024-06-27(목)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정상화 공동대책위 출범, 국정감사 증인 세우기 위한 서명 운동 시작
2024-06-28(금)	전북특별자치도의의회 후반기 원구성 마무리 단계, 일부에서 더불어민주당 비판 나와
2024-07-01(월)	익산시 광역상수도 전환 재추진 갈등,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정헌율 시장 발언도 논란
2024-07-02(화)	유희태 완주군수, 행정구역 통합보다 경제적 연합 강조. 전주와 완주에 익산까지 포함시켜 상생 협력 주장
2024-07-03(수)	전북자치도 외부 홍보업체 특혜 의혹 사실로 드러났는데... 꼬리 자르기 논란

2024-07-04(목)	우범기 전주시장, '불통' 지적 속 개발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시민사회 비판 이어져
2024-07-05(금)	엇갈린 서거석 교육감 취임 2년 평가, 이유는?
2024-07-08(월)	유독가스 없다더니... 청년 노동자 사망한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황화수소 미량 검출
2024-07-09(화)	강임준 군산시장 2주년 기자회견, 신산업 육성 계획 밝혔지만 재정 부담 문제 지적도. 검찰 수사도 지켜봐야
2024-07-10(수)	황화수소 검출된 전주페이퍼 공장, 검출량 축소 논란 이어져
2024-07-11(목)	창단 준비 중인 전주시 배드민턴팀, 부실 운영 우려와 감독 선임 논란 정리
2024-07-12(금)	기록적인 폭우에 지난해에 이어 수해 피해 반복, 지방자치단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2024-07-15(월)	전주시 드론 축구 5만 대 수출 부풀리기 지적, 실제로는 수백 대 그쳐
2024-07-16(화)	설립자 횡령, 채용 비리 적발됐던 완산학원. 인사위원회 권한 축소 추진에 과거 회귀 우려
2024-07-17(수)	김관영 도지사 광역단체장 직무평가 전국 1위 홍보 속, 전북 기업유치 실적 과대 포장 됐다는 지적 나와
2024-07-18(목)	해상풍력 전기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정읍-계룡 송전선로 추진, 주민 반발 이어져
2024-07-19(금)	윤준병 의원, 수해 피해 발생한 상황에서 지역 기자들과 술자리 간담회 논란
2024-07-22(월)	새만금 잼버리 대회 이후에도 계속되는 예산 논란
2024-07-23(화)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언론사 기고 칼럼 무단 표절 논란
2024-07-24(수)	전주, 완주 통합하면 특례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김관영 도지사. 법적, 정치적 해결 과제 많아
2024-07-26(금)	전국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공식 통계 나왔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적어
2024-08-05(월)	전북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개인정보 유출에 지역 언론들 비판 이어져
2024-08-06(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저조한 이유 분석한 지역 언론, 교통 환경 열악해
2024-08-07(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언론인 출신 대변인 결정 논란. 교육 전문성도 의문 나와
2024-08-08(목)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사고 원인 메탄가스, 왜 발생했나?
2024-08-09(금)	이스타항공, 재운항 1년도 안 돼 군산공항 노선 중단 검토 논란
2024-08-12(월)	연구비 유용 의혹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 사기 혐의로 구속
2024-08-13(화)	각종 경제 지표 더 안 좋아진 전북, 앞으로 전망도 좋지 않아
2024-08-14(수)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 11명 부당해고 아니란 판단에 반발 이어져
2024-08-16(금)	도내 어민들, 이차전지 폐수 바다 방류 반대 집회. 이차전지 폐수 환경 기준 미흡
2024-08-19(월)	2023년도 전북자치도 언론사 홍보비 천차만별 지적 나와
2024-08-20(화)	지역 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하는 지역 언론들, 전공의 모집 저조에 공공의료원 적자 계속
2024-08-21(수)	전주시 드론산업과 드론축구월드컵 현재 상황은? 전주시 과도한 예산 지원 지적한 전주MBC

2024-08-22(목)	청년 농업인 올린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 하자 문제로 제대로 운영 못 해
2024-08-23(금)	'독소조항' 주장했지만 남원 테마파크 운영 중단 손해배상 소송 패소한 남원시
2024-08-26(월)	부안군 관광복지국 축제팀 공무원들, 이탈리아 외유성 출장 지적 나와
2024-08-27(화)	관계 기관 해명과 대응에도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하자 문제 보도 계속 이어져
2024-08-28(수)	직원 폭행 순정축협 조합장,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 받았지만 직위는 그대로 유지해
2024-08-30(금)	전직 익산시의원들 간 새마을금고 짬짜미 대출 의혹, 일부 사실로 드러나
2024-09-02(월)	8월부터 바뀐 전주시 쓰레기 수거 방식에 민원 이어져, 인력·차량 부족 원인이라는 주장 나와
2024-09-03(화)	전북 지역 새마을금고 부실자산 비율 전국에서 가장 높아. 지역 언론 우려의 목소리
2024-09-04(수)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감정 평가 논란 속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업용지 변경 의견청취안 통과
2024-09-09(월)	KCC 전주2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작업 환경 개선 요구에 점검 필요해
2024-09-10(화)	재외동포청 한인비즈니스대회 현장 점검에 준비에 대한 언론 보도 잇갈려
2024-09-11(수)	전북국제금융센터 계획 대폭 축소, 자금 확보, 사업성 우려 현실 되나?
2024-09-12(목)	전주-완주 12차 상생 협약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
2024-09-13(금)	언론사 기자 검직하던 전주시민축구단 단장, 배임·횡령 혐의로 수사 받던 중 사망
2024-09-19(목)	세입보다 세출 더 크게 증가, 교부세 감소에 도내 지방자치단체 재정난 장기화 예상
2024-09-20(금)	계속 생겨나는 송전선로 건설 계획, 잘 알려지지 않아
2024-09-23(월)	새만금 국제공항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 파행과 활주로 길이 논쟁
2024-09-24(화)	10월 개선 공사 완공 앞둔 전주시 충경로 보행자 안전 문제 지적, 예전부터 공사 불편 문제 이어져
2024-09-25(수)	산지 쌀값 하락, 폭우, 버벌구까지... 농민 삼중고 피해 보도 이어져
2024-09-26(목)	후백제역사문화센터 전주 유치, 고도(古都) 지정 여부 핵심인데 일부 주민 설득 필요해
2024-09-27(금)	논란 됐던 송전탑 아래 김제시 선암자연휴양림, 완공 후 운영 문제 지적 나와
2024-10-02(수)	전주시 팔복동에 또 고형연료(SRF) 소각시설 논란, 갈등 반복 막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필요해
2024-10-04(금)	정부 예산 지원 중단? 고등학교 무상교육 차질 우려
2024-10-07(월)	빈 건물 대부분인 전주 선미촌, 아파트 개발 사업 추진을 바라보는 두 시각
2024-10-08(화)	전북특별자치도 중국사무소 성과와 부소장 채용 문제 지적, 지역 일간지 편집국장 경력이 중국 통상 전문가?
2024-10-10(목)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국정감사. 정상화 약속 강조와 책임 회피 지적으로 언론 보도 잇갈려

2024-10-11(금)	전주시 팔복동 고행연료 사용 신청 불허한 전주시에 향후 법적 다툼 예고
2024-10-14(월)	새만금 방조제 번갈아 열어도 여전히 수질 개선 안 됐다는 보고서 나와
2024-10-15(화)	새만금 관련 국정감사 지역 언론 주목 속에 새만금 농경지에 정체 모를 오염물질 살포 지적 나와
2024-10-16(수)	전북도 대변인실 언론사 광고비 부정 지급 의혹 일부 사실로 드러나, 한계 지적도
2024-10-17(목)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경쟁 정치권으로 확대되면서 과열, 전북-충남 지역 언론 보도 비교
2024-10-18(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정감사, 갑질 의혹 사립학교와 외유성 해외 연수 지적
2024-10-21(월)	PF대출 금액 갚으라는 요구에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파행 위기?
2024-10-23(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외유성 해외 연수 원인 분석 보도 나와, 임기제 공무원 부적절 채용도 논란
2024-10-24(목)	전북배드민턴협회 행정 실수로 전국체전 선수 실격패, 대회 기간 중 외유성 출장 의혹까지
2024-10-25(금)	한인비즈니스대회 지역 언론들 긍정적 평가 이어져, 후속 대처는?
2024-10-28(월)	동료 의원 폭행, 공무원 향한 막말. 비판 대상된 군산시의회
2024-10-29(화)	합의했다며 허가 연장했지만 갈등 계속되는 완주군 고산면 석산, 주민 암 발생률 살펴봐야
2024-10-30(수)	2조 원 투자 자랑했던 SK컨소시엄 새만금 투자 '사실상 좌초' 우려까지
2024-10-31(목)	영화 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 밝힌 전주시. 자원 마련은 어떻게?
2024-11-01(금)	전주시립미술관 기부채납 의사 밝힌 (주)자광, 계획 밝힌 시점 의문
2024-11-04(월)	익산시 신청사 건립비용, 결국 빚으로? 재정 부담 우려 현실로 다가와
2024-11-05(화)	우수 관광정책 선정된 전주 아중호수 관광명소화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동?
2024-11-06(수)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 위기설 반박한 (주)자광, 롯데건설과의 관계는?
2024-11-07(목)	전북자치도청 고위 공무원들 잇단 일탈, 김관영 도지사 인사 검증 부실 비판까지
2024-11-08(금)	관리 부실, 성과 평가 없는 전북자치도 중국사무소
2024-11-11(월)	예산 7% 늘렸지만, 지난해에 이어 지방채 연속 발행한 전북자치도
2024-11-12(화)	전북자치도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 광고비 집행 기준 부족, 연간 계획 없어
2024-11-13(수)	김제 특장차 공장에서 노동자 끼임 사고, 미등록 이주 아동 현실 주목한 언론 보도
2024-11-14(목)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올림픽 유치 도전? 도의회 모르게 준비에 경쟁력 의문 목소리
2024-11-15(금)	전북자치도청 간부 아들 업체에 업무추진비 몰아 쓴 사실 추가로 드러나, 방지 시스템 부족 지적
2024-11-21(목)	논란의 전북자치도 중국사무소, 이번에는 수출 성과 부풀리기 의혹
2024-11-22(금)	전북자치도-한국전력공사 업무협약. 송전선로 피해 주민 불안감 고려했나 비판나와

2024-11-25(월)	신문용지 가격 담합 제지 3사 과징금 305억 원 부과, 전주페이퍼는 검찰 고발까지
2024-11-26(화)	'의회 경시' 행정 질타 이전에 지방의회 스스로 역량 키워야 한다는 지적 이어져
2024-11-28(목)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전주시민축구단 민원, 시의회가 외면했다는 지적 나와
2024-11-29(금)	군산 선유도 짚라인 전 운영업체 비위 의혹, 군산시의원, 어촌계, 공무원 모두 의혹의 대상
2024-12-02(월)	아들 한약국에 업무추진비 사용한 도청 고위 공무원 해임, 업무추진비 논란 왜 반복되나?
2024-12-03(화)	내년 전북자치도 언론 홍보 예산안 심사 과정, 어떤 내용 지적됐을까?
2024-12-04(수)	밤새 혼란스러웠던 비상계엄 선포, 언론시민사회, 현업단체 대통령 사퇴 성명 이어져
2024-12-05(목)	비상계엄 해제 후에도 계속되는 보도, 지역 언론들은 어디에 주목했을까?
2024-12-06(금)	탄핵 정국 속 전북 지역 현안과 예산확보 우려 나타낸 전북 지역 언론
2024-12-09(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정족수 미달로 개표조차 못해, 지역 사회 비판 이어져
2024-12-10(화)	전주시 내년 지방채 1520억 원 발행 예정, 채무 부담 점점 늘어나는 전주시
2024-12-11(수)	호남 유일 국민의힘 소속 조배숙 의원에게 쏟아지는 비판
2024-12-12(목)	비상 계엄, 탄핵 정국 속에 전북 민생경제 타격 우려
2024-12-13(금)	일부 군산시의원 막말에 성희롱까지. 군산시의회 자정 능력 없나?
2024-12-16(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전망은?
2024-12-17(화)	특장차 공장 산재 사망 이주 노동자 강태완 씨, 한 달 만에 장례식 진행
2024-12-18(수)	탄핵 정국 속에서 전주, 완주 통합 논의가 주목받는 이유
2024-12-20(금)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의 안타까운 사망, 직장 내 괴롭힘 정황 나와. 학교 행정실 직원 근무 환경도 주목 필요해
2024-12-23(월)	지난해 전북 경제 마이너스 성장, 주요 경제 지표 최하위권
2024-12-24(화)	전화 대신 실시간 단말기로 환자 수용 여부 확인, 새로운 응급환자 이송 체계 기대감
2024-12-26(목)	군산형 일자리 사업 추락 계속, 사후 지원에도 업체들 떠나나?
2024-12-27(금)	송전선로 갈등 속 입지 선정 과정에 하자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 나와
2024-12-30(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일부 지역 언론들 부정확한 도민 희생자 수 보도로 혼란
2024-12-31(화)	전주시와 (주)자광 7년 만에 협약 맺고 3800여억 원 환원하기로. 변수는 남아 있어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 구성 현황

※ 2025년 2월 17일 기준

1) 가입 시기

가입 시기	2024 회원 수(명)	2023 회원 수(명)	2022 회원 수(명)
20년 이상 회원	70 (12.9%)	52 (10.3%)	38 (7.5%)
10년 이상 회원	209 (38.6%)	174 (34.5%)	161 (31.6%)
1년~10년 미만 회원	263 (48.5%)	279 (55.2%)	293 (57.5%)
알 수 없음	-	-	18 (3.5%)
합계	542 (100%)	505 (100%)	510 (100%)

2) 성별

성별	2024 회원 수(명)	2023 회원 수(명)	2022 회원 수(명)
남성	409 (75.5%)	383 (75.8%)	393 (77.1%)
여성	129 (23.8%)	114 (22.6%)	111 (21.8%)
법인·단체	4 (0.7%)	3 (0.6%)	-
알 수 없음	0	5 (1.0%)	6 (1.1%)
합계	542 (100%)	505 (100%)	510 (100%)

3) 연령대

연령대	2024 회원 수(명)	2023 회원 수(명)	2022 회원 수(명)
40년대 생	1 (0.2%)	1 (0.2%)	1 (0.2%)
50년대 생	21 (3.9%)	22 (4.3%)	24 (4.7%)
60년대 생	165 (30.4%)	164 (32.5%)	171 (33.5%)
70년대 생	255 (47.0%)	233 (46.1%)	233 (45.7%)
80년대 생	80 (14.8%)	70 (13.9%)	68 (13.3%)
90년대 생	11 (2.0%)	10 (2.0%)	11 (2.2%)
2000년대 생 이후	3 (0.6%)	1 (0.2%)	
법인·단체	5 (0.9%)	3 (0.6%)	-
알 수 없음	1 (0.2%)	1 (0.2%)	2 (0.4%)
합계	542 (100%)	505 (100%)	510 (100%)

4) 회원증감 현황

신규 후원	재가입	회비 증액	회비 감액	탈퇴, 해지	장기미납 해지처리	종합
68명, 781,000원	15명, 200,000원	12명, 213,000원	2명, 30,000원	- 30명, -380,000원	-10명, -103,000원	+41명, +722,000원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조직 구성 현황

※ 2025년 2월 기준

▶ 제12기 공동대표

공동대표	연임	이상훈	2022. 03. ~ 2026. 02. 공동대표
	연임	이종규	2014. 03. ~ 2026. 02. 공동대표
	신임	박민	2024. 03. ~ 2026. 02. 공동대표

▶ 제12기 이사회

임원	김은규	정책위원장
	유길상	재정위원장
	정무영	조직위원장
		미디어이용자권익위원장
	고영준	미디어교육위원장
	오청균	미디어위원장
	최성은	미디어포럼 분과장
	한지연	영상 분과장
	손주화	사무처장
이사	김병직	
	이만제	
	김재호	
	이은영	
	유창엽	
	김민지	소식지편집 소위원회(장)
	김영근	신임
	정우주	신임
	이평강	신임

▶ 감사

감사	신임	여민영	2024. 02. ~ 2026. 02.
	신임	최태호	2024. 02. ~ 2026. 02.

▶ 사무처

사무처장	손주화	2014년 ~ 2023년 사무처장
팀장	조재익	2017년 ~ 2023년 간사/ 2024년 팀장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룡6길 6-1(5층)
홈페이지 malhara.or.kr 문의 063-285-8572
페이스북 페이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